2006 **MOCIE** Sustainability Report

2006 산업자원부 지속가능보고서

지속가능한 산업자원정책으로

희망한국을 만들어 갑니다

산업자원부

보고서 개요

본 보고서는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산업을 위한 산업자원부의 정책을 경제 · 환경 · 사회적 관점에서 재조명하였습니다. 또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에 따라 산업자원부의 경제 · 환경 · 사회적 내부 활동에 대한 성과도 함께 공개하였습니다.

보고서 발간목적

산업자원부는 실물경제 주무부처로서 국민, 기업 등 정책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한 정책을 추진하였는지 여부와 정책추진 시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기준에 부합되는 정도를 평가하고 이해관계자에게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지속가능한 국내 산업발전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본 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보고기간

보고기간은 200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입니다. 과거추세 분석 등이 필요한 경우 2004년과 2005년의 활동과 성과에 대해서도 기술하였으며, 특별한 경우 2007년의 활동도 포함하였습니다.

최근 보고연도와 작성 원칙

이번에 발간된 보고서는 산업자원부의 사회적 책임활동과 성과에 대해서 발행하는 최초의 보고서로서 산업자원부가 2006년 발행한 한국형 지속기능경영 가이드라인 BSR(B.E.S.T. Sustanability Reporting)과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의 "Sustainability Reporting Guidelines(G3)"및 "Sector Supplement for pubic agencies Pilot Version 1.0"을 참조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차후 보고계획

차기 보고서는 2007년 성과를 종합하여 2008년에 발행할 예정입니다.

보고 범위 및 보고서 제한 요소

본 보고서는 산업자원부 과천 본청, 무역위원회, 전기위원회, 기술표준원을 대상으로 관련된 활동과 성과를 담고 있습니다. 통화단위는 원화입니다.

검증 및 신뢰성 향상 노력

본 보고서는 별도의 외부기관으로부터 검증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해관계자들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신뢰성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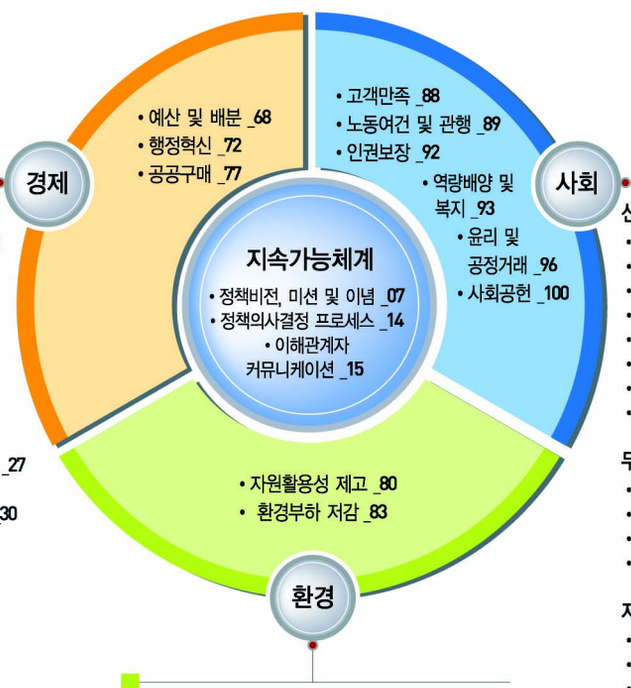
추가정보

본 보고서에 관해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은 분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www.mocie.go.kr
427-723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산업자원부 정책홍보관리본부 혁신기획팀
Tel. 02)2110-5244 / Fax. 02)503-9435
e-mail : woong2@mocie.go.kr

2006 산업자원부 지속가능보고서 주요 내용

본 보고서는 2006년 한해 동안의 산업자원부의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과 연관된 주요 활동의 성과를 담고 있습니다. 보고 방법은 2006년 산업자원부가 개발한 BSR가이드라인과 국제적으로 범용되는 GRI 가이드라인을 따랐습니다. 보고 내용은 일반 민간 기업 · 기관과 같이 일반 내부 활동을 포함하며, 우리나라의 지속가능성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주요 정책들의 성과와 향후 계획도 포함합니다. 하단의 도표는 본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도식화한 것으로서 특히 관심이 있는 부분의 해당 페이지를 찾을 때 활용 가능합니다.



산업정책
- 설비투자 확대 및 내수 활성화 기반 확충 _18
- 기술지원 체계 혁신 _19
- 부품 · 소재 산업 육성 _20
- 주력산업의 글로벌 리더십 강화 _21
- 미래성장동력 산업 육성 _23
- 국가표준 인증 제도의 통합 · 정비 _24
- 기업 규제 개혁 _26

무역 · 투자 정책
- 산업강국 견인형 신무역지원체계 구축 _27
- 외국인 투자의 전략적 유치 _28
- 해외시장 확대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 _30
- 기업의 글로벌 경영지원 강화 _31

자원 · 에너지 정책
- 에너지자원의 자주개발 역량 확충 _32
- 에너지 안정적 공급기반 조성 _33

산업정책
-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추진을 통한 고용창출기반 확충 _50
- 대 · 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 _51
- 중소 · 영세업자 경영 활성화 _52
- 산업기술인력 양성 _53
- 지역균형 개발 _54
- 고령화 및 웰빙친화 산업 육성 _55
- 노사관계 안정 _56
- 안전관리 강화 _57

무역 · 투자정책
- 기업의 사회적 책임 _59
- 남북 상생협력의 활성화 _60
-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 정착 _61
- 사이버 안전 _62

자원 · 에너지 정책
- 에너지 복지 _63
- 에너지 안전 _64
- 탄광지역 개발 _66

산업정책
- 환경친화적 산업구조 촉진 _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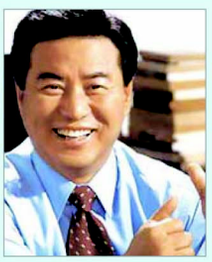
무역 · 투자정책
- 오존층 파괴물질 감축 _37
- 유전자변형물질 관리 강화 _39

자원 · 에너지 정책
- 기후변화 협약 대응체제 강화 _40
- 에너지 소비구조 선진화 _42
- 차세대 친환경 수소경제로의 이행기반 구축 _43
- 유사석유 제품류 단속 유통 근절 _44
- 방폐장 건설 유치지역 지원 _46
- 광해방지 사업추진 _47

목 차

국회 산업자원위원장 서문 _02
산업자원부 장관 메시지 _03
보고서 발행 절차 _04
01. 개요 _05
02. 경제정책 _17
03. 환경정책 _35
04. 사회정책 _49
05. 내부활동 : 경제적 측면 _67
06. 내부활동 : 환경적 측면 _79
07. 내부활동 : 사회적 측면 _87
08. 부록 _103

| 국회 산업자원위원장 서문



산업자원부의 지속가능보고서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산업자원부는 국가경제의 기반이 되는 산업, 무역과 에너지 부문을 이끄는 실물경제의 주무부처입니다. 지난 2006년은 우리나라가 세계 11번째로 수출 3천억 달러를 돌파한 역사적인 한 해였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값진 일은 국가산업의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고, 대중소기업이 상생협력하는 기반이 마련된 것이라 하겠습니다. 양적인 성장에서 한 걸음 나아가 질적인 성장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으로 민생문제 해결의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러나 작금의 상황은 신고유가시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여전히 유가의 고공행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화석연료의 사용으로 인한 기후변화는 전 세계적인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으며, 이에 대처하기 위한 기후변화협약도 국가경제에 큰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이에 당면한 과제 못지않게, 지속가능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사회 구성원 모두의 역할이 중요한 때입니다. 여기에는 정부조직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정부부처로서는 최초로 산업자원부가 지속가능보고서를 발간한다는 점은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하겠습니다.

정부가 나서 국민, 기업 등 정책수요자의 요구에 얼마나 부응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지, 그리고 정책추진시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기준에 얼마나 부합하였는지 등을 점검하면서 상호간에 문제의식을 같이하고 정보를 공유하면서 생산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보다 효율적인 정부가 되는 지름길이라 하겠습니다. 다만 이번 보고서 발간이 일부 기업들과 같이 일회성 이벤트성 행사로 끝나지 않아야 하며, 기존에 각 부문에서 추진되거나 계획되고 있는 정책평가들과는 차별성을 두어 정책이미지를 제고하는데 모두가 협력하고 노력해야 한다는 점 강조하고 싶습니다.

산업자원부는 이미 오래전부터 기업의 지속가능보고서 발간을 독려하기 위하여 국내 기업에 '지속가능보고서 가이드 라인'을 개발한 바 있으며, 지속가능경영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산업자원부가 정부부처 중 가장 먼저 솔선수범하여 지속가능보고서를 발간하고 활동을 투명하게 공개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와 같은 산업자원부의 노력이 각 부처에게도 널리 확대되기를 바라며, 더불어 산자부 뿐만 아니라 모든 정부 조직이 스스로의 지속가능성과 사회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기여를 고민하고 반성하여 혁신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산업자원부의 지속가능보고서 발간을 축하하며, 관심을 갖고 애써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회 산업자원위원장 이 윤성

| 산업자원부 장관 메시지

산업자원부가 정부기관으로는 최초로 지속가능보고서를 발간합니다.

최근 기업활동의 글로벌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기업의 사회에 대한 영향력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을 둘러싼 주주, 소비자, 지역사회, NGO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은 기업에게 경제적 성과뿐만 아니라, 윤리경영, 고객만족경영, 환경경영, 사회공헌 경영 등을 요구하면서 지속가능경영의 중요성이 크게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지속가능경영 관련 정책의 주무부처인 산업자원부는 국내 산업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반영한 '한국형 가이드라인' (BSR)의 세부지표 개발 및 지속가능경영대상 시상 등 국내기업의 지속가능 보고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발전은 새롭고 혁신적인 선택과 사고방식을 요구합니다.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 조직과 정책도 경제적 측면은 물론, 사회적 관계와 환경의 지속성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이에 산업자원부는 지난 2006년 한해 동안 추진한 산업 · 무역 · 자원 정책 뿐만 아니라, 행정혁신, 노동여건 및 관행, 윤리, 자원활용 등 조직 내부활동을 BSR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경제, 환경, 사회 분야별 지표에 따라 정책수요자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분석한 지속가능보고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발간되는 보고서인 만큼 미진한 부분이 없지 않지만, 본 보고서 발간이 산업자원부가 앞으로 더욱 투명하고 신뢰받는 조직으로서 지속가능한 정책수행 노력을 배가하는 한편, 여타 정부부처 및 공기업, 민간기업이 지속가능보고서 발간을 확대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자원부 장관 김영주

보고서 발행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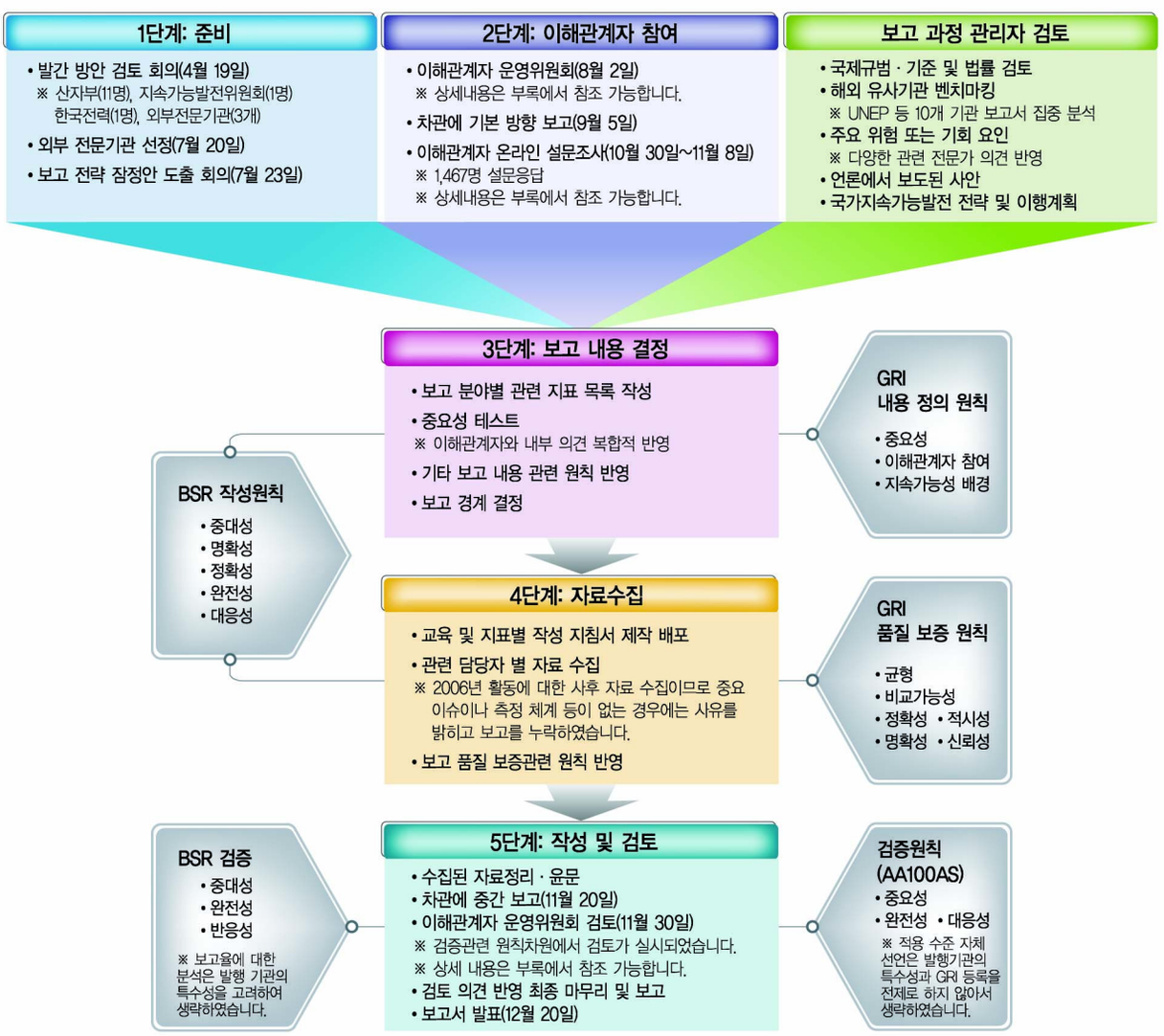
보고 기본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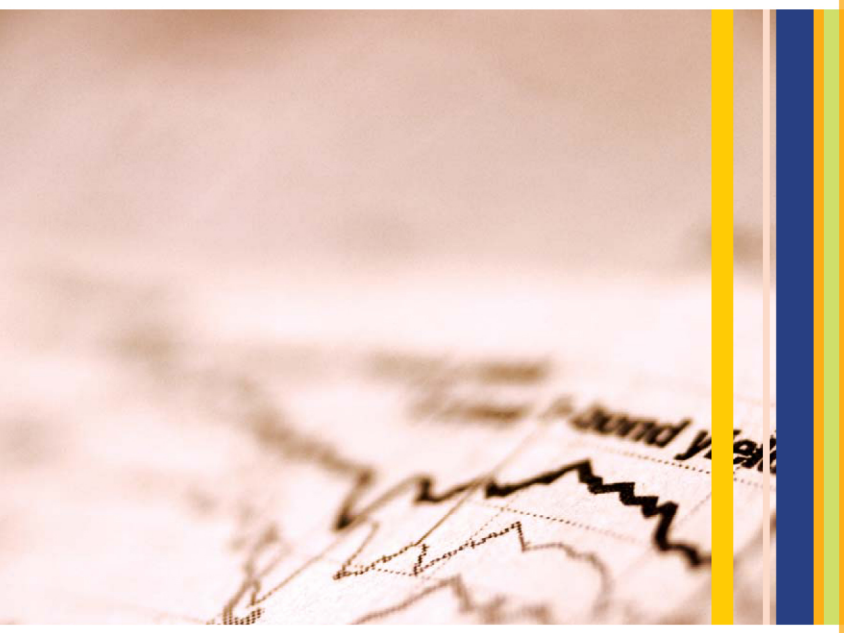
산업자원부는 2006년 경제 · 사회 · 환경적 활동 성과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이해관계자들의 신뢰를 쌓고, 직원과 유관기관에게 동기 부여를 함으로써 지속적으로 내 · 외부 성과향상을 도모하고자 본 보고서를 발행합니다. 이러한 취지를 살리고자 보고서의 발행 절차상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과 산업자원부의 비전과 전략을 복합적으로 검토 반영하였습니다.

중요성(중대성) : 가장 중요한 사안(Issue)을 보고함

산업자원부는 지속가능보고서가 산업자원부의 내 · 외부 성과에 가장 영향을 주고, 이해관계자들의 합리적 관심사항이 반영된 관련 사안(Issue)을 보고하는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보고할 내용을 결정하였습니다.

주요 보고 절차





01

개요 Overview

Ministry of Commerce, Industry and Energy
2006 Sustainability Report

일반현황

기관명	산업자원부
주 소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직원수	1,086명(2006. 12. 31 현직자 기준)
예산규모(2006년 기준)	
	– 예산총액 : 5조 422억원(2007년 이월 금액 포함)
	– 지 출 액 : 5조 22억원

조직 개요

산업자원부는 국가행정기관으로서 법령에 따라 상업·무역·투자·무역진흥·공업·에너지·지하자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주요 기능과 법적 권한범위

산업자원부는 '정부조직법'에 설립 근거를 두고 있으며, 산업자원부 장관은 상업·무역·무역진흥·공업·에너지·지하자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합니다. 그리고 산업자원부 장관 소속하에 중소기업청·특허청을 두고 있습니다. 산업자원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상세 직무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 '산업자원부와 그 소속기관직제'로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설립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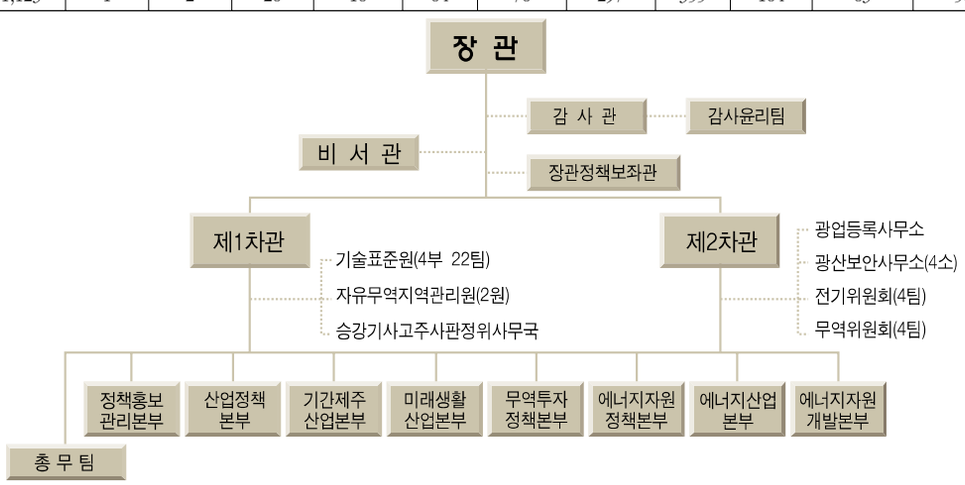
산업자원부의 설립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출의 지속적 증대와 교역의 확대균형을 위한 정책의 수립 시행
2. 외국인 투자의 유치와 외국과의 산업 통상협력증진
3. 에너지절약, 대체에너지, 에너지안전과 국내외 자원개발 정책의 수립 시행
4. 석유, 가스, 전력, 원자력, 석탄 등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확보와 에너지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의 수립 시행
5. 산업의 경쟁력 강화, 유통산업, 서비스업의 선진화, 전자상거래의 확산과 산업의 정보화 촉진 등 미래 지향적 산업발전 정책의 수립 시행
6. 산업의 효율적인 배치와 국가균형발전 전략의 수립
7. 기술개발 이전 및 사업화, 산업표준화, 디자인산업의 육성 등 산업기술정책의 수립 추진
8. 부품 소재, 자동차, 조선, 기계, 철강, 석유화학, 섬유산업 등 주력기간산업의 경쟁력 강화 정책의 수립 시행
9. 반도체, 디지털, 바이오, 신소재산업 등 신 성장산업의 발굴 육성

조직 규모 및 조직도 (2007년 11월 기준)

기구	실(본부)	국(관)	과(팀)	보 좌					소속 기관		
				고공단	3.4급	4급	3.4.5급	4.5급	1차	2차	3차
	8	10	64	26	14	36	-	14	11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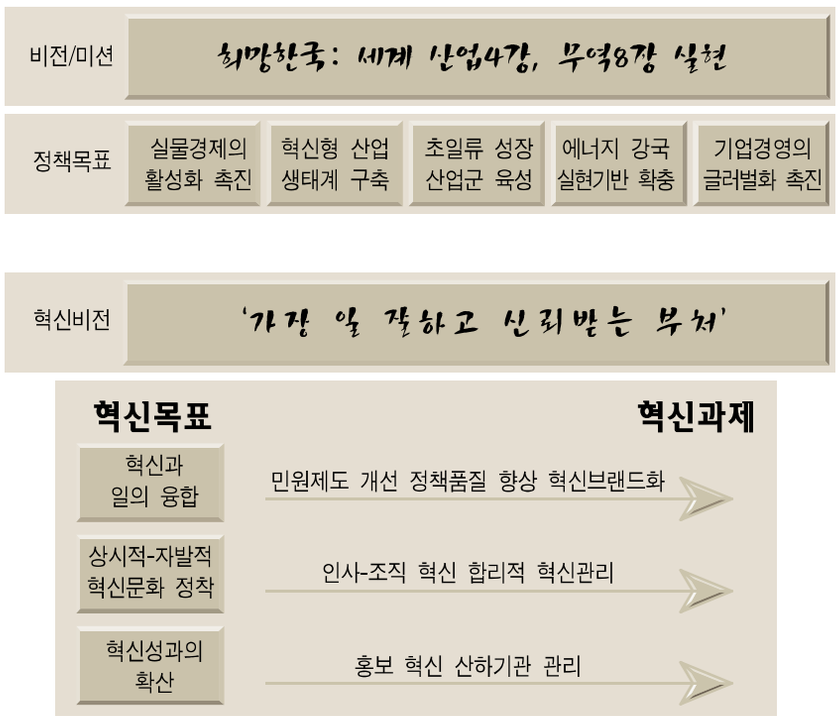
정원	계	정무직		고공단	3.4급	4급	4.5급	5급	6급 이하	기능직	연구직	
		장관급	차관급								연구관	연구사
	1,123	1	2	26	16	64	76	297	355	164	63	56



정책비전, 미션 및 이념

지속적으로 부내 직원들의 혁신역량 제고와 혁신문화 내재화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외부적으로는 국민들이 혁신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는 결과물을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산업자원부 혁신비전 및 전략



산업자원부는 '희망한국: 세계 산업4강, 무역8강 실현'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2006년도에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였습니다. 이러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21개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산업자원부는 국내 산업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정책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과제들을 전략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21세기에는 환경을 고려한 산업계의 경제적 성장 등 과거에 비해 매우 다양하고 통합적인 시각의 산업발전 전략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산업자원부는 기존의 무역정책, 산업정책, 에너지·자원정책의 틀 내에서 다양한 주제들을 포괄하여 이른바 지속가능한 산업발전 전략을 추진하였으며 각각의 개별 정책들에는 그러한 시각과 구체적 목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혁신비전인 '가장 일 잘하고 신뢰받는 부처'로서 산업자원부가 추진하는 주요 정책들이 국내 산업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면 그 정책들은 당연히 '지속가능'하게 될 것이고 이러한 지속가능한 정책을 추진하는 산업자원부의 위상 역시도 지속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일 잘하고 신뢰받는 부처로서의 산업자원부는 바로 이러한 국내 산업계의 지속가능성 제고에 중요하고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데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정책적 성과를 내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의 혁신활동은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이루어졌지만, 크게 ① 전 직원 공감대에 기반한 혁신비전 수립 ② 혁신문화의 내재화를 위한 혁신역량제고 ③ 혁신과제 추진을 통한 실질적 혁신 성과 창출 등으로 요약할 수 있으며, 2006년 혁신추진 실적 및 성과를 다음의 4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혁신리더십

산업자원부는 부처의 혁신환경 SWOT 분석을 통해 혁신비전, 전략 및 혁신 7대과제를 도출하였습니다. 여러 차례 워크샵 등을 통해 2006년도 산업자원부 비전 및 혁신전략을 확정하였고 산업자원부 혁신비전, 3대 혁신전략을 설정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2006년 7월 14일 장관과 본부장은 혁신성과협약식을 체결하였고 이러한 본부별 자발적 혁신과제의 도출 및 실행은 전 직급이 참여하는 혁신과제도출로 자발적 혁신참여를 유도하는 산업자원부의 독특한 혁신추진 시스템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또한 효과적으로 전략을 추진하기 위한 시스템도 구축하였으며 효율적인 조직의 개편과 혁신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간담회 및 커뮤니케이션 제고노력, 교육, 인센티브 등의 다양하고 실질적인 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혁신역량

2006년에도 산업자원부는 부처의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였습니다. 우선, 중간관리층이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솔선수범하였으며 2006년 3월 31일 혁신워크숍에는 과장급 이상 전 간부가 참여하여 산업자원부의 비전 및 전략을 공유하고 구체적 혁신방안에 대한 토론을 벌였습니다. 본부장 주도로 본부별로도 활발한 혁신활동이 벌어졌으며 기술표준원에서는 조직개편 등에 따른 갈등 및 장애극복을 위해 자유대화 형식의 토론회가 실시되었습니다.
산업자원부는 성과관리제도를 보완하고 혁신역량제고를 위한 교육과 혁신동아리 등의 운영을 통해 혁신추진 조직의 체계화 및 역량제고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혁신문화

조직 내에 혁신활동 및 성과가 상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정책에 대한 의사결정시스템을 수평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혁신문화 확산을 위해 각종 경진대회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적인 업무자세를 고취시킬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왔습니다.
장관의 리더십으로부터 도전적인 혁신문화의 확산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국민과 타 부처와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혁신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였습니다.
정책고객별로 대국민 보고회를 개최했을 뿐만 아니라 유명 포털사이트에 산업자원부 블로그를 개설하여 대국민 혁신홍보와 국민의 혁신참여를 확대하였습니다.

혁신성과

우선적으로 혁신적 조직개편을 통해 과거 5단계(과원, 과장, 국장, 1급, 장차관)의 결재단계가 3단계(팀원, 팀장, 본부장·관)로 축소되어 의사결정의 신속성과 유연성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지식관리시스템 및 혁신관리시스템이 개편(2006년 8월)되어 직원의 업무능력 향상에 기여하였으며, 2004년부터 운영되어온 '중소기업 현장체험단'은 참여기관의 확대 등을 통해 행정서비스의 범위를 확대하고 정책의 품질을 제고하였습니다. 기술표준원은 국가표준·인증제도 혁신을 원단위 혁신성과협약 과제로 선정하고 학습동아리 활동을 통해 비용절감, 소요기간 단축 등 행정서비스의 생산성 향상 효과를 보았습니다.

주요 정책영역

산업자원부의 정책 영역은 크게 3가지로서 무역부문, 산업부문, 에너지·자원부문입니다. 최근에는 지속가능 발전의 개념이 반영된 정책 추진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으며, 2006년도 핵심이행과제로 선정된 21개 과제도 이러한 맥락이 반영되었습니다.

2006년도 산업자원부 중점추진 정책 목표 및 이행과제

정책목표	실물경제의 활성화 촉진	혁신형 산업 생태계 구축	초일류 성장 산업군 육성	에너지 강국 실현기반 확충	기업경영의 글러벌화 촉진
	경제활력 전부문 확산	기업여건 1등국가	산업4강 실현	자주공급률 10% 확보	무역 1조불 시대개척
이행과제	설비투자 확대 및 내수활성화 기반확충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의 확산 중소·영세자영업자의 경영 활성화	기술혁신 선순환구조 구축 국가 표준·인증 및 제품 안전관리 체제의 혁신 전문성과 현장성 갖춘 산업인력 양성 지역산업의 혁신역량 강화	주력산업의 글로벌리더십 강화 미래사회 선도형 R&B 산업 기반 확충 차세대 성장동력의 조기 산업화 미래고도소비사회에 대응한 산업기반 강화 디지털기술 융합기반 구축	미래지향적 에너지시스템 구축 에너지 소비구조의 선진화 친환경·수소경제로의 이행 기반 구축 사회적 약자를 위한 에너지 복지 확충	산업강국 견인형 新무역체제 구축 네트워크형 외국인투자의 전략적 유치 통상환경 개선을 통한 글로벌 경영 활성화 해외자원 개발과 에너지 산업 해외진출 확대 남북상생의 산업·지원 협력 기반 구축

산업자원부는 2006년 '희망한국: 세계 산업4강, 무역8강 실현'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5개 정책목표와 21개 이행과제를 도출하였습니다.

상기 그림에도 나타나 있는 이 정책들은 몇 가지 정책여건을 고려하였습니다. 계속되는 원화의 강세와 인접국과의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추세와 고유가 등 에너지 시장의 불확실성의 증대, 대·중소기업 및 제조·서비스업 간 양극화, 에너지기반시설 기피성향과 시민참여요구 증대 등이 산업자원부에서 정책을 입안 추진할 때 고려해야 할 중요한 여건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정책의 수요자인 산업계에서 요구하는 목소리를 반영하여 정책목표와 이행과제를 도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글로벌 경쟁력 제고, 기업투자활성화, 취약부문 활력제고를 핵심과제로 지적
- 신기술·신산업육성, 부품·소재 육성 및 인력/기술/지적재산권 확보 강조
- 국산에너지개발, 에너지 다소비구조 개선, 에너지 효율향상을 고유가 대책으로 지적

또한 산업자원부는 과거 상공부와 동력자원부가 함께 하면서 국내 산업계의 발전에 핵심적인 지원역할을 담당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산업자원부 정책의 영역은 크게 3가지로서 무역부문, 산업부문, 에너지·자원부문입니다. 최근에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산업계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대한 시각이 널리 퍼지면서 기존의 산업자원부 정책도 이에 맞춰 변화하고 있습니다. 날로 중요해지는 에너지·자원정책과 산업정책의 통합적 접근이 그러한 예이며, 산업정책도 단순히 산업 내 정책의 효율성을 고민하는 것뿐 아니라 산업 간 정책의 확대로 지역`간 균형발전과 상생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날로 강화되는 국제환경규제는 국내 산업계의 무역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으며 산업자원부의 정책은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결국 최근에는 산업자원부의 3가지 정책영역은 별도로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관련성에 기반하여 정책의 실질적 성과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통합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2006년도에 핵심이행과제로 선정된 21개의 과제도 그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지속가능발전 이념에 기초를 두고 국내 산업계의 지속가능한 성장, 나아가 국가의 지속가능 발전에 일조할 수 있도록 계획·추진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실물경제의 활성화 촉진: 경제활력 전부문 확산

◇ **설비투자 확대 및 내수활성화 기반 확충**
-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5대 역점과제' 중점 추진
- 중장기적인 투자활성화 방안 수립·추진
- 일자리 확보를 위한 전방위 지원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의 확산**
- 상생협력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틀' 완비
- 상생협력 프로그램의 다원화

◇ **전통중소기업형 업종의 경쟁력 강화 지원**
- 중소 제조기업의 혁신역량 강화
- 중소 유통업체의 경쟁력 강화 지원

혁신형 산업생태계의 구축: 기업여건 1등 국가

◇ **기술혁신 선순환구조 구축**
- R&D 예산(2조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시스템 개편
- 기술사업화를 통한 新사업 진출 촉진
- 지식재산권의 전략적 창출·활용·보호체계 구축
- 민간의 기술혁신 친화적 환경조성

◇ **국가표준·인증 및 제품안전관리 체제의 혁신**
- 국가표준체계의 선진화
- 표준기술 하부구조의 강화
- 민간표준 활성화
- 국제표준화 대응역량 강화
- 입체적인 제품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 **전문성과 현장성을 갖춘 산업인력의 양성**
- 산업계 및 지역의 산업인력 양성기능 활성화
- 기술인력 양성·수급채널 다각화
- 산업계의 수요에 부합되도록 공학교육 혁신

◇ **지역산업의 내실화를 통한 지역산업의 혁신역량 강화**
- 지역전략산업의 허브(Hub)화를 통한 혁신 클러스터 구축
- 지역사업 추진체계 개편을 통한 사업의 효율성 향상
- 지역투자확대 기반구축

초일류 성장산업군의 육성: 산업 4강 실현

◇ 주력산업의 글로벌 리더십 강화
- 자동차 · 조선 · 반도체 등 전략분야 절대우위 확보
- 기계 · 섬유 등 新활력분야는 차별화로 경쟁 우위 확보
- 주력산업과 부품 · 소재의 동반 견인형 선순환 구조 정착

◇ 미래사회선도형 R&B산업 기반확충
- 인간과 공존하는 1가구 1로봇 시대 개막
- 나노기술 경쟁력의 조기 확보 및 산업화 촉진
- 바이오산업(BT)의 수출산업화 기반 확충

◇ 차세대 성장동력의 조기 산업화 촉진
- 핵심 제품기술 개발을 위한 R&D지원 강화
- 개발된 제품의 사업화 촉진

◇ 미래 고도소비사회에 대응한 산업기반 강화
- 지식서비스산업 육성
- 고령화 및 웰빙 친화산업 육성

◇ 디지털기술 융합을 통한 新산업혁명 기반 구축
- 산업의 디지털기술 융합 촉진을 위한 제도 · 인프라 확충
- 가치혁신형 新산업 네트워크 조성
- 산업의 유비쿼터스화 확산 기반 구축

에너지강국 실현기반 확충: 자주공급률 10% 확보

◇ 미래지향적 에너지 시스템 구축
- 에너지 · 자원 중장기 지원체계 구축
- 에너지위기 대응능력 제고
- 수요에 부응한 에너지 공급 능력 확충

◇ 에너지 소비구조의 선진화
- 중장기 에너지효율 향상 대책 추진
- 시장친화적 에너지절약을 위한 저변 확충
- 통합형 에너지 · 자원 기술개발 본격 시행

◇ 차세대 친환경/수소경제로의 이행기반 구축
- 수소경제로의 이행기반 구축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 기후변화협약 대응체제 강화
- 환경친화적인 산업기반 확충

◇ 사회적 약자를 위한 에너지복지 확충
-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체제 구축
- Energy Help Program 추진

기업경영의 글로벌화 촉진: 무역 1조불 시대 개척

◇ 산업강국 견인형 新무역체제 구축
-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무역인프라 조성
- 미래 수출동력의 확충
-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한 해외마케팅 기반강화

◇ 네트워크형 외국인 투자의 전략적 유치
- 新FDI 비전 및 전략적 외자유치체계 구축
- 고부가가치 네트워크형 FDI 중점 유치
- 외국인투자 인프라의 글로벌 스탠다드화

◇ 통상환경 개선을 통한 글로벌경영 활성화
- FTA 등 통상여건 조성을 통한 글로벌 네트워크 지원
- 해외진출기업의 글로벌경영지원 강화
- 정상외교 성과의 후속조치 및 양자 산업협력 강화
- 선진국형 무역구제체제 실현

◇ 해외자원개발과 에너지산업 해외진출 확대
- 자원부국과의 전략적 자원협력 확대
- 유전개발 펀드 등 해외자원개발 지원시스템의 혁신
- 자원개발과 에너지 인프라 동반진출 활성화

◇ 남북상생의 산업 · 자원 협력기반 구축
- 경공업 · 자원개발 연계 수익모델 창출
- 남북 경협 활성화를 위한 에너지협력 기반 구축
- 남북 교역 · 투자 확대기반 마련

2006년도 주요 성과

산업자원부는 2006년 한 해 동안 수출 증대, 고부가가치형 외국인 투자 증대, 대·중소기업 간 상생, 국가균형발전, 기술경쟁력 향상, 고유가 대응 등의 가시적 성과를 거두었으며, 내적으로도 행정 혁신, 친환경상품 구매 확대 등의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주요 정책 성과

2006년 한 해 동안 산업자원부는 ▲실물경제의 활성화 촉진 ▲혁신형 산업생태계의 구축 ▲초일류 성장산업군의 육성 ▲에너지강국 실현기반 확충 ▲기업경영의 글로벌화 촉진 등을 목표로 정책을 입안·추진해 왔습니다. 이러한 정책 추진의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효과적인 정책추진으로 2006년 수출은 두자리수 증가세로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고, 세계에서 11번째로 수출 3천억불을 돌파하였습니다. 전세계적으로 수출규모가 3천억불을 넘는 나라는 미국, 중국, 독일, 일본 등을 포함해서 총 10개국에 불과합니다. 이들 나라들은 중국을 제외하고는 모두 1인당 국민소득(2005년 기준)이 3만불을 넘는 선진국들로서, 우리나라도 국민소득 3만불 시대를 열어나갈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성과였습니다.

둘째, 외국인 투자는 112억불로 전년대비 2.9% 감소하였으나, 작년에 론스타의 탈세혐의에 대한 논란에서 비롯된 반외자 정서 문제,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한 안전성 문제 등이 부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투자가 전년의 추세를 이어갔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내용면에서는 새로이 공장이나 사업장을 설립하는 그린필드형 투자의 비중이 전체 투자의 61.7%까지 높아지고, 부품·소재분야 투자도 전년대비 50.2% 증가하는 등 고부가가치형 투자가 대폭 증가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셋째,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의 기틀을 굳건히 하였습니다. 2005년 점화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제도화하기 위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상생협력의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는 등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30대 그룹의 상생경영투자가 1조 4,307억원으로 2005년대비 40% 가량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넷째, 국가균형발전시책은 지역 내 산업기반을 토대로 지원사업의 추진체계 개편, 지역산업의 혁신역량 제고 및 지역투자 확대기반 구축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지역산업의 혁신성과 확산에 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역의 수출비중이 2002년 60.5%에서 2006년 68%대로 높아지는 등 지역산업정책의 성과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다섯째, 기술경쟁력 향상, 첨단 제품 개발과 고부가가치화 등으로 주력산업의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하는 한편, 체계적인 부품·소재산업 발전전략을 추진하여 우리나라가 부품·소재의 세계적 공급기지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였습니다. 특히, 부품·소재산업은 무역수지 흑자가 2002년 29억불에서 2006년 347억불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그동안 계속 증가하던 부품·소재 대일 적자도 2005년 161억불에서 2006년 156억불로 처음으로 감소했습니다.

끝으로, 고유가에 대응하기 위하여 에너지·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국민생활의 안정과 산업발전을 뒷받침하였고, 세계 각국의 에너지 확보 경쟁에 대응하여 정상외교와 자원부국과 협력을 통해 에너지·자원의 자주공급역량을 높이는 데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참여정부 출범 이후에 88억 배럴을 확보하여 석유·가스 매장량(추정)이 140억 배럴에 달하는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주요 내부 활동 성과

경제적 측면

2006년도 예산 총액 5조 422억원 중 5조 22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특히,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신재생에너지 공급계획을 세우고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사업에 점진적으로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 성과로서 2006년의 신재생에너지 공급률은 2.26%까지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산업자원부는 행정혁신의 일환으로 혁신적 조직개편, 지식관리·혁신관리 시스템 개편, 고객감동센터 발족, 디지털 홍보혁신, 학습동아리 활동, 국가에너지 종합정보DB 구축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환경적 측면

산업자원부는 기후변화대비 및 자원절약활동에 적극 동참하고, 솔선수범을 하고자 다양한 활동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부하 저감을 위한 활동에도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주요 성과는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사회적 측면

산업자원부는 고객 지향적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성과관리고객만족팀을 주축으로 여러 활동들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노동여건과 관련하여서는 5급 공채 여성공무원 임용비율이 41.2%로 상승하였고, 장애인 고용비율도 2.3%(26명)에 달하였습니다. 2006년 1월 28일 시행된 '공무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및 동시행령,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동년 9월 11일에는 행정부공무원노동조합 산업자원부지부의 설립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입대상자 405명 전원이 가입하였습니다. 또한, 부당노동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제보 프로세스 및 구제제도를 정비하였습니다.

2006년 내부 활동 주요 성과 지표

분 야		관련 지표	단위	성 과			비고
				2004년	2005년	2006년	
경제	예산 및 배분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사업 지원액	백만원	58,788	79,370	115,788	
	공공 구매	친환경상품 구매	천원	92,541	470,605	1,414,670	
		장애인제작용품	천원	50,454	95,203	155,434	
		중소기업제품 구매 비율	%	90.7	92.1	96.4	
환경	자원 활용성 제고	용수사용량	m^3	42,119	30,056	29,743	
		직접 에너지 사용량(LNG)	m^3	244,903	235,783	227,740	
		간접 에너지 사용량(전력)	kWh	3,900,625	3,823,859	3,539,801	
	환경 부하 저감	생활폐기물 배출량	ton	70.61	69.01	64.22	
		생활폐기물 재활용율	%	26.2	26.8	26.4	
		온실가스 직접배출량	$tonCO_2$	603.93	581.44	561.60	
		온실가스 간접배출량	$tonCO_2$	1,653.86	1,621.32	1,500.88	
사회	고객 만족	민원서비스만족도	점		60.0	64.7	
	노동여건 및 관행	5급 공채 여성공무원	%	11.8	38.5	41.2	
	역량배양 및 복지	1인당 교육시간	시간/년			74.67	
	윤리 및 공정거래	공공기관 청렴도(10점 만점)	점		8.70	8.96	
	사회공헌	기부금	만원			3,000	

정책 의사결정 프로세스

산업자원부는 국익에 맞는 정책을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의사결정과정에 이해관계자의 의견과 지속가능성 이슈가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사결정권자

산업자원부의 정책수립 및 행정집행의 최종 의사결정권자는 산업자원부 장관입니다. 장관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이 임명하고 통제함으로써 국민의 의견이 의사결정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감독자의 독립성 및 감독 절차

산업자원부의 활동에 대하여는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가 법령상 국정감사권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국회 산업자원위원회는 법률·의안·예산안·결산·기금·청원·진정 등 산업자원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권을 갖습니다. 감사는 년1회 국정감사로 실시되고 임시회도 매월 개최되고 있습니다. 또한, 내부적으로도 독립된 감사관이 있어서 산업자원부 활동 전반에 대한 윤리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이해관계상의 충돌 방지 프로세스

산업자원부는 장관과 전 직원의 공리와 사리의 상충을 방지하고 윤리갈등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행동기준을 산업자원부 훈령으로 제정·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본 보고서의 부록에서 참조 가능합니다.

의사결정의 전문성 제고 절차

주요 의사결정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장관 직속하에 장관정책보좌관을 두고 있으며 다음의 표와 같은 전문위원회를 운영하여 정책의사결정시 경제, 환경, 사회적 위기 및 기회와 관련된 사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위원회는 위촉직 중 여성은 40%이상, 시민단체 인사는 20%이상, 지방인사는 30%이상이 되도록 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각종 위원회 개최 현황

명칭	성격	위원장	개최 현황	위원장포함 위원수 (위촉직)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	심의, 조정	에너지자원개발 본부장	3회	18(10)
광업조정위원회	심의, 조정, 의결	에너지자원개발 본부장	2회	10(8)
전력정책심의회	심의, 조정	권욱현 (서울대 교수)	4회	18(12)
폐광지역개발지원 위원회	심의	에너지자원개발 본부장	1회	18(6)
산업발전심의회	심의, 조정	안상형 (서울대 경영대학장)	2회	30(30)
전자거래정책위원회	심의	제1차관	1회	22(0)
기술이전사업화 정책심의회	심의, 조정	장관	1회	15(5)
미군경용기술위원회	심의, 조정	제1차관	1회	15(10)
특정물질수급조정 심의회	심의, 의결	기간제조산업 본부장	1회	19(13)
공산품안전심의 위원회	심의	제품안전정책 부장	2회	19(14)
산업표준심의회	조사, 심의	최홍건 (한국산업기술 대학교)	337회	473 (420)
이러닝산업발전 위원회	심의, 의결	국무조정실장	1회	20(11)
국가에너지절약추진 위원회	심의, 조정	국무총리	2회	24(7)
국가표준심의회	심의, 조정	국무총리	1회	15(3)
부품·소재발전위원회	심의	국무총리	1회	20(9)
대·중소기업상생협력 위원회	심의, 의결	국무총리, 조동성(서울대 교수)	1회	24(12)
승강기사고조사판정 위원회	심의, 의결	이근오(서울산업대학교 교수)	10회	7(6)
전기위원회	심의,의결,재정	김문환(국민대학교 총장)	12회	9(8)
무역위원회	심의, 의결	박태호(서울대 국제대학원장)	11회	9(8)
광해방지심의위원회	심의	에너지자원정책 본부장	1회	15(10)

이해관계자 커뮤니케이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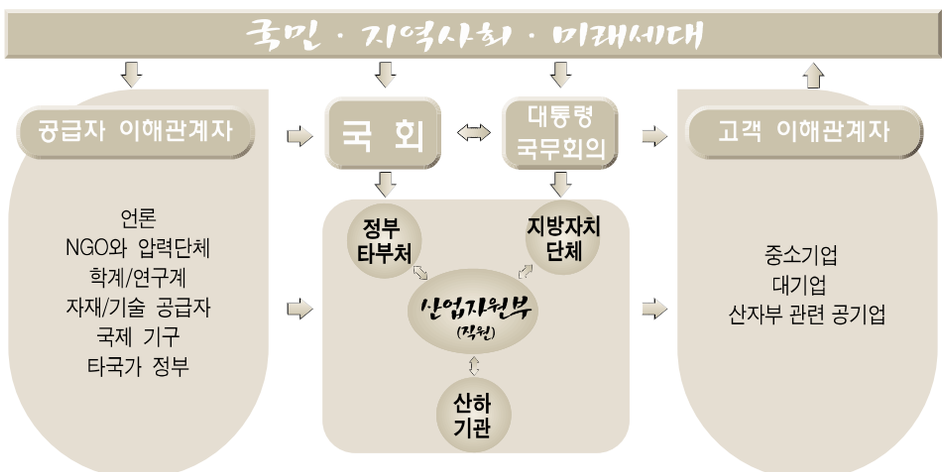
산업자원부는 이해관계자와의 성실한 커뮤니케이션이 장기적으로 산업자원부의 내·외부 성과향상을 가져올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다양한 방법으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의사결정에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산업자원부 이해관계자 정의

산업자원부의 이해관계자는 산업자원부의 활동, 정책 그리고/또는 서비스로 중요하게 영향을 받을 것이라 합리적으로 기대되고 그들의 활동이 합리적으로 산업자원부의 성공적인 전략 실행 및 목적 달성을 위한 능력에 영향을 줄 것이라 기대되는 실체 또는 개인입니다.

산업자원부의 이해관계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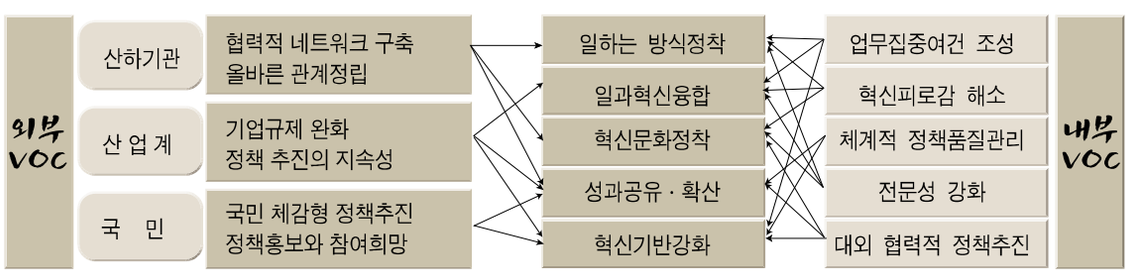
이해관계자는 책임성, 영향력, 접근성, 의존성, 대표성에 따라 선별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적, 재무적 또는 운영상 책임성과 산업자원부에 영향을 받는지 영향을 주는지에 따라 다음 그림과 같이 이해관계자를 그룹화 하였습니다.



이해관계자 참여 제도화

산업자원부는 2006년 6월 대통령령(산업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장관정책보좌관의 직책을 신설함으로써 제도적으로 정책과제와 관련된 전문가·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 등의 국정참여의 촉진과 의견수렴의 체계적인 창구를 명확화 하였습니다.

또한 외부고객과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립하고 지원하기 위해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내부 직원들의 목소리를 청취하여 업무집중여건 조성, 체계적 정책품질관리, 전문성 강화, 국민체감형 정책추진을 위한 행정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이해관계자 참여 방법

No.	이해관계자	참여 활동 예시	보고서 발행 관련 참여	비 고 (운영위원회)
1	기업	• 업종별, 지역별, 규모별(중소기업) 간담회 개최 • 경제단체 및 업종별 단체를 통한 업계의 의견 및 애로사항 건의 • 기업신문고(온라인)를 통한 개별기업의 애로사항 건의 • 중소기업 현장체험단 활동으로 애로사항 파악	운영위원회	(POSCO)
			온라인설문	
2	일반국민	• 정책 주인 찾기(PCRM, 정책주인사랑방) • 고객감동센터를 통한 애로사항 건의 • 산업자원부 홈페이지를 통한 정책 및 애로사항 건의(국민제안, 국민의 소리) • 각종 신고센터를 통한 참여(예산낭비신고, 부조리신고, 친절•불친절신고)	운영위원회	(이병욱 교수)
			온라인설문	
3	언론	• 정책 보도 • 국민, 기업, 교수 및 연구원 등의 의견(opinion) 게재	온라인설문	
4	시민단체	• 한국노총•민주노총 정책간담회 등 간담회 개최 • 각종 전문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 • 정책용역보고서 발간 • 정책 건의서 제출	운영위원회	(기업책임시민센터)
			온라인설문	
5	국회	• 국정 감사 • 법률안 발의 및 심의•의결 • 예산안 및 결산안 심의•의결 • 산업자원부장관 인사청문회	서문, 온라인설문	
6	정부 타부처	• 정책담당자간 상시 업무 협의 • 법률안 및 정책에 대한 의견제시 • 국무조정실을 통한 부처간 업무조정 • 차관회의, 국무회의	온라인 설문	
7	산하기관 (공기업 포함)	• 산하기관과 상시 업무 협의 • 현장 애로사항 및 정책 건의(수시) • 정책용역보고서 발간 • 성과보고서 발간 • 온라인을 통한 참여(산업자원부가족 온라인 혁신나눔터, 온라인사업관리•업무연락시스템)	운영위원회	(한국전력) (상공회의소)
			온라인설문	
8	직원	• 온라인 혁신게시판 상시 모니터링 • 직급별 직원•실무관과 수시간담회 개최	작성 참여 온라인설문	
9	노조	• 노조와 간담회 개최 • 산업자원부 공무원노동조합 홈페이지를 통한 참여	작성 참여 온라인설문	

※ 본 지속가능보고서 발행을 위한 운영위원회 의견과 온라인 설문 결과는 부록에서 참조 가능합니다.

02
경제정책
Economy Policy

설비투자 확대 및 내수활성화 기반 확충

최근 몇 년간 투자위축과 일자리 창출 부진으로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다행히 2005년 하반기 이후 견실한 수출 증가와 소비 회복으로 투자가 점차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 2006년은 이러한 투자회복 불씨가 본격적인 투자로 연결되도록 다음의 '5대 역점과제'를 선정하고 이를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첫째, '투자애로해결 총력지원시스템'을 가동하였습니다. 기업투자애로신고센터, 중기체험단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기업현장의 투자애로를 집중 발굴(530여건)하고, 민·관투자협의회 등을 통해 애로해소(320여건)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둘째, 설비투자, R&D 등 성장잠재력 확충과 관련된 조세지원 제도의 일몰기한을 3년으로 연장하는 등 투자관련 세제, 자금지원을 더욱 강화하였으며, 대·중소 상생협력 및 산학협력 촉진을 위한 세제지원 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셋째, 중소기업의 창업활성화를 위해 최저자본금제도 폐지, 법인 설립 등기 관련 서류 표준화 등 법인·공장 설립 절차를 대폭 간소화 하였고, 한계기업의 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사업전환 중소기업의 법인세 감면 등 조세지원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넷째, 산업단지의 혁신클러스터화 도모와 기업경영지원 기능의 강화를 위해 산업단지 입주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산업단지 소필지화 사업, 임대형 공장건립 등 맞춤형 산업용지 조성 등 입지 관련 및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였습니다.

다섯째, 안정적인 원자재 조달여건 조성을 위해 중소기업의 원자재 구매자금 지원과 조달청의 비축물량을 확대하는 한편, 주요 원자재에 대한 할당관세를 시행하여 수입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새로운 수익모델 개발을 통한 우리 기업들의 안정적인 투자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중장기 투자활성화 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산업발전 단계별 투자유망분야, 설비투자 및 외국인투자 등을 종합 고려한 '10대 주요 산업별 투자전략'을 민·관 공동으로 수립하여 구체적인 투자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

기업가정신 제고를 위한 '기업 기(氣)살리기'도 본격 추진하였습니다. 기업사랑 운동의 전국적 확산, 훌륭한 기업·기업인 발굴, 경제교육의 내실화 등 5대 중점과제를 선정·추진하는 한편, 지속가능경영 자가진단지표 개발·보급, 경제계 윤리경영 선포식 등을 통해 지속가능경영 인식을 제고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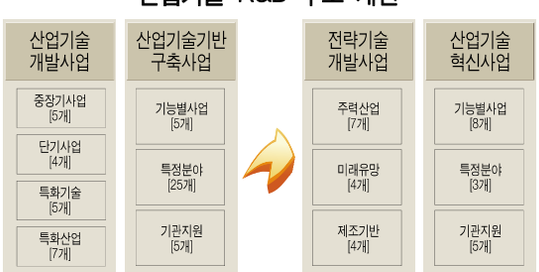
양질의 일자리 확보를 위해 '이공계 석·박사급 연구인력 고용지원사업' 등 수요자인 산업계와 공급자인 대학간의 질적 불균형 해소를 위한 이공계 기술인력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한편, 중소기업 청년채용 패키지 사업 등 청년실업 문제 해소를 위한 취업 연계 프로그램도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기술지원체계 혁신

우리 산업은 지난 수십년간 수출주도형 성장전략으로 급속하게 발전하였으나, 1995년 이후 '1만불 트랩'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잠재성장률이 저하되어 왔습니다. 이에 5% 이상의 잠재성장률 유지를 통한 지속적 경제성을 위해서는 총요소생산성을 증가시키는 기술혁신 전략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R&D 성과 극대화를 위한 체계적인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먼저, 1995년 이후 기술개발과 기반조성 등 이원체제로 이어져 온 산업기술 R&D 지원시스템을 기업 수요에 부응한 15대 전략기술 중심 구조로 전면 개편하고, 복잡·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던 기존 사업들을 통·폐합하여 사업구조를 단순화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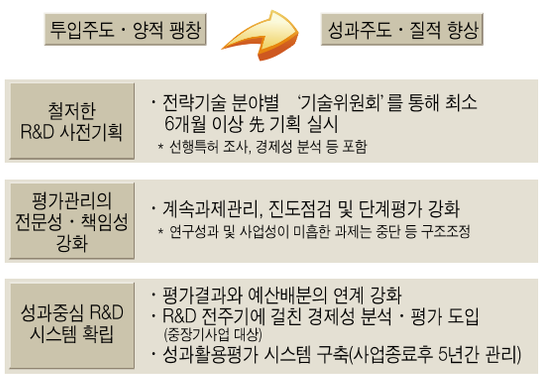
산업기술 R&D 구조 개편



특히 '전략기술개발사업'은 ① 국가기술개발의 우선순위 제시, ② 핵심·원천기술에 대한 집중 지원, ③ 기술개발·기반조성·인력양성·특허·표준 등 기술별 특성에 맞는 패키지 지원, ④ 철저한 사전기획을 통한 국가프로젝트 발굴 등 4대 원칙에 따라 운영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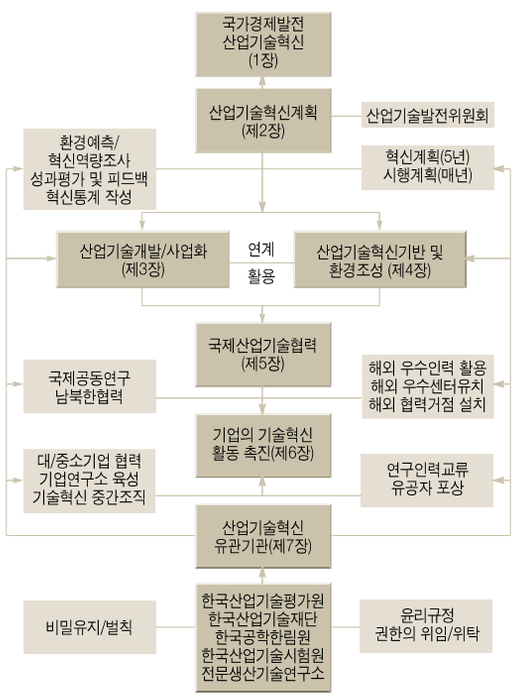
이와 동시에 산업기술 R&D사업의 성과주도 질적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R&D의 기획, 평가, 관리 시스템을 대폭 개선하였습니다. 기술개발과제에 대해 최소 6개월 이상의 사전기획을 통해 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프로젝트를 집중 발굴하고, 과제별 전담평가위원을 지정·운영 등 R&D 평가관리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또한 R&D 전주기에 걸친 경제성 평가를 도입하여 기술의 타당성을 입증토록 하였습니다.

산업기술 R&D 운영시스템 개선



2005~2006년에 걸쳐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을 '산업기술혁신촉진법'으로 전면 개정함으로써 이러한 R&D 지원체제의 혁신적 변화를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술지원체계의 혁신을 발판으로 2007년부터는 전략기술개발사업의 효율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의 체계



부품 · 소재산업 육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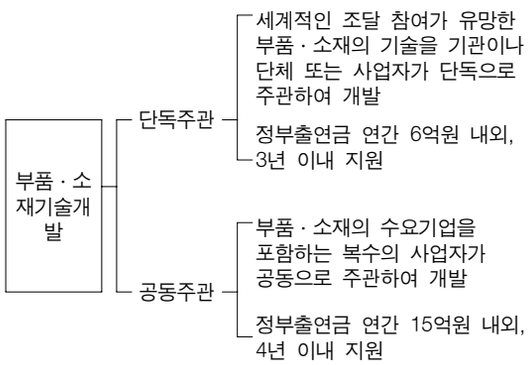
완제품의 조립생산능력이 전 세계적으로 평준화됨에 따라 경쟁력 확보의 패러다임이 부품 · 소재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텔, 보쉬 등 주요 선진국의 거대 다국적 부품기업이 세계 표준을 선점하며 세계 시장의 공급 독점 현상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 ㅇ컴퓨터 CPU:
  intel의 inside-chip이 전 세계 컴퓨터의 80%를 점유
- ㅇ디젤엔진 연료분사장치:
  보쉬, 덴소 등 3개사가 세계시장의 70%를 점유

우리나라는 지난 2001년부터 '부품 · 소재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부품 · 소재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전문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1997년 최초로 부품 · 소재로 무역수지 흑자를 낸 후 2006년에는 전체 무역수지 흑자 161억불의 2배 이상인 347억불을 달성하였습니다. 이제 부품 · 소재산업은 제조업 생산, 고용, 수출의 40% 이상을 차지하면서 우리나라 제조업의 핵심 근간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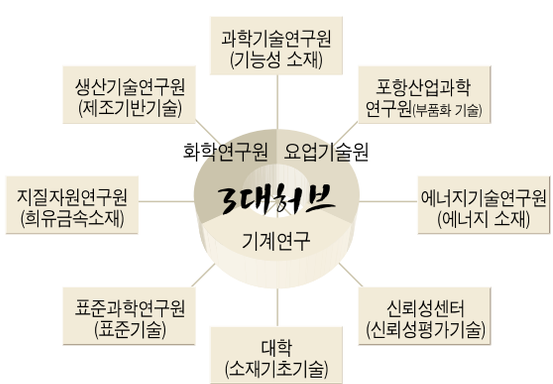
세계와 경쟁할 수 있는 원천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해 부품 · 소재분야의 전략 목표와 지원유형을 차별화하여 기술개발을 추진하였습니다. 중핵기업 후보군 중심으로 모듈단위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수요대기업과 부품 · 소재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성과를 공유하는 수요연계형 기술개발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기술개발을 유형에 따라 단독과제와 공동과제로 분류하여 관리함으로써 과제의 특성에 따라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하였습니다.

산업의 허리를 받치고 있는 부품 · 소재기업의 대형화 · 전문화를 유도하기 위해 M&A 관련 정보 제공, 국내외 기업 알선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부품 · 소재특별조치법'을 개정하였으며, 시장 자율적으로 전문성을 갖춘 부품 · 소재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부품 · 소재투자기관협의회'에 M&A 데스크를 설치하였습니다.



구분	2005년	2006년	우수사례
단독주관	731억원 (신규 39건 329억원)	675억원 (신규 38건 285억원)	해빛정보: 2002년 디지털기기용 광학필터 국산화 개발 성공으로 시장 점유율 획기적 확대(2002년 0% → 2006년 90%)
공동주관	833억원 (신규 17건 316억원)	1,089억원 (신규 16건 205억원	대주전자재료: PDP 격벽재료에 있어 선진국과 동등한 기술수준 (日야마무라社에 이어 세계경쟁력 2위)에 도달

혁신적 소재 인프라 구축을 위해 소재 분야별(금속, 화학, 세라믹) 핵심 연구소를 3대 Hub로 지정하고, 관련 대학과 연구소를 연계하여 국가소재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종합지원시스템을 마련하였습니다.



부품·소재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 세계적인 신뢰성 평가기관을 육성(2006년 285억원)하고 2006년 중에 100여 건의 신뢰성 인증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안산과 부천에 신뢰성 종합기술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중소 부품·소재기업의 R&D 등 혁신창출·지원기능의 집중화를 도모하였습니다.

부품·소재산업의 글로벌 파트너십을 제고하기 위해 유라시아, 중앙아시아(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와 같은 원천기술강국과 국제공동연구를 추진하고, 선진국과는 반도체 IT 등 국내강점분야부터 협력을 추진해 나갔습니다.

또한, 부품·소재산업 인식 확산과 기업인 사기진작을 위해 2006년 12월에 잭웰치, 엘빈토플러 등 국내외 석학을 초청하여 부품·소재 국제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정책을 바탕으로 2007년도에는 건실한 부품·소재산업을 통해 '수출호조⇒투자활성화⇒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소재원천기술개발사업을 신설하고, FTA 시대를 맞이하여 국제공동 기술협력 사업도 대상과 기간을 확대하며, 무엇보다도 전략적인 R&D 접근을 통해 대일무역역조 개선 등 당면한 과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력산업의 글로벌 리더십 강화

자동차산업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은 2005년 세계 5위에서 2015년까지 세계 4위를 목표로 하고 있는 명실상부한 우리의 주력산업입니다. 우리 자동차산업은 세계의 글로벌화 추세에 맞추어 해외 생산을 본격화하고 자동차 부품의 글로벌 공급 기지화에 더욱더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06년에는 완성차의 해외생산 능력이 100만대를 돌파하는 동시에 부품수출액도 100억불을 돌파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외공장에 대한 부품조달을 위해서 부품업체의 현지 동반진출도 크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한편, 세계 자동차산업의 패러다임이 화석연료의 고갈과 환경규제 강화에 따라 전통적인 가솔린·디젤자동차에서 하이브리드·연료전지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동차시장의 여건변화에 발맞추어 차세대 성장동력사업으로 미래형자동차산업을 선정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핵심기술 확보와 상용화를 촉진하고자 연구개발지원금을 2005년 172억원에서 2006년 394억원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조선산업

세계 조선산업은 1990년대 이후 세계 교역량의 증가로 호황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산업은 2003년 이후 줄곧 선박수주와 건조량에서 모두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2006년 수주량 1,959만CGT, 435억불; 건조량 1,111만CGT, 176억불, 315척). 또한 2006년 수주잔량 기준으로 세계 6대 조선소를 모두 한국이 점유함으로써 우리나라 조선산업은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 수준에 올라와 있습니다. 조선산업은 2006년 '15개 전략기술개발사업' 분야로 선정되어, 크루즈선 등 고부가가치선의 핵심기술 개발 분야에 대한 투자가 시작되었으며, 현재 중기 거점기술 개발로서 차세대 LNG선 화물탱크, 선체블록 내부 도장과 전처리 자동화 시스템 개발, 선박안정성과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부품·소재 기술개발, 지역산업 육성사업 등의 분야를

포함하여 업계 수요에 부응한 다양한 과제가 수행되고 있습니다.

철강산업

우리나라의 2006년 조강생산량은 4,844만 톤으로 세계 5위이며, 세계 조강생산량의 4.2%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최근 세계 철강업계는 M&A를 통한 대형화와 글로벌화가 급속히 진전되고 있고, 중국 철강산업의 급속한 성장으로 그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으며, 원료 확보 경쟁 또한 심화되고 있습니다. 철강업계는 제품 고부가가치화에 주력하고 있으며, 원천기술과 개량 응용기술을 근간으로 신강종, 신제품 공급을 통한 신수요 창출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2006년에 엔지니어링 설계기술 장비구축과 최적화 생산기술 시스템 개발을 위해 '금속소재 엔지니어링 설계센터 구축사업' 등 5개 사업에 343억원을 지원하였고, 차세대 고부가가치용 자동차용 강판을 개발하는 데도 7개 과제 768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부품·소재의 신뢰성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기초 금속소재 신뢰성 센터' 등의 사업도 전개하였습니다.

석유화학산업

석유화학산업은 전자·자동차·섬유·항공기 등 각종 전방산업에 필요한 기초소재를 공급하여 국민경제 발전과 연관산업의 발달에 기여하는 중요 핵심 기간산업입니다. 석유화학산업은 2006년 241억불을 수출하여 국내 전체 수출의 7.4%를 점유하고, 무역수지도 137억불의 흑자를 기록하였습니다. 산업자원부는 고부가가치 첨단 고분자 신소재 제품의 생산비중을 확대하고 기술 자립화를 촉진하기 위해 업계의 기술개발을 적극 유도하고 있는데, 그 일환으로 2005년부터 6년간 335억원을 투자하여 '울산정밀화학지원센터'를 건립하고 있습니다. 이 센터의 건립으로 생물·환경·신소재 등 미래기술이 융합된 신화학산업의 창출에 의한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반도체용 고분자 소재 개발, 고기능 나노 복합체 개발, 화학 원천소재 기술 등 중장기 기술개발을 추진함으로써 미래 시장을 선점해 나갈 계획입니다.

디지털전자산업

2006년 우리나라 디지털전자산업의 생산규모는 1,174억불로 중국, 미국, 일본에 이어 세계 4위이며, 그 비중은 2001년 4.7%에서 2006년 7.8%로 급격히 증가하였습니다. 국내 수출은 1,147억불로 전체 수출 3,255억불의 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자산업의 눈부신 성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응용생산기술은 세계적인 수준이지만, 설계기술 및 핵심 원천기술은 아직 부족한 실정입니다. 2015년 세계 3위의 디지털 전자강국을 실현하기 위해 크게 다음의 다섯 가지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략	주요 내용
미래신산업 창출	- 선별적 원천기술 및 국제표준 선점 - 기술·산업의 융·복합화 트렌드 주도 - 미래 신산업의 육성
한미FTA 활용	- 비교우위 품목의 성장 모멘텀 유지 - 기술력 열위 취약분야의 기술 경쟁력 강화 지원
차세대 성장동력 조기산업화	- 로봇: end-product 개발 역량 집중 - 홈네트워크: 통신표준간 호환성 - 반도체·디스플레이: 메모리 일변도 산업구조의 개편 추진 - 디지털TV: 수요 확충 - 텔레메틱스: 자동주행장치 개발 등
전통산업의 고부가가치화	- 전자의료기기 전략기술 개발 - 신광원 기술개발 및 산업화 지원 기반 확충
특허분쟁/ 환경규제 대응	- 국제 특허분쟁 대응역량 강화 - EuP, China RoHS 등 국제 환경규제 대응 역량 강화

미래성장동력산업 육성

'미래 선도형 R&B 산업기반 확충', '미래 고도 소비사회에 대응한 산업기반 강화'는 바이오, 나노 및 고령친화 등 차세대 먹거리 산업의 육성 의지를 보여주는 산업자원부의 다짐입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급속한 양적·질적 성장과 함께 사회적 변혁을 가속화할 미래성장 산업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미래성장 산업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기반 인프라를 구축하고 핵심기술의 중점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업자원부는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R&B(R; Robot, &(N); Nano, B; Bio) 분야의 핵심 기술(Killer Application)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술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산·학·연 공동연구 인프라(나노기술 집적센터, 나노부품 실용화센터 등)도 확충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뢰성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품질인증제도' 도입과 함께 국제 표준 선도를 위한 '표준포럼'(로봇) 등을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자금·마케팅 지원을 통해 기 개발된 R&B 기술의 경쟁력 확보 및 산업화를 촉진하고 있으며, 특히 글로벌 바이오 신약의 수출 산업화를 위한 산업화단계(전임상·임상)의 중점 지원, 선진국 수출을 위한 cGMP(선진국 의약품 제조기준)급의 의약품 위탁생산시설 구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R&B 분야의 기술개발 지원을 위해 2006년에 로봇 분야 440억원, 나노분야 568억원, 바이오분야에 580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개발되어 상용화되는 제품의 전시·홍보를 위해 기존 분야별 전시회 및 경진대회를 통·폐합하고 민관합동으로 규모화·국제화를 추진하여 2006년 9월 Bio Korea 제 1회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하였으며, 독일 월드컵 4강전 개최 직전에는 현지에서 '세계로봇축구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006년에는 차세대 성장동력 육성의 가시적 성과가 도출되면서 조기 제품출시 가능성이 확대되었습니다. 초저가 TFT-LCD 등 조기 출시가 가능한 신제품 개발에 R&D 역량을 집중하여 2005년보다 14개 과제가 늘어난 총 69개 과제 1,449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성장산업	2006년 개발 시제품
디스플레이	· 초저가 TFT-LCD개발(15불/인치, 30인치급) 등
미래형 자동차	· Hard Type 신동력 시스템, 지능형 자동차 부분품 등
차세대 반도체	· 단거리 통신용 시스템 반도체, 512M PRAM 등
지능형 로봇	· 경비로봇 시제품 등
차세대 전지	· 하이브리드 전기 자동차용 고출력 이차전지 Cell 등

유통·물류 정보화 촉진을 위한 RFID 시범사업, 연 1만건의 전문기업 DB를 구축하는 등 비즈니스 서비스 인프라 구축도 도모하고 있으며, 지식서비스 인적 인프라 확충을 위한 중견 컨설팅업체(Glocal Consulting) 발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디자인 홈닥터 사업의 지원을 2006년 15억원으로 5억원 증액하여 영세한 디자인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지원하고 디자인 문화 등 저변 확산을 위한 현장 중심형 인력양성 교육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고령친화산업의 체계적 지원을 통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고령친화산업진흥법' 제정을 추진하였으

며, 고령자들이 기기·요양·문화서비스를 직접 경험해 볼 수 있는 종합생활체험 서비스 시범사업을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실버의료기기(KIST), U-헬스케어(부산) 등 지역 특화 자원을 고려한 산업 클러스터 전초기지를 육성 중에 있으며, 웰빙 트렌드에 입각한 항균 섬유(대구), 건강기능식품(전라·경상) 등 웰빙상품의 시장 진입을 촉진하는 기술개발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이를 계기로 산·학·연을 중심으로 한 '웰빙산업 전문가그룹'을 구성·운영하여 중장기 웰빙친화산업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007년 미래산업 성장동력화 중점 추진방향

▶ 미래신산업 창출전략 수립
- R&B 융합기술을 바탕으로 창출되는 신산업 선점에 효과적 대응

▶ 미래핵심기술 개발과 신기술의 조기 산업화
- 선택과 집중에 따른 핵심전략 기술개발로 경쟁력 제고
- 신산업 주도를 위한 인프라 구축

▶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신산업 시장수요 형성
- R&D 성과의 조기 사업화와 해외시장 마케팅 지원을 통한 신시장 창출

▶ 신산업 발전을 위한 기업지원 인프라 확충
-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신산업 육성기반 조성과 산업현장에 부응한 맞춤형 전문 인력 양성

국가표준·인증제도의 통합·정비

국가표준심의회에서 2006년 5월 심의확정된 '제2차 국가표준기본계획(2006~2010)'에 의거하여 선진 인증체제를 구축하고, 국가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출범한 혁신실무작업반은 2006년 8월에 발족하여 22개 부처 106개 법령에서 운영 중인 표준·인증제도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국가표준심의회(의장: 국무총리)는 10개 부처 장관 및 민간위원 등 24명으로 구성
※혁신실무위원회(2006.7.6, 위원장: 국조실 경제조정관) 산하에 혁신실무작업반(2006.8.18, 반장: 기술표준 정책부장)을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내에 구성·운영
※표준·기술기준: 22개부처, 106개법령, 41,568종(표준 22,538, 기술기준 19,030)
※법정인증: 98개, 민간인증: 60개

혁신실무작업반은 국가인증의 위상제고와 소비자 편익 제고를 위하여 지난 한 해 동안 표준·인증제도 관련 법령과 인증운영 실태를 조사·분석하였습니다. 국가대표 인증마크 설계와 모듈 심사체제 도입 방안 등을 위하여 세부이행과제 선정부터 진행과정, 결과물 완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이를 국가표준·인증혁신업무 세부추진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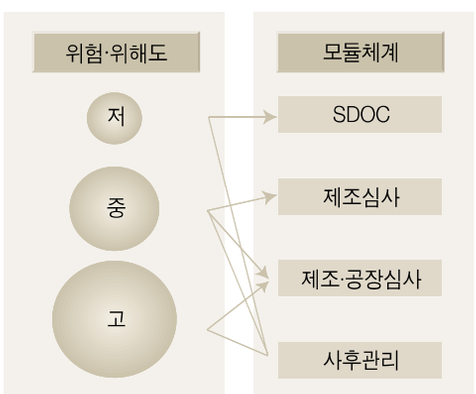
앞으로도, 관련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보다 더 충실히 수렴하기 위하여 국가대표 인증마크 설계(안)에 대한 공청회, 워크샵, 설명회 등을 통하여 국가표준·인증제도혁신 내용이 국제기준과 부합하고, 국내 실정에 맞도록 다음과 같은 활동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첫째, 2006년부터 2010년까지 20개 부처 63개 법령에 따른 100여개의 법정인증제도의 국가대표 인증마크 및 품목별 모듈인증체제를 도입하여 선진화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입니다. 국가대표 인증마크는 국제적 통용성, 사용의 효율성, 시각적 심미성을 감

안하여 도식화 할 수 있도록 도안해 나갈 것입니다. 품목별 모듈심사체제 도입은 주요국의 사례(EU의 CE, 대만의 CI, 중국의 CCC 등), 국제기준(ISO/IEC Guide 67) 등을 종합 검토하여 국내 실정에 맞게 설계하여 위험·위해도 등에 따라 현행 품목(TV 모니터 등 1,750여개)을 재분류하고 품목별로 적합한 모듈심사체계로 재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국가대표인증마크(National Mark) 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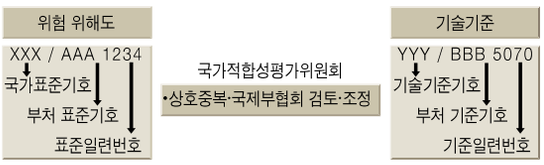
품목별 모듈심사체제 도입



※모듈: 인증심사 절차를 SDoC, 형식적합, 사후관리 등의 요소를 조합하여 표준화한 인증심사체계
※SDoC(자기적합성선언; Supplier's Declaration of Conformity): 제조자가 해당제품에 대하여 규정된 검사 또는 시험을 실시하여 적합함을 선언하는 방식

둘째, 기술표준의 중복방지와 국제부합화를 위해 '(가칭)국가적합성평가위원회'를 운영하고, 기술표준 번호체계를 단일번호 체계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기술정보 획득을 용이하게 하고, 기술규제를 단순화시켜 기업의 분야별 중복인증 취득 부담을 해소시킴으로써 산업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기술표준 단일번호 부여체제(Code화)



셋째, 국가대표인증마크, 모듈심사체계 도입, 기술기준 단일번호 부여체계,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등 관련부처의 국가표준·인증제도 혁신을 실질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법률적 기반조성 및 제도정비도 함께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민간인증 부문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민간인증협의회의 구성·운영과 등록제 도입, 국제기준에 따른 인증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보급하고, 시험검사설비 확충으로 시험검사능력을 향상시켜 대외적인 신뢰성을 확보해 나갈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국가표준·인증제도 혁신기반(2006~2010)이 구축되면 기업의 규제완화 및 국가인증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소비자의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7,900억원 인증비용 절감(2006.1 한국산업기술시험원)
※ 3,200여종의 국방규격을 국가표준으로 통일화하거나 폐지하여 연간 279억원 예산 절감

단계적 추진계획 일정 및 기대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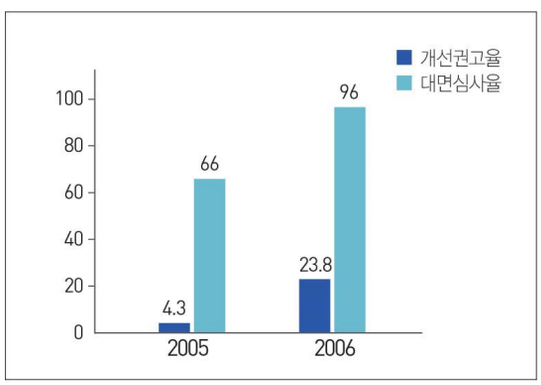
일 정	내 용
1단계 (2006.05~2008.06)	국가대표인증마크 개발 등 관련 제도 설계
2단계 (2008.07~2010.12)	인증제도 혁신을 위한 제도 정비 (국가표준기본법 개정 등)
3단계 (2011.01~)	표준, 인증제도 종합·조정 체제 출범

기업의 규제완화 및 국가인증의 신뢰도 제고

기업규제 개혁

2006년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이루기 위해, 내실 있는 규제심사로 신설·강화규제를 사전에 억제하였으며 시장경제에 뒤떨어지는 규제를 발굴·개선함으로써 합리적인 규제개혁을 이룬 한 해였습니다.

먼저, 신설·강화 규제의 사전 억제를 위해 서면심사를 지양하고 대면위주로 심사(2005년 66%→2006년 96%)를 진행하였고, 과도한 규제에 대한 비용·효과분석을 통해 신설·강화 규제에 대한 개선·철회권고율(2005년 4.3%→2006년 23.8%)을 획기적으로 높였습니다.



둘째, 기존 행정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 정비하는 등 산업현장의 애로개선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부처 소관 규제에 대한 Zero-Base 검토를 통해 총 62건의 개선과제를 발굴·정비하였으며, 국무조정실과 함께 각 부처 규제가 섞여있는 덩어리규제 25건을 정비하여 기업의 잠재적 성장력 확보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대한상의 등 경제5단체의 규제개선 건의과제 총 20개 중 9건(45%)의 제도개선을 추진함으로써 기업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규제개혁 수요파악 및 의견수렴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상대적으로 여건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현장 애로에 귀를 기울이기 위해, 관련 기관단체·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중소기업체험단이 기업애로가 있는 전국 309개 중소기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398개 기업애로를 해소하였습니다. 또한 온라인 규제제도처리시스템인 '기업신문고'를 통해 2006년 46개 과제를 접수하여 그중 44개 과제(96%)를 해결하였습니다.

중소기업현장체험단 활동 실적

구 분		계
파견인원 (명)	각 부처공무원	512
	유관기관·단체	262
	계	774
방 문(개사)		159
애로발굴(건)		574
처리현황 (건)	해 결	398
	기 타	176

대부분의 경제인과 외국의 투자자들은 한국의 기업환경이 좋지 않은 가장 중요한 이유로 과도한 규제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산업자원부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 건설'을 위한 방안으로, 소관법령의 지속적인 검토를 통해 규제개혁과제를 적극 발굴, 개선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유관기관·단체의 규제개선 및 기업애로 해소를 통해 투명하고 건전한 상호협조 관계를 이루겠습니다.

주요 규제개선사례

- 상공업자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시 과태료 부과처분, 회원의 제명 및 권리제한 규정을 폐지(상공회의소법)

- 자연보호지역중 수질오염 총량제 실시지역에서는 공장건축 면적 산정시 사무실 및 창고면적을 제외토록 개선(산집법 시행령)

- 집단에너지사업 공사계획승인 처리시한을 현행 60일에서 30일로 단축(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산업 강국 견인형 新무역체제 구축

2006년 우리경제가 세계에서 11번째로 수출 3천억불을 달성하고 세계수출 11위 국가로 도약하였습니다. 산업자원부는 수출기업이 변화하는 무역환경 속에서 무역거래 비용을 낮추고 무역활동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무역진흥 및 전시산업 지원

산업자원부는 무역진흥 및 전시산업 지원을 위해 무역전시장을 확충하여 무역 전시산업을 육성하고, 해외전시회 참가, 시장개척단 파견, 수출구매상담회 등 해외마케팅 활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업종별·지방 수출 간담회를 통해 무역업계·무역지원기관·정부가 함께 무역업계의 애로를 협의·해결함으로써 수출여건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세계일류상품 발굴 및 지원

산업자원부는 소수품목에 편중된 수출구조 개선과 미래 수출유망 상품육성·발굴을 위해 세계일류상품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6년에는 상반기 42개, 하반기 35개 품목 등 총 77개 품목을 새로 선정하였습니다. 2006년말 현재 세계일류상품 308개, 차세대세계일류상품 215개, 총 523개 품목을 선정, 수출주력품목으로 육성하고 있으며,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에 대해 각종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수출보험

2006년은 선박·플랜트·IT 등 수출동력사업에 대한 선도적 지원강화, 글로벌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맞춤형 제도 시행, 국제금융시장 환경변화에 따른 계속적인 제도개선 노력과 환율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환변동보험 지원 강화 등을 통하여 전년 대비 13.0% 증가한 82조 7,000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지원내용

구 분	지원 내용
세계일류상품 육성사업자금 지원	· 일류상품전시회 직접 개최와 참가업체에 대해 직접경비 지원 · 해외전문전시회에 개별 참가시 직접경비 지원 · 업종별 세일즈단 참가기업에 대해 항공료 지원 · 사이버전시상담회 개최 · 세계일류상품 광고 등 해외홍보 지원
간접지원	· 산업자원부장관 명의 국·영문 인증서 수여 · 일류상품의 기술개발 지원 · 기타 중소기업은행의 신용대출 확대, 병역지정업체 선정 추천시 가점부여

새로운 수출동력인 플랜트산업 육성

산업자원부는 해외플랜트를 반도체, 선박, 자동차 등 주요 수출품목에 버금가는 수출전략 분야로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7 Plant Industry Forum'을 개최해 우호적인 수주여건을 조성하고, 해외벤더 등록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수출보험공사를 통하여 자원개발·시장개척보험 확대, 프로젝트 파이낸싱 활성화를 위한 보험료 혜택 등 다양한 수출금융 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KOTRA 홈페이지 내 e-플랜트 입찰지원센터를 구축하여 플랜트 입찰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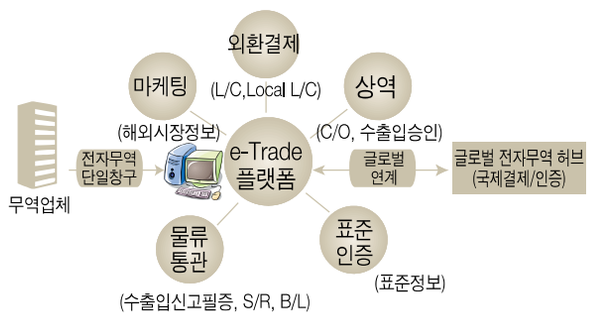
무역전문인력의 양성

지방소재 대학에 'Trade Incubator(TI)'를 설치하여 일정기간 무역 실무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하여 TI 참여 학생이 무역거래를 직접 체험하도록 함으로써 무역에 대한 실무 교육의 내실을 다졌습니다. TI사업의 내실화 및 체계화의 결과 TI사업단의 2006년도 수출실적은 52만불로 전년 대비 2배 증가하였으며 16개 대학에서 228건(샘플수출180건, 일반수출 48건)을 수출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TI사업단 주관으로 국제금산인삼교역전을 수행(한남대)하는 등 지방 대학생들의 무역실무 능력향상과 산학협력을 제고하였습니다.

전자무역(e-Trade) 인프라 확충

무역업계의 수요를 바탕으로 도출된 전자무역 미래모형을 통해 세계 최초로 전자신용장의 통지와 양도, 매입신청이 가능해짐으로써 종이 신용장이 불필요해졌고, 신용장 분실과 훼손 및 위변조의 근원적 차단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신용장의 매입이력의 전자적 조회도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전자무역 문서보관소 구축 및 중계시스템과의 연계를 구현하였고, 전자무역문서(EDI, XML) 보관기능 및 증명기능을 개발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전자무역의 미래모형



원산지 제도

산업자원부는 원산지 제도의 개선을 위해 2005년 1월 14일 '국내생산물품 등의 원산지판정기준'을 대외무역관리규정에 신설하여 ① 수입원료나 부품의 HS 세번 6단위와 다른 완제품을 생산하고 ② 생산품의 제조원가 중 수입원료나 부품을 제외한 금액의 비중이 51%를 넘을 경우에만 한국산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규정은 2006년에 농산물, 원자재, 수송기계 등을 제외한 거의 모든 소비재 품목(398개)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아울러, 한국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원산지 대신 가공국 또는 조립국으로 한국을 표시하고 원료나 부품의 원산지를 병행해 표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07년 1월에는 '대외무역법'을 개정하여 원산지 규정 위반시 처벌을 강화하고,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을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외국인투자의 전략적 유치

외국인투자유치정책은 외환위기 이후 외국인직접투자(FDI)에 대하여 적극적 입장으로 바뀌게 되면서, 1962년 이래 전체 유치실적의 80.5%인 1,021억불을 1998~2006년 동안 유치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세계경기 침체 등으로 2000년 이후 감소세로 전환되던 외국인투자유치는, 2003년 투자유치정책 및 제도를 재정비하면서 2004년부터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으며, 2006년까지 3년 연속 110억불(신고기준)을 초과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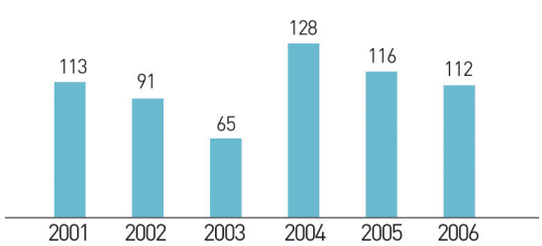
하지만 2006년은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매각에 관한 과세 논란, 북한의 핵실험 등이 외국인투자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이에 외국인투자유치정책도 투자자들에게 한국의 정치·경제적 상황이 안정적이며, 외국인투자 유치에 대한 의지가 변함없음을 주지시키는데 중점을 두면서, 크게 ① 新FDI 비전 수립과 전략적 외자유치체계 구축 ② 고부가가치 네트워크형 FDI 중점 유치 ③ 외국인투자 인프라의 글로벌 스탠다드화 등 3가지 방향으로 노력하였습니다.

新FDI 비전 수립 및 전략적 외자유치체계 구축을 위하여, 현재 GDP대비 8.0%인 FDI 누계를 2015년 15%까지 제고하고 고용창출을 주요 목표로 설정하는 'FDI 중장기비전'을 수립하고, 해외거점 무역관 및 외국인투자옴부즈만 기능을 강화하는 등 Invest Korea의 전략적 개편(3월)을 단행하였습니다. 11월에는 외국인투자 촉진시책 수립·추진 근거 마련과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인센티브 개선 등을 담은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외국인투자 유치에 있어서 질적 고도화를 위해 산업간 연관효과가 큰 고부가가치 네트워크형 투자유치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IT·자동차부품 등 주요 업종별 산업경쟁력 분석을 통해 국민경제 기여도가 높은 업종을 우선 선정, 전략적 유치업종 중심의 투자 유치에 집중하는 한편, 기술적 파급효과가 높은 첨단업종을 중심으로 동북아 비즈니스 허브 기여형 R&D 센터와 물류센터 등의 유치에 중점 노력하여, 부품·소재 31.9억불, 물류센터 22개 0.9억불을 유치하였습니다.

국내외 투자설명회로 미국IR(6.28~29), 일본IR(9.25~26), 중액투자IR(6월, 제주)을 비롯, Foreign Investment Festival 2006(11.1~3), 월드컵기간 중 VIP(유럽 30개사 CEO) 대상 현지투자유치활동, 대일투자유치단 파견 등을 통해 4억불의 투자유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외국인투자금액 [단위 : 억불]



외국인투자 인프라의 글로벌 스탠다드화를 위해서는 기존 발굴된 '외국인 경영·생활환경 중장기 개선대책' 151개 과제 중 용산외국인학교 건립 완공(7월)을 비롯해 108개를 완료하였고, 외국인종합지원서비스를 구축(8.11)하고 외국인투자가를 위한 포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0월에 준공된 Invest KOREA Plaza는 외국인커뮤니티 지원을 위한 거점센터로 활용하고 있으며, 외국인투자기업을 국민경제의 일원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Foreign Investment Week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외투에 대한 국내외 인식을 제고하고자 외국인투자자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인 노사관계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해 한노총-KOTRA 간 외자유치 공동협력 약정식(4.18)과 한노총과의 공동 해외 IR(6월, 9월) 등을 개최하였으며, 독일월드컵기간 중 BBC광고를 통해 투자유치 분위기를 조성하고(6월), 외국인투자기업 CEO간담회(3월)와 외신기자간담회(5월) 등을 통해 우리나라에 대한 친밀도와 이해를 제고하였습니다.

향후 각 분야별로 우리나라의 유치여건, 투자자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차별화된 '외국인투자유치시책'을 수립해 추진하고, 정부부처와 지자체 간의 협력을 통한 투자유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조정할 계획입니다. 또 한·미FTA 체결로 우리나라의 투자매력도가 높아짐에 따라, 이를 최대한 활용해 외국인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보다 체계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07년도 고부가가치 창출형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중점 추진방향

- ▶ 외국투자가가 선호하는 투자지역으로 위상 강화
- ▶ 전략적 분야의 외국인투자 중점 유치

해외시장 확대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

범세계적 자유무역을 추구하는 WTO 출범에도 불구하고 DDA 협상 지연과 급속한 FTA 확산 등에 따라 지역주의가 동시에 진전되고 있습니다. 산업자원부는 각국과의 FTA 체결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세계적 FTA 체결 추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FTA는 2000년 이전에는 세계적으로 체결건수가 39건에 불과하였으나 2004년에는 100건, 2006년 9월에는 134건을 기록, 급속히 확산되고 있으며, 다수의 FTA가 협상 중이거나 공동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감안해 보면 앞으로도 FTA가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나라는 칠레, 싱가폴 등 6개국(2006년말 현재)과 FTA를 체결하고 있으며, 미국·중국·EU 등 주요 교역상대국과의 FTA는 아직 체결되지 않는 등 FTA에 관한 한 다른 국가들에 비해 한발 뒤쳐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미국과는 2007년 4월 FTA 협상 타결). 이에 우리나라는 거대 경제권 및 신흥 유망지역과의 동시다발적 FTA를 추진하되, 내용적으로는 '높은 수준의 포괄적 FTA' 체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품분야의 관세 철폐뿐만 아니라 비관세장벽 철폐, 투자/서비스, 경제협력, 정부조달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는 FTA를 의미합니다.

FTA 기본전략에 충실하게 정부는 다수의 국가와 FTA 공동연구 또는 본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칠레, 싱가폴, EFTA와 협상을 타결하였으며, 미국, 캐나다, 아세안, 인도, 멕시코 등 5개국과 동시에 협상을 진행 중이며, 캐나다, 인도와는 2007년내 협상타결을 추진 중입니다. 아울러 EU와는 2차례의 예비협의를 끝내고 2007년 상반기에 공식협상을 시작하여 2007년내에 협상을 타결할 계획입니다.

FTA 체결 확대와 더불어 산업자원부는 시장개방으로 인해 경쟁력이 약한 기업의 피해를 구제하고 타업종으로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무역조정지원제도와 사업전환지원제도를 도입하는 등 시장개방에 대비한 국내 보완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FTA를 활용해 수출시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우리산업 구조를 고도화하여 고부가가치화의 계기로 활용하기 위해 'FTA를 활용한 산업구조 고도화 전략'을 수립·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자원부는 WTO 출범 이후 최초의 다자간 무역협상인 '도하개발아젠다(DDA: Doha Development Agenda)' 협상에 적극 참가하여 무역장벽을 완화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확대하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2001년 이후 농업, 비농산물, 서비스, 규범, 무역원활화, 지적재산권 등을 포괄하는 다양한 분야의 논의를 진행시켜 왔으나, 주요 이슈에 대한 의견접근을 이루는 데 실패하여 2006년 7월 DDA 협상이 중단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채널을 통한 협상 재개 노력이 전개되었고 2007년 1월 열린 다보스포럼에서 DDA 협상의 즉각적인 전면재개가 합의되었으며 2007년 2월부터 협상이 본격 재개되어 2007년말을 타결시점으로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산업자원부는 실질적인 효과가 큰 비농산물, 비관세장벽 철폐 등 분야에 적극 참가하여 우리나라와 유사한 산업특성을 지닌 국가들과 공조를 통해 우리의 협상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글로벌 경영지원 강화

기업활동의 범세계화로 해외직접투자, 현지시장개척 등 글로벌 경쟁을 위한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이 증가하면서, 국내산업 공동화 우려와 달리 부품·중간재 수출, 생산유발 등 해외직접투자의 긍정적 효과가 지대합니다. 반면 중국, 인도 등 신흥산업국의 급성장과 함께 주력 수출시장에서의 경쟁과 전 세계적 에너지·원자재난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역 1조불 시대로의 도약을 위해 우리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지원하는 전 방위적 통상환경의 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해외진출기업의 글로벌 경영지원강화를 위하여, 중국·베트남 등에 총 7개의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를 설치하여 법률 자문, 경영애로사항 해결, 현지네트워크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8년에 10개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지원예산도 대폭 확대(2005년 1.4억원 → 2007년 5.1억원)하고, 진출기업의 애로해결 등 지원기관 협의회 사무국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국내 해외진출 희망기업 및 기진출기업을 위한 컨설팅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또 KOTRA, 수출입은행, 수출보험공사 등 31개 유관기관의 해외진출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해외진출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2007년말에 정식 오픈할 계획입니다. 향후 해외진출기업, 유관기관과 정부 간 유기적 협조체제를 확대하고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외진출 지원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새로운 수출시장 및 에너지공급원으로 성장가능성이 높은 국가들에 대한 전략적 정상외교를 추진하여 나이지리아·알제리·이집트 순방(3월), 몽골·아제르바이젠·UAE 정상순방을 통해 에너지·자원 수급선을 확대하고, 핀란드·루마니아·그리스 정상순방(9월)을 통한 대EU협력 공고화, 리비아·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9월) 총리 방문을 통한 자원개발·산업협력 강화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그 후속조치로 한·알제리 경협T/F과 한·아제르바이잔 경협T/F 구성을 통한 본격 협력사업에 나섰으며, 대UAE T-50 수출지원을 위한 포괄적 산업협력 추진, 카자흐스탄 및 우즈베키스탄과의 에너지·자원·산업협력 확대를 추진하였습니다. 중동의 오일머니 환수를 위해 11개 부처 공동의 '중동지역 진출 종합대책'을 수립, 외교·경협기반, 무역·투자, 자원·에너지, 건설·플랜트, 과학기술·정보통신, 문화·관광 등 6대 분야를 추진하고, '중앙아시아 지역 진출대책' 등도 수립하였습니다. 향후 APEC 및 ASEAN+3 정상순방을 추진하고 중동진출대책위 구성·운영을 통한 세부 사업 추진과 신규사업 발굴에 노력할 계획입니다.

선진국형 무역구제체제 실현을 위해 산업피해구제법령에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2월), WTO규범 위반사건, 외국의 무역장벽 조사와 국내산업의 경쟁력 조사를 통한 선진국형 무역구제기관으로 위상을 제고하였습니다. 매월 수입급증품목 동향정보를 분석·제공(7월)하고, 수입급증으로 인한 산업피해 예방을 위해 조기경보시스템의 모형을 개발(2007년 본격가동)하였습니다. 한·미 무역구제협력위 설치 추진 등을 통해 국내기업의 반덤핑제소가 많은 교역국과의 사전협의채널을 구축하고, 중국과도 피소가능 품목에 대한 자료 교환과 조기경보체제를 검토하였습니다.

향후 FTA로 인한 국내기업 피해구제를 위해 피해기업에 대한 판정기준 및 운영방안을 마련하는 등 피해구제의 차질없는 준비를 하는 한편, 중국 등으로부터의 모조품 수입증가에 대처할 수 있도록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또 지적재산권 침해판정에 수입자뿐만 아니라 침해물품 자체를 수입금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에너지자원의 자주개발 역량 확충

해외자원개발이란 우리 국적의 기업이 자원 보유국에 진출하여 직접 자원을 생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97%의 에너지를 해외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세계 10위의 에너지 소비국이며, 미국, 중국, 일본에 이은 세계 4위의 원유수입국임)의 경우 '해외자원개발역량 확충'은 에너지 자원의 안정적인 확보차원을 넘어 국가안보와 국민생활안정, 지속적인 산업발전에 필수적인 국가적 과제입니다.

2006년 유가는 중동정세의 불안과 중국, 인도 등 BRICs국가들의 에너지 수요 급증으로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였으며, 러시아,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등 자원보유국을 중심으로 자원을 무기화하는 자원민족주의가 확산되면서 세계 각국은 치열한 에너지 자원 확보경쟁에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자원확보가 단순한 에너지 공급차원이 아닌 국가 간의 안보전략으로 격상된 것입니다.

이에 정부는 에너지 문제를 국가적 의제로 격상시켜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에너지 과제들을 풀어나가는 동시에, 자원정책의 패러다임도 '안정적인 에너지 도입' 위주에서 '적극적인 해외자원개발' 중심으로 전환하고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2006년도에는 신규투자규모 10억불, 신규 추정매장량 49억 배럴을 목표로 설정하고, 3가지 중점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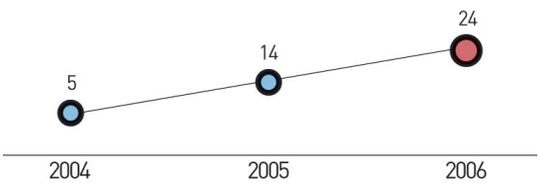
첫째, 자원부국과의 전략적인 자원협력을 확대하였습니다. 대형유전, 우라늄광, 철광 등 정상자원외교를 통해 획득한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해당국과의 자원협력을 더욱 확대하는 한편 아프리카, 중동 등 신흥자원유망국가와 자원협력채널을 확대하고, 러시아, 인도네시아, 호주 등 전통적인 자원보유국과 지속적으로 자원협력위원회를 개최하여 자원협력기반을 강화하고 협력사업을 발굴하였습니다.

둘째, 자금, 인력 등 해외자원개발 지원 인프라를 혁신하였습니다. 민간의 풍부한 유동자금을 유전개발 신규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사상 최초로 2천억원 규모의 유전개발펀드를 성공적으로 출시하였으며, 석유공사를 경쟁력 있는 자원개발 전문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해외유전개발 사업 출자금을 2005년 731억원에서 2006년 1,645억원으로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석유개발 전문인력을 육성하기 위해 '자원개발아카데미'를 설치하여 운영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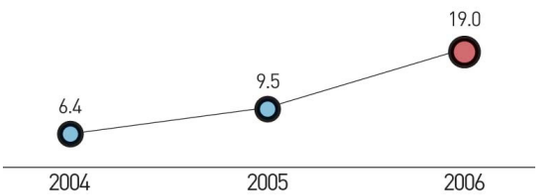
셋째, 자원개발과 에너지 인프라 산업의 동반진출을 모색하는 '한국형 자원개발모델'을 개발하였습니다. 해외자원개발의 후발주자인 우리나라에 적합한 패키지형 자원개발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자원개발기업, 동반진출기업, 지원기업 등 14개 회원사로 구성된 민·관 공동의 '에너지산업해외진출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였습니다. 협의회에서는 유망전략지역을 대상으로 민·관 공동 조사단을 파견하여 동반진출프로젝트를 발굴하는 역할을 수행하는데, 나이지리아에서 발전소와 유망심해광구를 연계한 패키지 딜을 성사시켰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해외자원개발활성화 지원 정책과 민간기업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2006년 초에 수립한 목표를 무난하게 달성하였습니다. 2006년도에만 신규로 진출한 해외자원개발 사업수는 사상 최고인 24개에 이르렀으며, 해외자원개발 투자액도 당초 목표치인 10억불을 크게 돌파한 19억불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러한 신규사업수와 투자액의 급증으로 확보한 원유 추정매장량도 당초 목표치인 49억 배럴을 상회한 51억 배럴을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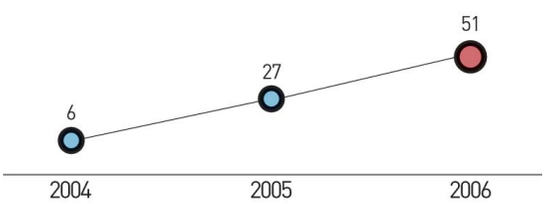
해외자원개발 신규 사업수 [단위 : 건]



해외자원개발 투자액 [단위 : 억불]



확보한 원유 추정매장량 [단위 : 억배럴]



산업자원부는 2007년도에도 해외자원개발을 통해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에너지 자원 자주개발역량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제3차 해외자원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해외자원개발 추진체계 및 전략을 보강하고, 광물개발펀드 출시 등 재원확충, 자원개발전문인력 양성 마스터플랜 수립, 자원개발기술 로드맵 수립 등 자원개발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확보한 프로젝트의 탐사·개발을 촉진하고 신규 프로젝트를 확보하기 위해 역량을 결집하는 한편, 주요 자원부국에서 패키지형 자원개발 모델을 지속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현재 에너지 인프라 산업과의 연계모델을 IT, 건설, 조선, 철강 등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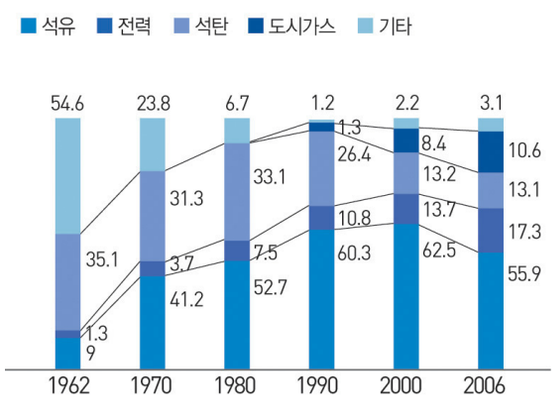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기반 조성

지속적으로 국제유가가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국제 에너지시장을 둘러싸고 국가 간 에너지 확보를 위한 무한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해외의존도가 97%에 달하고 있는 세계10위 에너지소비국(연간 225백만TOE, 1인당 에너지소비 세계 23위)이면서 계절별 수요편차가 큰 시장구조를 가지고 있는 바, 해외에너지시장의 조그마한 공급충격에도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에너지원별로 '안정적·효율적 공급기반 확충' 등 지속적인 정책추진의 중요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꾸준히 추진해온 에너지 효율향상 및 절약시책 등의 추진 결과 우리나라의 1차 에너지소비증가율은 1980년대 연평균 7.8%, 1990년대 7.5%에서 2002년에는 2.1%로 크게 둔화되었으며, 이에 따라 에너지 탄성치도 1990년 1.53에서 2006년 0.42로 크게 낮아졌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나라의 에너지 수입액(856억불)은 전체 수입액(3,094억불)의 27.7%를 차지하며, 수출 주력품목인 반도체(374억불)와 자동차(329억불)의 수출 합계액을 훨씬 상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의 최종 에너지소비를 주요 원별로 살펴보면, 석유제품이 전체의 56%로 최대 비중을 점유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전력(17%), 석탄(13%), 가스(11%) 순입니다. 에너지수요에서 석유제품의 비중은 2000년(63%)까지 꾸준히 증가했으나, 그 이후 완만하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유가(Dubai기준 배럴당 2005년 49.4불 → 2006년 61.6불)에 따라 원유도입액은 향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란 등 산유국의 정치적 불안으로 원유수급불안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최종에너지원별 소비점유율(2006년) [단위 : %]



따라서 정부에서는 이에 대응하여 한-산유국 협력사업을 통한 국제협력체계 강화뿐만 아니라, 비축시설 증설과 비축유 추가구입(2007년 7월 현재 176백만 배럴 비축, 세계 6위), 해외유전개발(2007년 7월 현재 해외 31개국에서 104개 사업중) 등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바이오디젤 보급사업(2006년 하반기부터 BD5 보급, 2012년까지 BD혼합비율 3%로 제고)을 추진하여 석유위기 대응능력 제고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천연가스는 친환경성 등을 바탕으로 발전 및 도시가스용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1986년부터 도입되기 시작한 도시가스는 지난해까지 연평균 15.2%의 성장률을 보인 결과 현재 전체가구중 61%가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2006년 2,350만 톤 수요). 그러나 국제 천연가스 시장이 공급자 중심으로 전환하면서 천연가스의 안정적 확보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가스공사를 중심으로 호주·오만 등 주요 가스수출국과 중장기 도입계약 체결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면서 제4인수기지 건설, 도시가스 공급지역 확대를 위한 배관망 증설 등 국내 인프라 구축도 차질없이 추진할 것입니다.

전력은 국민소득 증가 및 사용의 편리성 때문에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에어컨 보급증가에 따른 하절기 냉방부하가 전력수요 관리의 핵심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2006년에는 최대전력이 전년대비 8.0% 증가한 5,899만KW를 기록하였으며, 이 중 냉방부하 비중은 22%에 달한 것으로 추정됩니다(전력예비율 9.8%). 이러한 전력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정부는 중장기 전력수급기본계획에 근거하여 발전설비 확충, 분산형 전력설비 확대, 안정적 전력망 확보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자력이 발전량의 39%인 기저발전을 담당하고 있어 안정적으로 저렴하게 전력을 사용할 수 있는데, 관련 기술개발 등 원자력산업정책도 꾸준히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석탄은 생산비용 인상, 환경문제 등에 따라 전체 소비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습니다(톤당 무연탄 생산원가 1988년 4만원 → 2006년 14만원 수준). 그러나 정부의 생산비 지원, 연탄저가정책으로 인해 오히려 민수용 수요는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로 인해 정부 비축탄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습니다(2002년 811만 톤 → 2006년 467만톤). 따라서 정부는 불요불급한 수요관리를 위해 연탄가격을 현실화해 나갈 계획입니다(2007년 20% 인상). 그러나 연탄가격 인상에 따른 저소득층 난방비 추가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탄현물지원방안 등 에너지복지 정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지속적 성장과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해 '에너지의 안정적·효율적 공급'은 필수 불가결한 전제입니다. 이를 위해 '에너지기본법'에 근거한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 따라 중장기 에너지 수요전망을 바탕으로 안정적 에너지공급과 효율적 에너지믹스 구축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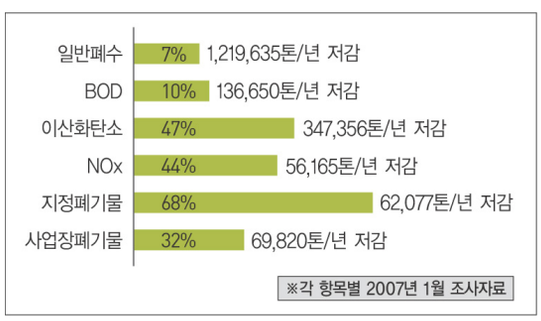
03
환경정책
Environment Policy

환경친화적 산업구조 촉진

'환경과 산업이 조화로운 지속가능한 발전', '환경과 함께하는 산업 육성'은 산업 발전을 통해 환경을 보호하겠다는 산업자원부의 약속입니다. 과거에는 산업생산이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산업자원부는 기업 활동이 환경보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펼치고 있습니다.

청정생산기술개발·보급을 통한 환경오염의 사전예방과 환경친화적인 제품생산, 기업의 환경경영 실천 촉진, 생태산업단지(EIP: Eco-Industrial Park) 구축, 재제조산업 육성 등을 중점 지원하고 있으며, 자원순환형 경제사회 형성, 기업의 환경경쟁력 제고 및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이라는 목표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청정생산기술은 기업생산의 전과정에서 환경오염을 제거·감축하고 환경친화적인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기술입니다. 지난 1995년부터 2006년까지 총 3,202억원을 지원하였으며, 2006년에는 380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기술개발에 참여한 기업의 경우 투자비 대비 2.6배의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동시에, 폐수, 폐기물 및 CO_2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을 동시에 저감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컴퓨터 등 회로기판을 프린팅하여 생산하는 '다층 연성 인쇄회로 제조기술'을 개발하여 기존 제조공정에 비해 중금속 폐수를 1,000만톤 이상 저감시킬 수 있는 혁신기술을 개발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006년 7월 EU의 '유해물질사용제한지침(RoHS)'이 시행됨에 따라 중소기업이 국제환경규제로 인해 겪는 수출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규제대응기술 개발과 함께 '국제환경규제대응네트워크(www.n-cer.com)'를 구축, 실시간 환경규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독자적으로 환경경영을 실천하고, 청정생산기술을 도입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환경분야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실천하기 위해 지난 2003년부터 '대·중소 그린파트너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이 협력업체에게 환경경영노하우, 청정생산기술을 이전하는 '대·중소 그린파트너십'은 지난해까지 현대자동차, 포스코 등 8개 대기업과 122개 중소협력업체가 참여하였습니다.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2006년 10월 '성과확산계획'을 발표하였으며, 2010년까지 총 1,500개 기업을 대상으로 환경분야 상생협력을 확대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산업자원부는 산업단지의 환경오염으로 피해받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05년 10월 울산, 포항, 여수 산업단지를 생태산업단지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한데 이어, 2006년 2월, 대표적인 악취발생 지역으로 인식되고 있는 반월·시화 산업단지를 생태산업단지 시범사업 대상지역으로 선정함으로써 지역주민과 산업단지가 공생할 수 있는 환경친화적인 산업단지를 만들기 위해 한걸음 다가서고 있습니다. 어느 한 기업의 폐기물이나 부산물을 다른 기업의 생산원료로 투입하여 오염물질 무배출형 산업단지 구축을 지향하는 생태산업단지를 2015년까지 20개 이상 확대하는 중장기 목표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재제조산업은 사용후 제품을 회수하여 분해, 세척, 보수, 조립 등 일련의 공정을 통해 신제품과 거의 동일한 수준의 재활용제품을 생산하는 산업입니다. 신품대비 에너지 및 자원절약효과가 85%에 달하는 재제조산업 육성을 위해 2006년 '재제조산업 육성계획'을 수립하여 자동차부품 재제조 기술개발과 전문인력 육성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환경친화적 산업구조 달성을 위한 중점 추진방향

- ▶ 산업환경 R&D 지원규모 확대:
  (2006년) 380억원 → (2007년) 443억원
  ✳ 청정생산기술개발보급사업 243억원
  ✳ 에너지및자원순환기술개발보급사업 200억원
- ▶ 국가자원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 실시
- ▶ 대중소 그린파트너십의 전산업계 확산
- ▶ 중소기업 국제환경규제 대응 지원을 위한 REACH 기업지원센터 설치, 운영

오존층 파괴물질 감축

산업계에서 널리 사용되는 프레온가스(CFC) 등이 오존층을 파괴하여 지구환경을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이후 국제사회는 1987년 '오존층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의정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우리나라도 1992년 몬트리올의정서에 가입하고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 오존층파괴물질에 대한 생산 및 수출입 허가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특정물질사용합리화기금'을 만들어 CFC 대체물질 개발 및 대체물질이용 기술개발과 대체물질 사용 시스템으로의 전환 촉진을 장려하는 사업을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존층파괴물질 감축을 위해 오존층파괴물질 수출입 Quota 허가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산업자원부에서는 지난 1999년 몬트리올의정서 규제조치 이행을 위해 마련한 국내 특정물질(오존층파괴물질) 생산량 및 소비량의 단계적 감축일정에 따라 특정물질 제조·수입업체에 연도별 생산량 및 수입량을 배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이행 점검을 위하여 실적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평가하는 등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존층파괴물질 대체물질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자금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특정물질사용합리화기금을 통해 국내 오존층파괴물질 사용설비의 대체전환 촉진을 위한 기술개발과 대체전환시설 융자지원 사업으로 2006년에 75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오존층파괴물질 감축을 위해 시설개체가 필요하거나 관련 기술을 개발하는 업체가 대부분 중소영세기업임을 감안하여 자금 지원정책을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우리나라 오존층파괴물질 연차별 감축계획

[단위: 오존파괴지수환산톤]

구 분		98	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CFC	기준량		9154						4577		1373			0
	배정량	8733	8000	7328	6712	6148	5631	5158	4577	2975	1373	915	458	0
할론	기준량					3676			1838					0
	배정량	3805	3428	3088	2782	2506	2258	2034	1838	1471	1104	737	370	0
사염화탄소	기준량								96					0
	배정량				638	397	247	154	96	77	57	38	19	0
111-TCE	기준량						513		359					154
	배정량				631	569	513	429	359	303	256	216	182	154

※ 오존파괴지수환산톤=실량톤×물질별 오존파괴지수

그리고 냉장고, 에어컨, 소화기 등 오존층파괴물질이 포함된 제품을 폐기할 때에는 오존층파괴물질의 회수 재처리 설비를 이용해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2차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엄격한 기준에 따라 오존층파괴물질을 파괴시켜야 합니다.

이를 위해 2006년 용역사업을 통해 오존층파괴물질의 재활용 방안과 파괴시설을 포함한 파괴기준 및 파괴방법을 마련하도록 연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CFC와 더불어 대표적 오존층파괴물질인 수소염화불화탄소(HCFC)에 대한 감축방안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HCFC는 한 때 CFC의 대체물질로 각광을 받았으나, CFC보다 오존파괴지수는 낮지만 최근 사용량이 급증하여 오존층파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짐으로써 현재 2040년까지로 정해져 있는 감축일정을 단축하고 구체화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몬트리올의정서 채택 이후 선진국은 오존층파괴물질 사용량의 99%, 개발도상국은 70% 이상을 감축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이런 성과는 몬트리올의정서에 가입한 세계 각국이 노력한 결과지만, 한편으로는 관련 환경규제가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대두되기도 하였습니다. 몬트리올의정서에서 논의되고 있는 새로운 규제 동향과 우리나라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고 이를 국민들과 관련 기업체에 널리 알려 대비하도록 하는 홍보활동도 꾸준히 전개하였습니다.

오존층보호를 위한 여러 가지 홍보물

2007년 정책목표	추 진 전 략
몬트리올 의정서에서 정한 오존층 파괴물질 감축일정 준수	▶ 오존층파괴물질의 생산, 수입 및 수출허가 쿼터(Quota)제도 강화 ▶ 국내 오존층파괴물질 생산량 및 소비량 감축 계획의 지속적인 이행 ▶ 대체물질 개발 및 대체물질 사용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위한 자금지원 정책 강화
오존층파괴 물질의 대기방출 억제	▶ CFC 등 오존층파괴물질의 파괴기준 마련

유전자변형물질 관리 강화

세포융합 등 생명공학기술의 발달로 다양한 유전자변형생물체(LMO: living modified organisms)가 개발됨에 따라 LMO로 인한 인간 건강 및 환경보호에 미칠 위해를 사전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LMO법)'을 근간으로 바이오안전성의정서 이행의 국가책임기관인 산업자원부가 중심이 되어 LMO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바이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LMO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제협약인 바이오안전성의정서가 2000년 1월에 채택된 이래, 우리나라는 2001년 3월 LMO법을 제정·공포하고, 시행령(2005.9월)과 시행규칙(2006.3월)을 마련하는 등 LMO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 정비를 추진해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LMO법을 국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유전자변형생물체관련 법·제도 설명회'를 2005년 12월에 개최하고, 각종 책자(바이오안전성 백서 등)와 홍보물(바이오안전성길라잡이, GMO에 대해 알고 싶어요 등)을 제작·배포하는 등 바이오안전성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LMO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LMO가 인체 및 환경에 미칠 수 있는 위해성을 평가하고 관리하기 위한 기초 인프라의 구축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 2004년부터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오창캠퍼스에 'LMO위해성평가센터'를 구축하기 위한 지원을 해왔으며, 2007년 6월에 준공하였습니다. 관계부처와 국내 바이오기업에서 LMO위해성평가센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국가 전체 차원에서 LMO에 대한 위해성평가능력을 신장하고 LMO위해성심사의 효율성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LMO안전관리에 있어 또 하나의 중요한 부분은 관련 정보를 수집·관리·교류·공개할 수 있는 국가적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이오안전성의정서에서는 LMO의 국가별 정보관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국가연락기관을 설치할 것을 권유한 바 있으며, 우리나라 책임기관인 산업자원부에서는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를 지정하고 2002년부터 지속적으로 바이오안전성정보기반 구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LMO 안전관리 중점 추진 방향

▶ LMO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 기반 구축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정 완료(6개 부처 공동)
- 바이오안전성의정서 비준 절차 완료 (2008.1월 중 의정서 및 LMO법 발효 추진)

▶ LMO안전성 확보를 위한 위해성평가 및 바이오안전성정보기반 구축
- LMO위해성평가센터 준공 및 본격적 운영 개시(2004~2007, 국비 124억원)
- 바이오안전성정보기반 구축사업 지속적 추진(연간 13억원 수준, 계속사업)

▶ LMO법·제도 시행에 대비한 일반 국민 및 이해당사자 홍보활동 강화
- LMO법·제도 설명회(상반기, 서울), 찾아가는 설명회(하반기, 전국 5대 권역)
- LMO법 홍보동영상, 알기 쉬운 LMO법 만화책자 발간·배포(하반기)

기후변화협약 대응체제 강화

폭염, 가뭄, 이상고온으로 대표되는 지구온난화 현상은 향후에 인류의 생존을 위협할 가장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로 대표되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있으며, 교토의정서에 따르면 선진국들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1차 공약기간 동안 온실가스(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등 6개 온실가스)를 1990년 대비 평균 5.2% 줄여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교토의정서 2차 공약기간이 시작되는 2013년부터 의무부담을 받을 경우 온실가스 감축으로 인한 경제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산업자원부는 감축 의무로 인해 우리나라에 예상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온실가스를 감축하고자 하는 전 지구적 노력에 동참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원 중입니다.

산업자원부는 기후변화협약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에너지 다소비 업종에 대해, 협회를 중심으로 하여 각 업종의 대표회사와 업종별 관련 연구기관의 전문가를 포함한 업종별 대책반을 2004년부터 운영 중입니다. 이를 통해 산업계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교육, 홍보, 정보제공과 함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등록관리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7년 2월에는 산업자원부 제2차관을 의장으로 하는 정책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기업들의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자발적 감축목표 설정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감축수단 활용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산업자원부는 기후변화협약 대응을 위한 국민의 관심제고와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대중과 밀접한 것부터 접근하는 방식이 효과적이라는 분석하에 2006년 2월, 친근한 이미지의 방송인(KBS 황정민 아나운서)을 '기후변화협약 대응 홍보대사'로 위촉하였으며, 교토의정서 발효 2주년을 맞아 '기후변화대책 WEEK'을 열어 영화시사회, 탄소시장동향 및 기업지원제도 설명회, 국제세미나와 운영토론회를 행사기간 동안 연계하여 추진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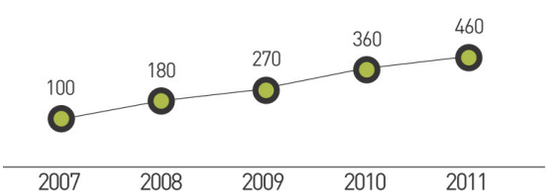
산업계 대응 노력 지원을 위해 기후변화 실무자를 대상으로 교토메커니즘,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활용, 온실가스 감축실적 등록, CDM 및 배출권 거래제 관련 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홍보 및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산업자원부는 국내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2006년부터 온실가스 감축실적 등록제

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신재생에너지사업, 에너지 효율개선사업, 청정연료 전환 사업 등을 통해 기업이 자발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이면 그 실적을 평가하여 관리해주는 제도입니다.

2006년 64건의 사업을 평가하여 41건의 감축사업을 등록한 데 이어 2007년 10월말 현재 71건의 사업이 평가를 마치고 등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2007년부터는 감축실적 1톤당 5천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2011년까지 연간 460만 톤의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등록제도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량 [단위 : 만톤]



산업자원부는 국제 CDM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기관과 함께 탄소펀드를 조성 중입니다. 이를 위해 펀드를 운용할 금융기관을 지정하였으며, 2007년 8월에는 펀드 등록을 완료하였습니다. 펀드는 국내외 다양한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투자될 예정이며 2008년에는 펀드의 투자대상이 되는 첫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펀드 조성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사업 전반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함은 물론이고, 그동안 금융기관의 관심이 적어 자금확보가 어려웠던 개인이나 법인에게는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온실가스 배출량 정보시스템(GEIS)을 개발·보급하여 기업들이 사업장 단위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자체적으로 산정할 수 있게 하였으며, 2006년에는 '기업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지침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온실가스 배출량 등록시스템은 이를 웹에서 계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사용자가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 자신의 PC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계산해 볼 수 있도록 'windows용 프로그램'을 별도로 개발하여 웹에 등재해 놓았습니다.

2007년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중점 추진방향

- ▶ 온실가스 감축실적 인센티브 확보: 50억원
- ▶ 온실가스 감축사업 활성화를 위한 탄소펀드 조성
- ▶ 산업계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업종별 대책반 운영

에너지 소비구조 선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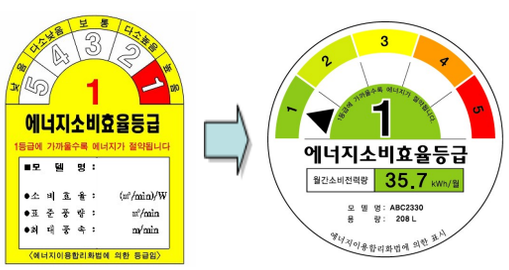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시스템 확충을 통해 지구온난화를 억제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산업자원부에서는 5년 주기의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을 정책 기조로 소비부문별 에너지이용 고효율화와 인프라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고유가 대응을 위한 '에너지원단위 개선 3개년계획(2005~2007년)'을 수립하여 에너지 저소비형 경제구조 전환을 위한 참여형 열린 에너지 시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첫째, 사회간접자본개발에 대한 에너지사용계획 협의·조정을 위해 협의 대상사업을 공공부문 연간 2.5천TOE 이상, 민간부문 5천TOE 이상으로 확대하여 에너지절약형 국토배치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둘째, 에너지소비 비중이 높은 산업부문(2006년 최종소비의 56%)의 효율향상을 위해 정부와 기업 간 자발적 협약을 2006년까지 1,353건을 추진하여 사업장에서의 에너지 절약설비 투자 촉진과 절감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산업체의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촉진을 위해 민간자금 유입 등을 통해 시설투자 지원규모를 확대하고(2003년 4,773억원 → 2006년 6,446억원),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의 활동을 장려하여 조명·냉난방 등 에너지절감 요인이 많은 부문에서 소비절약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셋째, 수송부문 고효율화를 위해서는 승용차 생산기업을 대상으로 2006년 1월부터 기준평균연비제도를 시행하였으며, 2006년에는 국내 5개 제작사 모두 기준연비를 초과 달성하여 앞으로도 지속적인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고효율차량 보급기반 구축을 위해 하이브리드차량 연비기준을 고시하여 공공기관을 위주로 2006년말까지 368대를 보급하였습니다.

넷째, 가정·상업·공공부문인 건축물에서의 소비절약 강화를 위해 63빌딩 등 2006년말까지 108개 건물에 대한 자발적 협약을 확대하였으며, 61개의 신축 아파트단지에 대한 효율등급 인증을 실시하였습니다. 대형상가 등 밀집지역의 냉·난방에너지 이용효율화 추진을 위해 지역난방 및 구역형 집단에너지의 보급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건축물 내 설비와 가전제품 등의 고효율화를 위해 효율등급 표시, 대기전력저감 대상제품 및 고효율기자재를 고시하여 보급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효율제품 식별 강화를 위해 효율등급표시 라벨을 2008년부터 변경할 계획입니다.



< 현행 > < 변경안('08년시행) >

다섯째, 시민단체 및 지자체와 협력하여 여름철에는 '선풍기로 시원한 여름나기' 및 아파트단지를 대상으로 한 '에너지절약 보상제(에너지㉀, 사랑㊉)', 겨울철에는 '난(暖)2018' 등 냉난방 문화개선을 위한 국민참여형 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고효율전동기(2006.7.3), LED조명(2006.12.22) 등에 대한 정부·업종단체·회원사 간 '생산제품 에너지절약을 위한 파트너십'을 추진하였으며, 호텔·백화점·주유소 등 27개 서비스업종과의 자율적 협약을 통한 에너지절약 동참을 추진하였습니다.

에너지원단위 개선계획 추진실적

[단위: 백만TOE, TOE/천불 2000]

구분	2004	2005	2006	증감률
1차에너지 전망	220.2	231.1	241.4	4.5%
1차에너지 실적	220.2	228.6	233.4	2.1%
절감량	-	2.5	8.0	3.2배
에너지원단위	0.359	0.357	0.348	2.5%

이같은 지속적인 효율향상 시책 추진결과, 2006년에는 계획수립 당시 전망 대비 8백만TOE가 절감되어 에너지원단위가 2005년에 비해 2.5% 개선되었습니다. 특히, 산업부문에서는 철강, 석유화학 등 주요 제품생산 원단위가 선진국과 대등한 수준으로 근접하였으며, 수송부문에서는 차량대형화 추세에도 불구하고 판매 승용차의 평균연비는 기술개발 등으로 최근 3년간(2003~2006) 8.4% 향상되었습니다.

그 동안 우리의 원단위 개선율은 OECD 평균을 초과한 것이지만, 에너지원단위는 선진국에 비해 아직도 높은 수준에 있으므로, 향후에도 원천적인 소비절약을 위해 규제, 인센티브, 사회인프라 확충 등을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등 에너지이용합리화계획을 강화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2007년도에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을 전부개정하는 등 국가에너지효율향상 제도·시스템을 개선하고, 부문별 에너지이용 효율향상시책의 고도화 추진과 함께 에너지절약 보상제 확대 등 민간참여를 통한 절약사회 분위기 조성을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중장기적인 관점의 지속가능한 국가에너지 효율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도 제4차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 수립 등을 통해 경제주체별 역할분담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차세대 친환경·수소경제로의 이행기반 구축

고유가시대를 맞이하여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고,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수단으로 신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1988년 '대체에너지개발촉진법' 제정, 2004년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전면 개정으로 이어져 체계적인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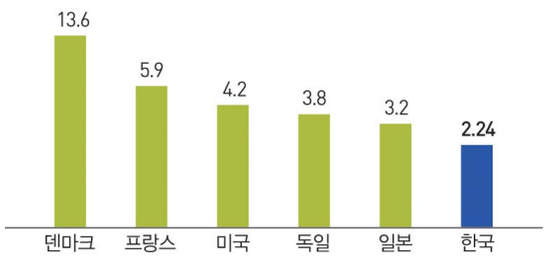
산업자원부는 2003년 '제2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분야별 기술개발 로드맵을 제시하고 기술수준, 성공가능성,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한 차별적 추진전략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산업적 파급효과가 큰 수소·연료전지, 태양광, 풍력을 3대 핵심분야로 선정하여 별도의 사업단을 구성하고 미래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대형과제 중심으로 대규모 기술개발예산을 투자하고 있으며, 태양열, 바이오 등 6개 분야는 기술수요조사를 통한 보급 중심의 기술개발을 통하여 조기 상용화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의 공급비중을 2011년까지 5%로 높이기 위해 일관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여정부 출범당시 1,193억원이었던 신재생에너지 예산을 2006년 4,095억원으로 늘렸으며, 기술개발·시장창출·사업화 지원에 균형있게 배분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특히 수소 및 연료전지는 기술선점을 위해 미국, 일본, 유럽연합 등 선진국들이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산업자원부 역시, 2005년 '수소경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수소경제로의 이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소·연료전지 R&D 로드맵을 작성함으로써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였고, 연료전지 자동차 등의 실증 연구사업도 추진하였습니다.

신 · 재생에너지 공급율 [단위 : %]



※IEA 2006자료 (2004년 기준, 한국은 2006년 잠정치)

연료전지자동차 발대식(2006.11)

2006년부터는 전력분야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 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은 물론, 에너지자원특별회계 중 전력관련 부분을 기금으로 이관하여 지원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2006년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기술개발에 총 4,095억원을 지원하였으며, 2007년에 6.2%가 증가된 총 4,350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은 저조한 실정인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 태양광주택 10만호 보급, 융자지원 및 지방보급사업 등의 각종 보급지원 제도를 운영 중이며, 향후 보급지원 프로그램을 효율적,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신재생에너지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해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과 친환경적 에너지 구조로의 전환에 기여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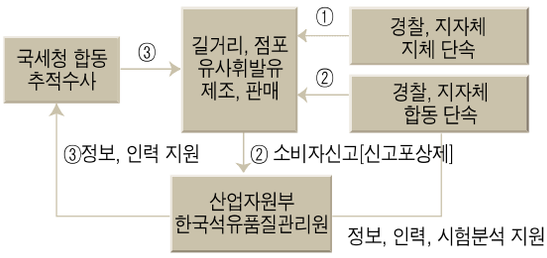
유사석유제품 유통 근절

고유가가 지속되면서 석유제품 사용에 대한 국민의 부담이 증가되고 있으며, 값싼 제품을 선호하는 소비자의 수요로 인하여 유사석유제품이 불법적으로 유통되고 있습니다. 유사석유제품은 석유제품에 조연제 · 첨가제 등 다른 석유제품을 혼합하여 차량이나 기계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되어질 수 있는 것을 총칭(예: 세녹스, LP파워, 첨가제 등)하는 것입니다.

유사석유제품이 유통되는 주된 이유는 석유제품 종류별 세금격차가 커서 이를 불법으로 혼용 판매시 부당이득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한 유류세 탈세는 2005년 기준 최대 8,741억원으로 추정되며, 2006년 석유류 세수(약26조원, 국세수입의 19%) 대비 탈루세액은 3.4% 규모에 달합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유사석유제품으로 인해 대기오염이 가중되고 대형화재 위험성이 높아져 국민의 안전이 위험에 노출된다는 것입니다. 유사석유제품 중 상당수가 용제에 톨루엔, 메탄올 등을 혼합해 제조하고 있는데, 톨루엔은 중추신경에 손상을 가져오며, 메탄올은 구토, 복통 등을 일으키는 유해물질입니다.

유사석유제품으로 차량 운행을 하는 경우 발암물질인 알데히드의 배출과 탄화수소 · 질소산화물 등 환경오염물질의 배출이 약 30% 가량 늘어나 환경과 보건에 심각한 영향을 주게 됩니다. 또한 유사 보일러 등유의 경우, 인화점이 낮은 신너나 벤젠 같은 화학물질을 섞어서 만들어 화재나 폭발 위험성이 높습니다.



2002년 세녹스 등 유사석유제품이 유통되자, 정부는 대책반 등을 구성, 유사석유제품 유해성에 대한 대국민 홍보와 단속 등을 통해 결국 2006년 2월 대법원의 최종 유해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유사석유제품의 유통방지는 대기오염방지, 소비자보호, 세수확보, 석유유통질서 유지 등 다양한 목적으로 다수의 부처 및 이해단체가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에 산업자원부는 2005~2006년 유사석유대책협의회를 세 차례 운영하면서, 유사석유 유통근절을 위한 범부처적 협력의 기틀을 다지고, '소비자신고포상제도'를 활용한 합동단속체계 구축과 단속업무 혁신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 발굴의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유사석유의 제조에는 반드시 석유제품인 용제가 사용됩니다. 이에 용제가 유사석유제품 제조와 직결될 가능성이 크므로 용제사업자에게 보고의무를 부여하고, 보고받은 수급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DB화한 후 분석하여 의심업체를 추정해 단속에 활용하는 '용제수급상황보고시스템'을 개발(2005~2006년), 시스템 운영을 정착화하여 DB화 하였고, 향후 단속 현장에 활용가능하도록 전산시스템 개선 등 추가개발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수요와 공급, 부당이득의 사슬을 끊고 석유제품 품질 개선과 유통질서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에 따라, 2006년 국정감사 전후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 국회에 대한 설득을 통해 유사석유 사용자 처벌 규정에 대한 의원입법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11월).

결국 신설 규정안은 2007년 4월 국회를 통과하여, 동년 7월부터 유사석유 사용자 과태료 처벌 규정이 적용되고, 유사석유 제조·판매·사용자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2007년 10월에는 제2회 '유사석유 추방결의대회'를 개최하는 등 국민과 함께하는 홍보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방폐장 건설 및 유치지역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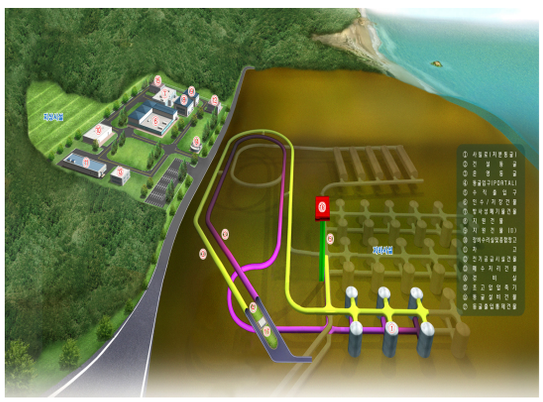
지난 1986년부터 19년간 수많은 갈등을 겪어온 방폐장 부지선정사업은 2005년 특별법 제정을 통해 유치지역지원을 명문화하고 중저준위 분리 추진으로 안전성을 강화하였으며, 지자체 자율유치와 주민투표 도입으로 민주적인 절차를 추진하는 등 정부의 획기적인 정책변화를 통해 성공적으로 최종 후보부지를 경주시로 선정할 수 있었습니다.

방폐장 주민투표(2005.11.2)

이후 산업자원부는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방폐장 건설을 목표로 준비 작업에 착수하였습니다. 우선 경주시 양북면 봉길리 일대 210만㎡를 방폐장 건설을 위한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으로 지정·고시(2006.1.2)하였고, 이후 2006년 초부터 방폐장 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부지특성조사, 방사선환경영향평가, 문화재조사 등 인허가에 필요한 조사와 개념설계를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민주적인 방식으로 방폐장 처분방식을 선정하기 위하여 2006년 4~6월까지 전문가, 지자체, 지역주민대표 등이 참여하는 '처분방식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우리나라에 적합한 처분방식으로 '동굴처분방식'을 선정하였습니다.

중·저준위 방폐장(동굴처분) 조감도



향후 방폐장은 2007년 말 실시계획 승인과 2008년 초 건설·운영 인허가를 획득하고, 2009년 말까지 완공하여 현재 발전소 등에서 저장 중인 폐기물을 이송하여 안전하게 최종 처분할 예정입니다.

방폐장 유치지역에는 특별법에 의거 특별지원금 3,000억원과 방사성폐기물 반입에 따른 지역지원수수료, 원자력발전사업자의 본사이전, 지역의 숙원사업을 바탕으로 하는 유치지역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와 함께 국무회의 의결(2003.4.15)에 따른 양성자가속기사업 등이 지원됩니다.

이에 산업자원부에서는 2005년 경주시가 유치지역으로 결정된 이후 지역지원에 착수하여 특별지원금은 경주시와 협의를 통해 2006년 5월 9일 경주시 명의의 기탁계정에 지급을 완료하였고, 방폐장 운영시점에는 폐기물 반입수수료 중 일부가 경주시에 지원될 예정입니다.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맞물려, 한전 자회사이자 원자력발전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주)는 2006년 12월 29일 경주시 양북면 장항리를 본사이전 부지로 선정하고 2010년 10월까지 이전을 완료하기로 하였습니다.

양성자가속기사업의 경우, 경주시가 건천읍 일대를 사업부지로 선정(2006.2.28)하고 원자력연구원과 협약을 체결(2006.3.30)하여 사업에 착수하였으며, 2007년 7월 기반공사에 착공하여 2012년 3월에 100Mev급 양성자가속기의 설치와 연구센터 설립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유치지역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생활향상을 위한 유치지역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경주시로부터 지원사업요청서(118개 사업 약 8조 9천억원)를 접수받아(2006.6.30) 관계부처에 사업의 타당성과 재원의 가용성 등에 대하여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이후 검토결과에 대하여 수차례 관계부처 및 경주시와의 사전협의를 통해 '유치지역지원계획(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동 지원계획(안)은 2007년 상반기에 유치지역지원실무위원회와 국무총리 주재의 유치지역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였습니다.

현재 산업자원부는 중저준위 방폐장 유치지역에 지원하기로 약속했던 사항들을 대부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유치지역이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의 이행을 철저히 관리할 계획입니다.

그 결과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는 한편 원자력과 방폐장사업에 대한 수용성을 향상시킴으로써 고준위 방폐장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함께 지속가능한 원자력 발전의 기반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광해방지 사업추진

국내 광산개발은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으나 석탄광산의 경우에는 최근 전국에서 7개 탄광만이 연간 300만 톤 내외의 석탄을 생산하면서 그 명맥을 간신히 유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산업성장과 병행하여 늘어나는 산업원료 광물의 수요증가로 인해 비금속광산 위주로 개발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광업은 특성상 개발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토지굴착 등으로 지반침하, 오염수 유출, 폐석 유출, 암석의 파분쇄·운반, 먼지의 날림, 소음·진동 등의 광해로 인하여 자연과 사람에게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광업이 환경 및 산림훼손의 주범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광산개발로 인한 광해를 예방하여 국민의 보건위생 향상과 환경오염 예방 등을 위해 1980년부터 광해방지사업을 시행하여 2005년까지 총 3,388억원을 투자하였고 2006년에도 183억원을 투자하였습니다.

광해방지사업은 1980년대 세계환경보호운동 확산과 소득증대, 헌법에 환경권 신설 등으로 환경이 강조되면서부터 광해방지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하였습니다.

산업자원부는 1980년부터 가행광산 및 휴·폐 일반광산의 광해방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여 '광산지역공해방지사업'을, 1990년부터 폐탄광의 광해방지를 위해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에 위탁하여 광해방지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정(2005.5.31)에 따라 2006년 6월부터 가행광산과 석탄광산으로 구분하여 시행되던 광해방지사업을 광해방지사업단에서 총괄하여 시행하여 사업의 '효율성, 안

정성 및 책임성'을 강구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광해방지사업비 부담제도는 광산의 Life Cycle 기간에 원인자(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광해방지 비용을 부담금으로 예치토록 하여 광해방지사업금을 마련하며, 산지전용 허가시 부과되는 산림복구비 예치를 위한 소멸성부담금(보험료)을 광해방지사업단에서 이행보증을 해줌으로써 광업권자의 부담이 완화되도록 하였습니다.

광산지역공해방지사업 추진실적

[단위: 백만원]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개 소	83	77	83	52	63
공해방지사업비	7,678	12,769	15,322	17,322	18,322
폐석유실방지	3,861	9,869	9,808	15,266	11,874
폐수정화	1,102	1,285	1,725	688	4,511
비산분진	1,294	965	2,463	807	1,801
지반침하방지	427	249	-	477	23
하천수유입방지	75	401	126	84	105
폐시설물철거	919	-	1,200	-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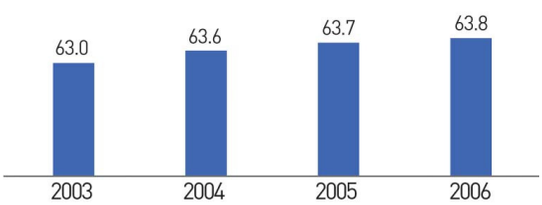
산업자원부는 앞으로도 자연적 요인이 인위적 요인보다 큰 광해의 특성을 고려하여 치유방법도 추가적인 오염발생이 없고 환경친화적인 복원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며, 광해방지전문기관의 육성을 통해 '경제성·안정성·환경성·효율성'을 추구하면서 흠 없는 사후관리를 통한 책임관리를 할 것입니다.

04
사회정책
Social Policy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추진을 통한 고용창출기반 확충

참여정부 들어 '일자리창출종합대책' 등의 추진 성과로 고용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2003~2006년간 고용률은 평균 63.5%로 국민의 정부 기간(1998~2002년간 평균 61.1%)에 비해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외환위기 이전인 문민정부 기간의 고용률 수준(1993~1997년간 평균 63.1%)도 상회하고 있습니다.

고용률 추이 [단위 : %]



고용상황이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상황하에서 우리 경제의 일자리창출 역량을 보다 강화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는 청년층, 고령퇴직자 등 고용시장에서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다각적인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의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이공계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한 현장연수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산업현장의 수요와 이공계 교육간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미취업 상태인 이공계 졸업생을 대상으로 미취업자 현장연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취업률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공계 대졸 미취업자로서 만 29세 이하 또는 졸업 후 2년 이내인 자가 지원 대상이며, 1인당 30~50만원을 최장 6개월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둘째, 중소기업의 연구인력 고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용창출과 중소기업 연구역량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이공계 석·박사 학위취득자 중 미취업자를 중소기업에서 연구 인력으로 고용할 경우 고용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기간은 최대 1년이며, 석사급 인력에 대해서는 연간 1,440만원, 박사급 인력은 1,860만원을 지원합니다.

셋째, 청년채용 패키지 사업을 실시 중입니다. 미취업자로서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자, 장기복무 제대군인, 금융채무불이행자로서 신용회복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등을 대상으로 최대 5개월 동안 월 30~50만원까지 수당을 지급하는 이 사업은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동시에 청년실업 문제의 해소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넷째, 기업-공고 연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중소기업이 요구하는 기능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공고생(3학년)을 대상으로 1년간 맞춤형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한 이후 졸업과 동시에 중소기업에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학생이 대학에 진학한 경우에도 중소기업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여학생 및 학교에 대하여는 직업훈련비 지급, 실습기자재 지원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 중입니다.

끝으로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산업기술·기능 인력의 재취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직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통해 구인·구직정보 제공, 퇴직기술인력 재취업 컨설팅 및 창업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 중입니다. 이 사업을 통하여 고숙련 기술인력의 사장 방지, 기업의 기술인력 수급 원활화, 중고령층의 고용불안 해소 등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

세계경제의 글로벌화 가속으로 대·중소기업 간 시너지 창출이 중요해지고 있으며, 가치사슬(value chain)간 협력을 통한 경쟁력 강화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산업자원부는 기업 전반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대·중소기업 간 협력과 동반성장이 중요하다고 보고 인프라 구축과 상생협력 프로그램 발굴·지원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2006.6월 발효)하였습니다. 동법은 민관합동 '대·중소기업상생협력위원회' 구성, 범정부차원의 '상생협력기본계획' 수립 등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향후 상생협력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토대가 될 것입니다. 또한, '상생협력 연구회' 출범(2006.7), '상생협력 국제 컨퍼런스' 개최(2006.10) 등을 통해 기업 전반에 확산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상생협력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시장에서 효과성이 높은 프로그램들을 발굴하여 기술·인력·자금·마케팅 등 분야별 체계적인 지원정책을 확충하였습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R&D부터 제품 구매까지 협력하는 부품·소재 공동 R&D(2006년 1,089억원),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 사업에 대한 지원(2006년 160억원)을 지속 확대하였습니다.

대기업 전문인력의 중소기업 파견 및 대기업 교육시설의 중소기업 개방 등을 통해 중소기업들의 인력난 해소를 지원하였으며, 반도체분야 수급기업펀드 조성(1,500억원), 전력·전기산업 전문투자조합(535억원) 등을 통해 협력기업의 자금난 완화에도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대기업의 브랜드와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중소기업들의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대·중소기업 벤더협력단'을 출범(2006.9)시켰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30대 그룹 대기업을 중심으로 상생협력이 확산되는 등 가시적인 성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4개 그룹에만 설치되었던 상생협력 전담조직이 15개 그룹까지 확산되었으며, 대기업이 협력기업의 역량개발을 위해 지원하는 상생경영 투자액도 1조원을 넘었습니다.

30대 그룹의 상생협력 프로그램 예시

- ▶ 맞춤형 중소기업 기술지원(포스코)
- ▶ 상생경영 아카데미 운영(SK텔레콤)
- ▶ 수급기업투자펀드(삼성전자, 하이닉스)
- ▶ 사내벤처투자조합 결성(KT)
- ▶ 2,3차 협력업체지원단 운영(현대차)

앞으로 짧은 시간 내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이 확고히 뿌리내리고 확산될 수 있도록 제조 대기업과 1차 협력업체를 중심으로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상생협력을 유통, 건설 등 異업종으로까지 확대하고, 특히 상생협력 성과가 2, 3차 협력업체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정책수단을 강구하겠습니다.

산업자원부는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역량 제고, 상호신뢰, 기업 생태계 경쟁력 강화의 토대 위에 대·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같이 높여나가 '동반성장과 지속번영을 통한 희망한국'을 건설하는 데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중소·영세자영업자 경영 활성화

우리나라의 중소유통업은 업체 수 기준 약 63만개사, 고용인력 수 기준 약 124만 명이 종사(20인 미만 소매업 기준, 통계청)하는, 이른바 서민경제의 중추이자 지역경제의 모세혈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996년 유통시장 개방 이후 대형마트 등 새로운 유통업태의 확산과 편리하고 쾌적한 쇼핑환경 선호, 주말 일괄구매 확산 등 소비자의 구매패턴 변화 등이 맞물려 중소유통업의 영업기반이 지속적으로 위축되고 있습니다. 이에 산업자원부는 국내 유통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중소유통업이 급변하는 유통환경에 적응하고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첫째, 중소·영세자영업자들의 협업화·조직화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 프랜차이즈 경영방식의 확산, 중소유통 공동 도매물류센터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소·영세자영업자들의 프랜차이즈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2007년 9월 국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중소유통업의 물류단계 축소 및 공동물류를 통한 비용 절감을 위해 지난 2003년부터 추진해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사업은 금년에도 인천, 원주, 목포를 추가하여 총 18개소가 운영 중이거나 현재 건립 중에 있습니다.

둘째, 재래시장에 대한 지원은 중소기업청을 통해 기존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및 경영혁신 지원 사업'을 일부 보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방 공설시장을 현대식 공설마트와 전통시장으로 차별화하여 육성하고, 방송·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재래시장 홍보를 확대하는 등 기존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재래시장 시설개선 지원실적 및 계획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계획
지원시장(개)	145	171	77	87	82
지원금액(억원)	834	1,650	1,268	1,478	1,906

※ 자료: 중소기업청

셋째, 대형유통업체들이 중소유통업과의 자율적인 상생 협력을 추진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역별 상생발전협의회, 유통상생 간담회 등을 통해 대형유통업체들의 지역공헌사업 등을 유도하는 한편, 대형유통 판매정보(POS Data)를 중소유통에 공유하는 사업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유통 상생 간담회(2007.6.13, 서울플라자호텔)

향후, 정부는 무엇보다 중소·영세자영업자들이 공동구매 및 공동물류를 통한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프랜차이즈 방식으로 조직화된, 이른바 '혁신형 중소 마트'를 집중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프랜차이즈 성공모델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새로이 제정되는 '가맹사업법'에 근거하여 공동물류센터 건립 지원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중소유통업 경쟁력 강화는 정부의 지원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과제는 아닙니다. 중소유통업 스스로 급변하는 유통환경 변화에 적응하고 소비자들의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 다각적인 혁신방안을 강구하고 보다 적극적인 경영방식을 추진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산업기술인력양성

지식경제시대는 글로벌 인재 경쟁의 시대로 국가 경쟁력의 핵심은 창의성과 전문성을 보유한 고급 지적 자원입니다. 산업자원부에서는 우수인력이 이공계로 유입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이러한 인력을 최우량 인재로 키우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오고 있습니다.

2006년 5월에는 수요자인 산업계를 대변하는 산업자원부와 공급자인 대학을 관장하는 교육인적자원부가 국가 경쟁력 확보의 핵심이 우수한 공과대학의 육성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양 부처 공동으로 '대학 혁신과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한 공동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양부처가 긴밀히 협조하여 다음과 같은 다양한 인력 정책을 수립·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주니어 공학교실을 통해 초중고생의 과학기술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고 우수한 과학기술 인재를 조기에 확보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04년부터 지원한 주니어 공학교실을 통해 총 239개 초등학교에서 기업 임직원이 강사가 되어 생생한 실험실습 교육이 실시되었습니다.

둘째, 차세대 먹거리를 창출할 핵심인재 양성을 위해 전국 51개 대학원 실험실을 '최우수 실험실'로 선정·지원함으로써 차세대로봇, 바이오, 이동통신 등 10대 성장 동력 분야 총 507명의 핵심우수 인재를 양성하였습니다.

셋째,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여성인력의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전국 5개 권역별로 1개 대학씩을 공학교육 선도대학으로 선정하여 여성친화적인 공학인프라 조성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여학생의 공학교육 적응도를 높이고, 나아가 산업체 현장적응력을 향상시킴으로써 미래 인적자원 확보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넷째, 산학협력의 대표적 사업으로 2004년부터 추진해오고 있는 산학협력 중심대학사업을 통해 8대권역의 13개대학을 대학-기업간 협력의 거점(Hub)으로 육성해오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족회사(교육협력 시스템, 대학-기업간 맞춤형 R&D)의 수가 2004년 1,350개에서 2006년에는 6,420개로 늘어나는 등 산학협력이 양적으로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과대학의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방법을 산업계 수요자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기 위한 공학교육 혁신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현장실무능력을 갖춘 창의적 공학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2010년까지 4년제 공과대학의 50% 수준까지 공학교육인증을 확대하고, 기술의 융·복합화에 따른 공학교육체제의 개편을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나라가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여성인력 활용촉진, 해외기술인력 유치, 고령노동인력의 전직지원 활성화 등 기술인력의 양성·수급채널 다각화 방안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2007년도 산업기술인력양성사업 예산

[단위: 백만원]

구 분	세부 사업 추진 내역
핵심기술인력 양성 (10,300)	- 전략기술인력양성(4,800) - 특성화·전문계고육성(4,500) - 여성·청소년 인력양성(1,000)
현장기술인력 고도화 (20,400)	- 현장기술인력재교육(18,000) - 산업별인적자원개발협의체(2,000) - 해외 우수기술인력 유치(400)
공학교육혁신 (8,800)	- 공학교육혁신센터(7,800) - 공학교육인증지원(1,000)
일자리 창출 촉진 (16,000)	- 이공계대졸 전문기업 기술연수 사업(10,000) - 중소기업 고급연구인력 고용지원(6,000)
총 계	55,500

지역균형개발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지역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는 2006년에도 다양한 지역산업 진흥 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첫째, 지역산업 육성을 위하여 비수도권 13개 광역시·도별로 비교우위가 있는 전략산업을 선정하여 지원하였고, 지역산업의 중장기 비전과 지역별 특성화정책 수립을 위해 지역산업 로드맵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리고 특화자원(예: 진주 실크, 담양 대나무 등)의 개발·상품화로 지역산업 기반 창출을 지원하고 있으며, 개방형 지역사업의 추진으로 지역사업과 외국인투자를 연계하는 등 지역사업의 국제화를 추진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들로 인하여, 지방 제조업 노동생산성 및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방제조업의 생산 증가로 지방의 지역 총생산액(GRDP) 비중이 2003년부터 증가하고 있으며, 1인당 GRDP도 2004년부터 수도권을 추월하고 있습니다.

둘째, 기존 생산중심의 산업단지에 연구기능을 접목시키기 위한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창원, 구미 등 7개 시범단지를 지정하여 산업단지 입주기업과 대학·연구소 간 네트워크 강화를 지원한 결과 산학연 협력과 기업 간 제휴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2007년에는 이러한 성과를 확산하기 위해 시범단지를 추가 지정할 계획이며, 단지별 '맞춤형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한국형 클러스터 성공모델을 도출하고자 합니다. 향후에는 중핵단지의 성과를 주변의 연계단지로 확산해 나가면서 정부지원 없이도 자생적 경쟁력을 갖는 세계적인 클러스터를 만들어나가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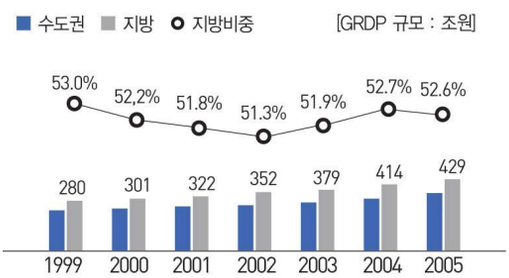
제조업 노동생산성 연평균 증가율(%)

	2000~2002년	2003~2005년
수 도 권	7.1	6.0
지 방	6.4	1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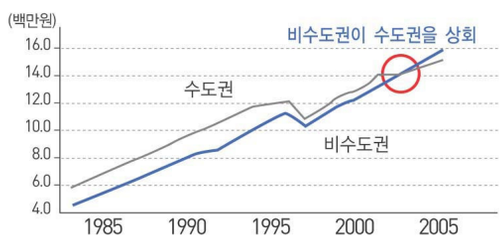
제조업 생산 연평균 증가율(%)

	1999~2002년	2003~2005년
수 도 권	6.5	5.8
지 방	5.8	1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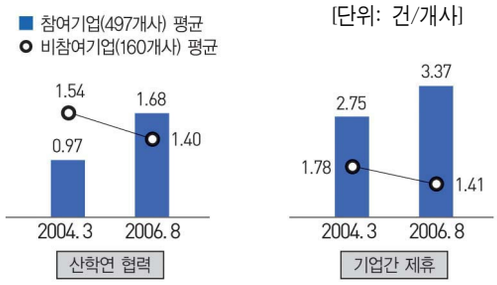
지역총생산(GRDP)비중 변화 추이



1인당 지역총생산(GRDP) 비중 변화 추이



산학연 협력 및 기업간 제휴 현황(2006년 9월 KIET)



셋째, 전국 광역시·도별로 16개의 테크노파크를 조성하여 지역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와 산학연 공동 R&D 협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테크노파크는 창업보육, 연구개발, 교육훈련, 시험생산 등을 통해 기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지역혁신 주체를 통합·연계하여 지역혁신거점기관과 지역별 기업지원 종합서비스를 통한 단일창구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넷째, 지역사업의 중복방지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테크노파크를 지역거점기관으로 육성하여 지역혁신사업 추진체계의 단순화·체계화를 추진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하여 테크노파크가 지역거점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테크노파크 원장에게 실질적 법인의 대표권 및 운영자율권을 보장하고, 성과에 따라 보상을 부여하는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였습니다.

테크노파크 주요성과

지원사업	구 분	2004	2005	2006
창업보육	업체수	386	429	543
	총매출액(억원)	5,839	7,208	10,827
연구개발	건수	120	214	259
	특허건수	84	45	387
교육훈련	건수	156	340	381
	교육인원(명)	5,591	9,376	10,660

다섯째, 지역투자 확대기반 구축을 위하여 기업의 지방이전 활성화를 추진하였습니다. 지방이전 부지의 사전알선 및 정보제공 등 종합서비스를 확대하였으며, 중앙정부의 기업이전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의 조기 매칭재원 마련을 유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산업단지 및 입주기업체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후화된 산업단지의 정주환경 개선 등 구조고도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고령화 및 웰빙친화 산업 육성

고령친화산업 육성

우리나라의 고령화는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키는 위협요인이 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고, 고령친화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요인이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산업자원부는 고령친화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마련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고령친화산업진흥법'을 제정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등 고령친화산업의 육성을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였으며, 고령친화제품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우수 고령친화제품 품질 표시 및 우수사업자 지정제도(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둘째, 상용화가 용이한 단기기술개발과 신기술 융합제품 및 의료기술개발 제품 등 기술파급 효과가 큰 장기과제를 병행하고 지원규모를 확대하였습니다. 셋째, 고령자·장애인 복지표준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고령자·장애인 관련분야 표준을 제·개정하여 제품의 품질, 생활안전성과 고령자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였으며, ISO 표준 작업에도 적극 참여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실적

	2005	2006
인프라 조성	• 고령친화산업 발전방안 수립	• 고령친화산업진흥법 제정 • 발전협의회 구성 및 협회 설립
기술개발/기반구축 (억원)	• 기술개발: 126 • 클러스터: 30 • 산업화지원센터: 10	• 기술개발: 140 • 클러스터: 31 • 산업화지원센터: 18
표준화	• ISO 총회 참석 및 아국 의견 반영 • 규격 9종 제정 및 3종 개정	• 표준화 계획 수립 • 표준 2종 제정 • 규격 3종 제정 및 4종 개정

2007년도 추진계획

인프라 조성	• 고령친화산업법 시행령 제정 • 우수 고령친화제품 품질 표시와 우수사업자 지정제도 마련
기술개발/기반구축	• 11개 과제 205억원 지원 • 종합체험관 구축: 30억원
표준화	• 고령친화용품 관련 규격 4종 및 표준 5종 제정 • 고령자/장애인 관련 규격 20종 개정

웰빙친화산업 발전기반 구축

1990년대 이후 생활문화에 대한 소비자 의식이 변해감에 따라 웰빙이 하나의 생활양식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어 웰빙화 시대는 정보화 시대 이후의 제4의 물결이라고 할 정도로 개인과 사회 전반의 변화를 주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웰빙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대되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신제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의식주와 관련성이 높고 산업으로서의 가능성이 큰 섬유 및 생활용품분야에 첨단기술을 융·복합화하여 관련산업을 육성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웰빙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고자 합니다.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2006년에 처음으로 사업계획을 마련하고, 12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2006년도 사업수행 내용을 보면, 기술수요 조사를 통해 접수된 과제 중 천연염료 염색사, RFID를 내장한 의료용 스마트 헬스밴드 등의 과제가 선정되었고, 관련 전문가에 의한 심의를 통해 15개를 선정하여 1억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였습니다. 2007년도 이후 사업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웰빙친화적 상품의 디자인, 마케팅, 브랜드 개발 등을 적극 지원하여 웰빙친화산업을 지속가능한 산업 즉 LOHAS (lifestyles of health and sustainability) 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노사관계의 안정

계획한 일이 실패로 돌아가거나 기대에 어긋나 매우 딱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흔히 낭패(狼狽)란 단어를 사용합니다. 낭패의 유래는 본래 전설 속에 나오는 이리의 모습을 한, 두 마리의 동물이름입니다. 낭(狼)은 앞다리가 길고, 패(狽)는 앞다리가 짧은 동물로 낭은 패가 없으면 서지 못하고, 패는 낭이 없으면 걷지 못하므로 반드시 둘은 서로 도와 협력해야만 공존공생할 수 있습니다. 노사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립적 관계가 아닌 공동운명체적 노사관계가 구축되어야만 하며, 이를 통해 우리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해 나갈 수 있습니다. 산업자원부는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노·정이 함께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외국인투자 유치에 적극 나선 것입니다. 그간 노사정 대화는 주로 제도 개선방향에 초점이 맞춰져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면서도 최종합의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동계와의 토론을 적극 추진하였고, 2006년 4월 18일 한국노총과 KOTRA 간 외국인직접투자 유치를 위한 공동협력 약정이 체결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한국노총 위원장과 함께 미·일 등을 상대로 해외 투자 홍보를 전개하였습니다. 이는 외국인 투자가들이 우리나라 투자 유치 저해요인으로 생각하는 노사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되었으며, 외국인 투자가들 또한 우리나라의 특수성 등을 인식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둘째,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정·간 발전적인 토론을 통해 새로운 노정관계를 구축한 것입니다. 최근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창출능력이 저하됨에 따라 노동계의 현장 목소리 청취를 통해 우리 산업정책에 적극 반영시키기 위해 양대 노총과의 정책간담회를 추진하였습니다. 2006년 7월에는

한국노총과, 8월에는 민주노총 지도부와의 정책간담회를 통해 일자리 창출, 제조업 공동화, 양극화 해소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토론하였습니다. 투쟁일변도가 아닌 협력적 노사관계 전환의 필요성 공감, 노동계와의 서로 발전적 토론이 가능한 파트너로 인식되었다는 점 등이 큰 수확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셋째, 노사로드맵, 비정규직 보호법안 관련 노사관계의 선진화를 위해 참여정부 출범 초기부터 노사정 간 논의를 진행해 온 노사로드맵이 9월 극적인 합의를 통해 연내 입법에 성공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상생적인 노사관계 구축에 있어서 노사 간 자율적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장기간 논의해 온 비정규직 보호법안도 입법에 성공하였습니다. 국내 비정규직 규모는 2006년에 무려 545만 명에 달하며, 임금수준은 정규직 대비 63%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2006년 수출이 3,255억불로 4년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는 등 긍정적인 신호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대내외 환경여건은 만만치 않습니다. 글로벌 경쟁 심화, 중국·인도의 맹추격, 고유가 지속, 환율하락 등 기업 경쟁환경이 점차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① 합리적 노동운동 여건 조성을 위한 공정한 노사관계 룰 구축, ② 고용안정·임금개편·생산성 향상이 선순환되는 제도 설계 지원, ③ 비정규직 고용의 안정성과 고용 흡수력 제고, ④ 노사 자율의 분쟁 해결 및 관행 확립, ⑤ 업종별 노사 T/F팀 구성·운용 및 운영매뉴얼 작성 등을 통해 협력적 노사관계가 조기에 성공적으로 구축되도록 차질없는 산업정책들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안전관리 강화

전기제품 안전관리

전기용품안전관리제도는 전기용품 안전기준의 제·개정, 안전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도, 감독업무가 주요 내용입니다. 2006년도에는 업계부담 경감과 안전인증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42단계로 구분되어 있던 전기기기 제품분야의 소비전력 범위 구분을 16단계로 통합하여 제조업체가 안전인증 대상 모델수를 축소하였습니다. 2006년부터 2년간 전체 안전기준 234종에 대한 전면 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2006년에는 족욕기 등 9종의 안전기준을 제정하였고, 안전사고 발생빈도가 높아 정비가 시급한 기준을 101종 개정하였습니다. 한편, 자율안전 확대 및 현행 안전인증 대상품목 수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전기용품안전관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도별·유형별 안전기준 제·개정 추진현황

[단위: 안전기준 수]

구분	신규 분리 제정	개정			
		추가 삭제	전면	부분	계
2006년	9	26	3	82	101
2007년 (예정)	10	6	3	125	133
계	19	21	6	207	234

공산품 안전관리

공산품 안전관리를 위해 공산품안전관리제도를 개편하여 2007년 3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종전의 안전검사(의무), 안전검정(임의), 품질표시(임의)로 구분되어 있던 공산품을 안전인증(의무), 자율안전확인(의무), 안전·품질표시(의무)로 개편하여 선진기준을 대폭 수용하고 기업·소비자의 자율성을 확대하였습니다. 아울러, 신속조치제도를 신설하여 안전관리대상이 아닌 품목중에서 위해성이 확인되면 해당 공산품을 판매금지·개선 등의 시정권고 또는

언론에 공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공산품안전망을 통하여 불법 공산품에 대한 유통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공산품 안전에 대한 대국민 안전의식을 고취할 계획입니다.

승강기 안전관리

승강기는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의해 제조, 검사, 유지보수, 사용 등으로 구분하여 분야별 안전관리제도를 구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특별관리대상 승강기의 지정요건의 구체화 및 승강기 보수업 등록의 취소·정지 등의 근거와 과징금의 부과근거를 조문으로 분리함으로써 과징금 부과의 요건 및 기준을 구체화하였습니다. 검사기준을 종전 일본식 체계에서 국제기준으로 개선하고, 신제품인 '기계실 없는 승강기' 검사기준을 국내 환경에 적합한 기준으로 제정하였으며, 업계가 이해하기 어려운 검사항목의 내용을 명확하게 개정하는 작업도 병행하였습니다. 또한 승강기 설치대수의 급속한 증가로 안전사고도 계속 증가추세에 있어 승강기 산업진흥과 안전관리제도 혁신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과 추진일정을 정립하기 위해 '승강기 발전로드맵'을 수립하였으며, 이를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로드맵 내용을 관련법령에 반영하여 개정 추진 할 계획입니다.

국가기반보호시설 관리

정부는 핵심 기능을 수행하는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의 시설을 '국가기반체계'로 선정, 각 시설에 대한 재난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국가기반체계의 기능을 유지함으로써 위기상황 발생시 기본적인 국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가기반체계 중 에너지 공급에 필요한 생산시설과 비축시설 34개를 국가기반시설로 지정하여 지속적인 재난 예방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에너지·산업시설에 대한 풍수해, 대설, 가뭄, 지진 등 자연재난의 위험이 높은 시설, 노후화 또는 결함으로 인하여 보수·보강 등의 정비가 필요한 시설 등 2,837개 시설을 국가기반·특정관리대상시설로 지정하여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있습니다.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자연·인적재난대책(9개분야)에 대한 국가안전관리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재난유형별 예방·대비·대응·복구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전력공사 등 22개 재난관리기관별 국가안전관리 세부집행계획을 승인하여 종합적인 재난·안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대통령훈령 제124호)'에 의거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 '위기관리센터' 주관으로 실시되는 위기관리 통합연습 정부부처 평가에서 상위(2005년 3위, 2006년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광산안전 관리

광산안전관리는 1963년 3월 '광산보안법'이 제정됨으로써 체계적으로 제도화되었으며, 동부, 중부, 서부, 남부 등 4개 광산 보안사무소를 광산밀집지역에 설치하여 약 20명의 광산보안관이 안전 업무를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국내 광산의 최근 3년간 전체 재해에 대한 사망재해 점유율이 12%에 근접하고 있는데, 이처럼 국내광산의 재해율이 높은 이유는 높은 인력의존도, 광업경기 침체에 따른 안전시설 투자기피와 관리의식 부재를 꼽을 수 있습니다. 2006년에는 시설현대화 및 안전관리강화 노력 등에 힘입어 광산사고로 인한 총재해자가 43명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2명이 감소하였으며, 특히 사망사고가 5명에서 1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광산재해현황

[단위: 명]

구 분	1990	2003	2004	2005	2006
총 재 해 자	4,198	79	72	45	43
석 탄	3,773	62	48	22	31
일 반	425	17	24	23	12
사 망	130	11	9	5	1
중 상	2,117	28	24	18	14
경 상	1,951	40	39	22	28

기업의 사회적 책임

글로벌화 진전으로 기업의 영향력이 확대되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이행에 대한 소비자, 종업원, 지역사회 등 이해관계자의 요구가 증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를 반영, ISO에서는 2004년 6월말부터 기업을 포함한 모든 조직에 적용가능한 사회적 책임 국제표준(ISO 26000) 제정을 위한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이제 경제적 수익성뿐만 아니라 환경적 건전성, 사회적 책임성을 함께 고려하는 지속가능경영이 기업 장수의 핵심전략으로 부상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인식은 아직 초기단계입니다. 가령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발표하는 부패인식도지수에서 아직도 중위권(2005년 159개 중 40위)에 머물고 있다는 점과 CSR을 기부 등 물질적 기여와 동일시하는 점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지속가능경영의 도입이 늦은 국내의 현실을 감안하여 산업자원부는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인식제고와 기업의 자율적 지속가능경영 도입촉진을 위한 기반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제표준화에 대한 동향파악과 대응체제 구축을 추진 중입니다.

우선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해 2006년 9월 대한상의 · 전경련 · 무역협회 ·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 4단체와 합동으로 '경제계 윤리경영 이행 선포식'을 갖고, ▲투명경영 확산을 통한 신뢰회복 ▲윤리경영 정착 및 확산 ▲적극적 사회공헌 실천 ▲대 · 중소기업 상생협력 증진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노력 강화 등을 약속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기업이 자사의 지속가능경영 수준을 스스로 진단할 수 있도록 개발한 지표를 웹(www.ips.or.kr)에 공개하였습니다.

지속가능경영의 주체는 결국 기업입니다. 산업자원부는 기업의 자율적 지속가능경영도입의 기반구축을 위해 지속가능경영의 추진실적과 성과를 대외에 공표하는 지속가능보고서의 발간을 지원합니다. 우리 기업의 실정에 맞는 한국형 보고서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기 위해 용역을 추진하여, 2007년도에 동 가이드라인의 개발 완료 후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지속가능보고서 발간 우수기업을 발굴, 표창하여 모범사례를 전파할 계획입니다.

사회적 책임의 국제표준화 동향에 대응하기 위해 2005년 6월 SR표준화포럼을 구성한 이래 국제표준안에 대해 정부, 기업, 공공기관,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국제논의 과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SR표준화포럼 홈페이지 개설을 통해 신속한 정보제공과 국내 인식제고를 도모하고 있으며(www.kssn.net/SR/), 논의동향에 대한 세미나도 지속적으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ISO 26000 제정 경과

일자	주요 내용
2001.4	이사회, SR 표준개발 검토 요청
2002.9	SR에 대한 전략자문그룹(SAG) 구성
2004.4	기술관리부(TMB)에 권고안 제출
2004.6	TMB, SR Guidance 표준개발 결정
2005.1	SR 표준 개발 시작
2005.3	ISO와 ILO간 MOU
2005.3	제1차 SR총회(브라질 살바도르)
2005.9	제2차 SR총회(태국 방콕)
2006.5	제3차 SR총회(포르투갈 리스본)
2006.12	ISO와 UN Global Compact 간 MOU
2007.1	제4차 SR총회(호주 시드니)
2007.11	제5차 SR총회(오스트리아 비엔나)
2010.말	SR 표준 발표(예정)

남북 상생협력의 활성화

남북은 6·15 공동선언을 통해 경협 활성화를 통한 사실상의 통일여건 조성에 합의한 후, 인적·물적 교류확대와 함께 경협 인프라 확충과 법·제도적 기반 조성 등으로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의 기반을 구축하여 왔습니다. 특히 2006년 북핵 사태에도 불구하고 남북교역은 전년대비 27.8% 증가하는 등 지속적인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남북 및 주변국 간의 불신해소와 신뢰형성의 실마리가 보이는 가운데 지속적인 남북 상생의 산업·지원 협력기반을 구축하는 데 중점 노력하고 있습니다.

남북교역 및 투자 확대 기반 마련을 위하여, 남북산업자원유관기관 간 협력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남북산업자원혁신포럼 구성·운영(7.20~12.22, 6회), 제12차 남북경추위(6.3~6)에서 경공업과 지하자원 개발 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하고, 남북상사중재제도 시행을 위한 남북 상사중재위원명단 교환(7.5), 대북 비즈니스 리스크관리 매뉴얼 작성(12월) 등을 통해 우리 기업에 대한 대북 교역·투자과정에 실질적 도움을 주는 데 노력하였습니다.

2006년 남북교역현황

[단위: 천불, %]

구 분			반출입	증가율
상업적 거래	교역	일반	304,130	44.9
		위탁가공	252,958	20.6
	경제협력 사업	개성공단	298,796	69.0
		금강산관광	56,654	△34.9
		기타경제협력	15,530	149.1
	합 계		928,069	34.5
비상업적 거래	대북 지원	민간지원	407,560	67.8
		정부지원	11,696	△90.4
	사회문화 협력사업	사회문화협력	2,414	209.0
	합 계		421,670	15.1
총 계			1,349,739	27.8

개성공단사업의 성공적 완수를 위해 제도적·환경적 여건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개성공단 본단지 전력공급을 위한 송전소를 건설하였고(2006.4~2007.6), 개성공단 1단계 분양 조성을 위한 투자시찰단 파견(3월, 2회), 아파트형공장 착공(5.17), 개성공단 입주기업과 구매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MOU 체결(5월, 12건), 개성공단 투자안정성을 위한 관계기관 간 외국인투자유치 T/F팀 구성·운영(7월, 2회), 외국인투자시찰단 파견(2회)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2007년에는 제2차 남북정상회담(10.2~4)과 제1차 남북총리회담(11.14~16)에서 조선협력단지 건설, 해주경제특구 건설, 자원개발협력 등의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남북이 공동 번영하는 경제공동체 건설의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제1차 회의(12.4~6)에서는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경협사업의 구체적인 일정과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한편, 11월에는 북한과 합작개발중인 정촌 흑연광산에서 생산된 흑연제품 200톤이 최초로 국내에 반입됨(11.24)으로써 남북자원협력의 첫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 정착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란 대량파괴무기(WMD: weapons of mass destruction) 제조에 사용가능한 물자 및 기술이 특정국가 및 테러조직에 공급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국제체제를 말합니다. 오늘날 수출통제의 대상이 되는 통제품목의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재래식 무기뿐 아니라 WMD와 그 운반수단이 미사일의 제조, 개발, 사용 또는 보관의 용도로 사용 또는 전용될 수 있는 일반산업용 품목(일명 '이중용도 물품')도 포함됩니다. 현재 국제적으로 다음과 같은 다자간수출통제체제가 운영 중입니다.

국제체제	통제대상	회원국	한국가입
핵공급그룹	핵무기	45개국	1995년
호주그룹	생화학무기	40개국	1996년
미사일 기술통제체제	미사일 및 운반체	34개국	2001년
바세나르체제	재래식무기	40개국	1996년

지난 2004년 UN안전보장이사회에서는 결의1540호를 통해 UN회원국의 준수사항으로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의 강화를 규정하는 등 최근 동 제도가 국제무역규범으로 정착되어 감에 따라, 우리도 2006년 국제수준의 수출통제제도를 정비하는 등 수출통제 이행여건을 조성하는 데 역점을 두고 다음과 같이 노력하였습니다.

먼저 위의 UN안보리 결의에 의한 수출통제 강화 요청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2006년 12월 '대외무역법'을 개정하였습니다. 수출허가 대상 전략물자의 범위를 정비하여 관리범위를 명확히 하고, 전략물자의 국내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확인·신고·통보의무의 신설, 전략물자의 이동중지명령 등을 포함하였습니다. 4대 수출통제체제의 통제지침을 분석하고 주요 통제품목에 대한 설명을 담은 정부 및 기업 실무자용 전략물자 수출통제 교재인 '전략물자 품목가이드(전5권)'를 제작하여 보급하였습니다. 또 기업용 '전략물자 품목해설서(전5권)'를 제작하여 보급하였습니다.

전략물자관리시스템(www.yestrade.go.kr)의 보완을 통한 수출허가 등 각종 민원의 신속한 처리로 행정투명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기업의 이행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수출통제 실무능력 강화를 위해 미국 조지아대 부설 비확산연구기관(CITS)에 산업자원부, 통일부 및 방위사업청 수출통제 담당 공무원을 파견하여 3주간 연수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또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수출통제 논문 공모전, 4개 언론사와 공동기획의 특집기사 연재, 4천여명의 기업관계자에게 월 2회의 전략물자 뉴스레터 발송, 국내 최초로 수출통제 관련 교재인 '수출통제(이론과 실무)' 편찬 등 홍보와 교육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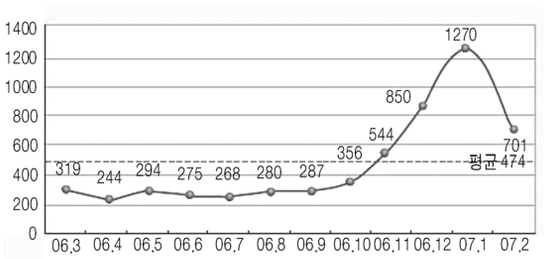
향후에는 점점 구체화·체계화되는 국제수출통제 이행요구를 반영하여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도록 행정체계와 조직을 보강하고, 미국·EU시장에서의 통관신속화를 위해 기업의 이행수준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2007년도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 추진방향

- ▶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지정 확대: 7개사(2006년) → 30개사(2007년)
- ▶ 중소기업용 전략물자관리 프로그램 보급 확대: 100개사(2006년) → 300개사(2007년)
- ▶ 대외무역법 개정사항 집중 홍보를 통한 법령 조기정착 및 기업 적응력 강화
- ▶ 전략물자관리원 설립(2007.5): 수출 통제의 효율적 이행과 기업 무역활동 지원

사이버 안전

현재 우리는 인터넷을 통하여 전자상거래, 금융거래, 정보검색 등 일상생활에 중요한 일들을 사이버공간에서 손쉽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기능으로 인터넷 침해사고·스팸·개인정보침해 등으로 인해 사회·경제적 손실규모 역시 급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국가사이버안전센터(NCSC)에 의하면, 2006년 상반기 월 300건 내외의 사이버침해사고가 발생하던 것이 하반기 들어 급증하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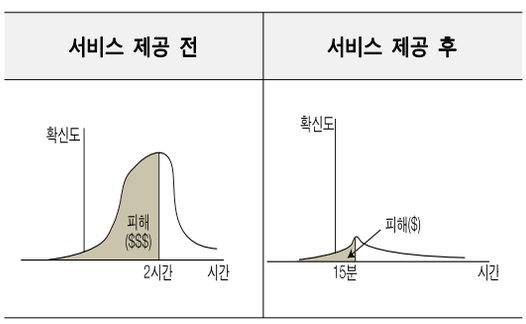
▲최근 1년간 월별 사이버침해사고 발생추이(출처:NCSC)

이에 산업자원부에서는 사이버안전 확보대책 일환으로 국민생활과 밀접한 전력·가스·석유 등 에너지 분야의 정보통신기반시설을 사이버공격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사이버보안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7년 9월 미국 국토안보부(DHS) 주관으로 발전설비에 대한 모의 사이버공격을 실시한 결과 발전기의 운전사이클을 조작하여 발전설비를 물리적으로 파괴할 수 있는 심각한 취약점을 발견하였다고 합니다. 과거의 해커들은 단순히 기기를 다운시키거나 밸브를 열어 유해물질을 유출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발전기의 운전사이클까지 조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일깨운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전력·가스·석유 등 에너지의 안정적 수급은 국민생활 안정과 산업발전에 필수적이므로, 산업자원부에서는 1단계로 에너지분야 28개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사이버안전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사이버안전서비스의 주요내용으로는 24시간 실시간 보안관제, 침해사고 분석·대응, 취약점 분석·평가 정보보호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산업자원부에서는 2006년부터 '사이버보안센터'의 성공적 구축과 기반 마련을 위해 국내 주요 정보공유분석센터 벤치마킹 실시, 구축모델링 컨설팅 용역 시행, 센터 설립·운영을 위한 운영규칙 제정 등 기반 구축, 산하기관장 방문을 통한 센터 설립 취지 및 기대효과 설명, 산하기관들의 정보보호 중요성과 보안마인드 강화 등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아울러 본격적인 서비스 개시 이전의 보안공백 상태를 최소화하기 위해 에너지분야 기관 중 17개 기관을 우선 선택하여 보안관제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이상징후 탐지 시 해당기관에 연락 후 공동 대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과 센터상황실을 구축하여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2단계로 무역 및 산업분야로 확대 적용하여 산업자원분야 전반의 보안강화를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에너지 복지

수년간 지속되는 고유가상황과 소득양극화로 저소득층의 생활 여건이 점차 악화됨에 따라 대다수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들은 생존을 위해 의료비, 식비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에너지사용을 축소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최소한의 에너지 사용조차 어려워 생존이 위협받는 가구도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들 가구에 대해 최소한의 에너지 사용 등을 지원하기 위한 에너지복지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에너지기본법' 제정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고, 이를 통해 연간 4,480여억원을 투입하여 고효율 조명기기 개체, 단전 유예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불량 전기·가스 설비 개·보수 지원

산업자원부는 저소득 취약계층 안전을 위해 소년·소녀가장가구, 독거노인가구, 장애인가구 등 저소득 취약계층과 사회복지시설, 오지지역 22,250호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16,034가구의 LP가스 시설과 15,575 가구의 불량전기시설 개선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경제적 자활능력이 부족한 국민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 지자체와 함께 36억원을 투입하여, 노후화된 가스렌지와 배관 등을 교체하고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에너지 복지 확대

단전으로 인한 저소득층 불편 해소와 장애인 가구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력산업기반기금 150억원을 투입하여, 다양한 에너지 복지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기요금 체납으로 단전 대상인 주거용 주택에 대해 혹서기(7~9월)와 혹한기(12~2월)에는 단전을 유예하고 있습니다. 그 외 기간에도 220W의 전기를 공급함으로써 최소 생활을 유지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요금의 15%, 장애인(1~3급), 국가상이유공자(1~3급), 독립유공자에게는 각각 20%를 할인하고, 월 100kWh 이하 사용가구에 대해서는 15~35% 할인하는 제도도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고효율 조명기기 보급으로 사회적 약자에게는 에너지 비용을 절약하도록 하고 사회적으로는 에너지 소비 절감에 기여하도록 하였습니다.

가스사용에 있어서 사회복지시설 가스요금을 21% 할인하고, 동절기(10~3월)에는 요금을 체납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도 공급중단을 유예하였습니다. 지자체가 추천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지역난방 기본요금을 전액 지원하는 등 고유가에도 불구, 저소득층의 부담을 줄이는 제도를 적극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월동기간 중 단전, 가스공급 중단, 연탄배달 지연, 전기·가스 공급 애로와 안전 관련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고객감동센터)에 에너지콜센터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에너지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동절기 에너지 복지 지원방안과 수급안정을 위해 한전, 가스공사, 석유공사 등과 함께 '따뜻하게 겨울나기' 회의를 통해 동절기 에너지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민 신재생에너지 이용 지원

서민용 영구임대아파트 1,600세대에 세대당 태양광 설치비 400만원씩 총 64억원을 지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였습니다. 태양광 설비가 설치됨으로써 세대당 전기요금이 월 4,000원 저감되었습니다. 하우스채소를 재배하는 정신지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15억원을 들여 태양광 50kW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지열을 이용한 냉난방장치 설치도 지원하였습니다.

에너지 복지 서비스 지원 실적

내용	실적
에너지 서비스 대상 확대	전기요금 할인 100만 가구 조명기기 무상공급 5만500 가구
취약계층 에너지 안전시설 개선	45,157건

한편 산업자원부는 취약계층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에너지복지를 확충할 목적으로 에너지기업이 참여하는 '에너지재단'을 설립, 12월 현판식을 가졌습니다. 2007년을 에너지 복지 원년으로 하여, 에너지재단과 민간·정부 간 에너지복지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민관공동의 에너지 복지 추진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그 첫 사업으로 2007년부터 에너지재단과 공동으로 저소득층의 고효율 난방시설 보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안전

국민의 생활과 산업생산활동의 기반이 되는 에너지를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용하도록 하는 것을 산업자원부의 중요한 사회적 책임의 하나로 인식하고 다양한 정책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가스는 사소한 부주의 하나가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가스사고는 최근 5년간 연평균 1.5%씩 감소추세에 있으나, 2006년 현재 112건(인명피해: 200명)으로 선진국 대비 아직 높은 편입니다. 특히 LP가스 사고는 계속 증가하여 2006년에 총 90건이 발생하였으며, 전체 가스사고의 80.4%를 차지하고 있어 LP가스를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가스 사고 현황

[단위: 건수, %]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가스	계	110	109	112
	LPG	82	88	90
	도시가스	21	16	16
	고압가스	7	5	6

고압가스시설 안전관리

산업부문에서 수요처가 점차 확대되는 고압가스의 제조, 저장, 판매, 운송, 사용 등에 대한 철저한 관리는 물론 고압가스 저장·운송용 제품에 이르기까지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도심지 환경오염을 개선하고 석유 대체 수송 에너지를 사용하기 위해 도입된 CNG자동차 용기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CNG자동차 연료장치기준에 CNG용기 검사기준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고의사고 방지를 위해 LPG 밸브를 개방하더라도 가스출구에 압력조정기를 부착해야만 가스가 공급되도록 고안된 차단기능형 밸브를 보급하고 안전한 사용과 보급을 위해 차단기능형 밸브의 제조를 의무화하는 한편 제조·검사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LP가스시설 안전관리

LP가스 판매사업자와 소비자 간 단골·고정거래를 통해 가스판매와 함께 소비자에 대한 안전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스사고를 예방한다는 취지의 '안전공급계약제도'를 2001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2007년 12월 현재 체결률 97.6%로 정착단계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자의 자율안전관리 기반 조성을 위해 LP가스안전관리 우수판매업체에 대한 인증마크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2007년 12월 현재 전국 94개 시·군·구에 136개 업소를 선정·운영중입니다. 영세사용자를 대상으로 퓨즈콕 무료보급 3개년계획을 수립하여 총 160만 가구에 대해 단계적으로 퓨즈콕을 보급하여 2007년 12월 현재 보급률이 98.1%에 이르고 있습니다.

도시가스시설 안전관리

새로운 가스안전관리 모델인 안전관리시스템(SMS: Safety Management System) 제도를 도입하여 사업장 운영전반을 종합적으로 제어하고 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LNG제조소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제도를 도입하여 잠재적 위험요소까지 사전점검 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굴착공사자가 원콜센터에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해 도시가스배관의 매설상황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굴착공사원콜시스템(EOCS) 제도를 도입하였으며(2007.12월 '도시가스사업법' 개정법률 공포 예정) 2008년 상반기 중 동 제도를 전국적으로 시행함으로써 무단굴착으로 인한 가스사고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것입니다.

석유화학시설 안전관리

사업장 근로자와 지역사회의 안전과 직결되는 석유화학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해 노후화되고 위험성이 높은 설비에 대해 잔류수명을 평가·예측하는 잔류수명평가기법을 도입하고 위험성이 높은 설비는 장치의 전반적인 위험도를 분석하여 검사와 교체시기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RBI(risk based inspection) 등 선진기법을 확대·적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사업자의 안전관리 필수 사항을 통합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SIMS(Safety Information & Management System)를 확대·적용하는 등 안전성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송유관시설 안전관리

송유관 매설지역 굴착시 지자체, 대한송유관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유관기관 간 협의를 통해 무단굴착에 따른 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업무협조 체제를 강화하고 도유사고는 송유관시설에 대한 순찰, 관로의 압력, 주민 모니터링, 신고포상제도 등을 적극 활용하여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유행위 근절을 위해 송유관에 절취시설을 설치한 자에 대한 처벌조항 등을 신설하는 법령 정비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전기시설 안전관리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전기의 사용이 확대되면서 이로 인한 전기재해(화재, 감전)가 중요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2006년도 전기로 인한 화재는 8,059건이 발생하여 342명의 인명 피해와 399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전기화재는 감소추세이기는 하나, 전체 화재 31,778건의 25.4%로서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볼 때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전기 사용 관련 고충사항 발생시 24시간 긴급출동하여 무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안전 긴급출동고충처리제도(Speed Call)'를 도입하여 제주도와 강원 영서지역에서 시범실시하였고, 2007년도부터는 전국으로 확대(경제적 취약계층의 주거용 전기설비에 한함)하였고, 또한 사고에 취약한 재래시장 및 영·유아 보육시설 등에 대해 불량전기시설물 무료 개·보수 활동 등을 전개하였습니다. 2007년에 '전기사업법'을 개정하여 태풍, 폭설 등 발생시 특별안전점검의 실시와 Speed Call 법제화, 태양광 및 연료전지 발전설비에 대한 전기안전관리자 의무상주제도를 완화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탄광지역 개발

탄광지역은 지하자원의 개발과 함께 생산현장을 중심으로 무질서하게 자생된 촌락으로서 전반적인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대표적인 지역입니다. 산업자원부는 낙후된 탄광지역의 합리적 개발과 탄광근로자의 후생복지증진을 위하여,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탄광근로자 후생복지증진과 생활환경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석탄소비의 감소로 인해 석탄산업구조조정이 진행되어 많은 탄광이 폐광됨에 따라, 폐광지역의 경제침체가 가속화되어 1995년 12월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을 제정하고 폐광지역진흥지구개발사업(1997~2005년)을 시행하였습니다. 동 사업을 통해 탄광지역경제를 석탄산업 위주에서 지역특성에 적합한 대체산업 중심으로 대폭 전환하여 지역경제를 근원적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산업자원부는 특별법 제정이후 강원도 태백, 정선, 삼척, 영월, 경북 문경, 충남 보령, 전남 화순 등을 폐광지역진흥지구로 지정 고시하였습니다.

또한, '대체산업육성 지원계획'을 통해 연결도로망 구축과 시가지 정비 등 기반시설 사업비를 국고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산업자원부는 1999년 12월 태백시위사태 이후 급속한 폐광으로 지역경제가 어려운 가행탄광지역에 대해 2001년부터 2010년까지 10년간 감산·폐광으로 감소하는 석탄가격관련 지원금 만큼을 국고보조금으로 지원하는 탄광지역개발사업을 시행키로 하였습니다.

탄광지역개발사업은 탄광지역 주민의 소득·고용증대를 위한 대체산업단지조성, 관광지개발, 근로자주택개량사업 등 후생복지사업 등에 중점 지원하고 있으며, 2006년말 현재 강원도(태백시, 정선군, 삼척시, 영월군), 경북(상주시), 충북(보은군), 전남(화순군)에 4,679억원(누적 기준)을 지원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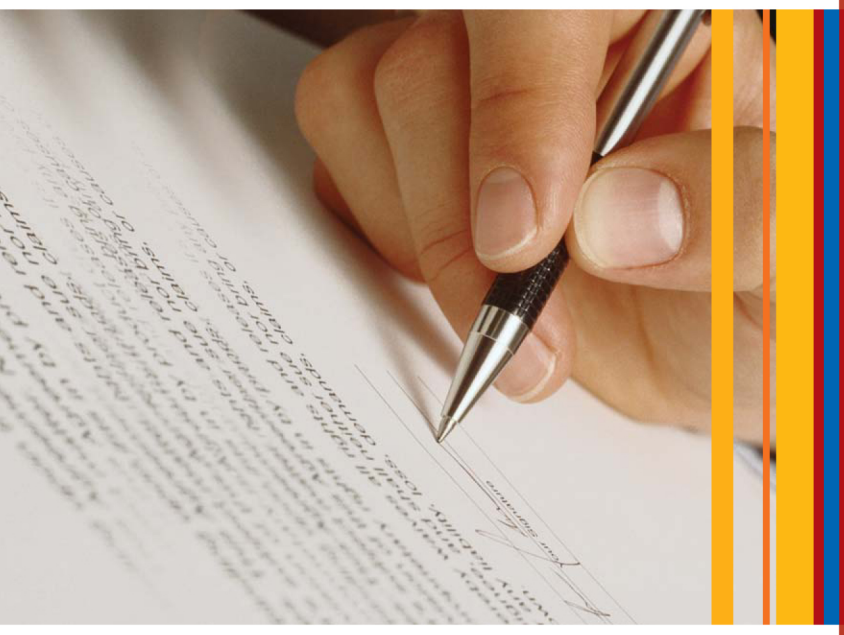
탄광지역개발사업 사업예산

[단위: 백만원]

구 분	연도별 사업예산			
	2004	2005	2006	2007 (계획)
탄광지역 개발사업	84,701	106,304	120,486	64,324

특별법을 통한 지원 내용

구 분	지방자치단체	민간자	지역주민 등
재정지원	○ 국고보조금 인상 지원 - 20% 인상 지원	○ 창업자금 등의 융자 또는 보조지원 ○ 민간개발자에 대한 재정지원 - 지자체에 귀속되는 시설의 이용료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 융자 또는 보조금 우선 및 상향지원: 지역주민 50% 이상 출자·고용시 ○ 폐광지역내 농공단지에 대한 융자지원
기타지원	○ 지방채권 발행으로 재원 확보 ○ 지역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카지노 이익금으로 기금조성	○ 조세감면 - 관련법 개정시 반영 ○ 지방세 감면 - 취득세 등(강원도 추진중)	○ 공익부문 배당액 소액주주에 특별배당: 1/100미만 주식 소유자 ○ 이주대책: 생활근거 상실자 ○ 우선고용: 지자체장 우선고용 ○ 우선구매: 농·축산물 등



05

내부활동 : 경제적 측면

Ministry of Commerce, Industry and Energy
2006 Sustainability Report

예산 및 배분

산업자원부는 예산·배분의 합리성·효율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기후변화와 화석연료 고갈에 대비하여 다각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예산의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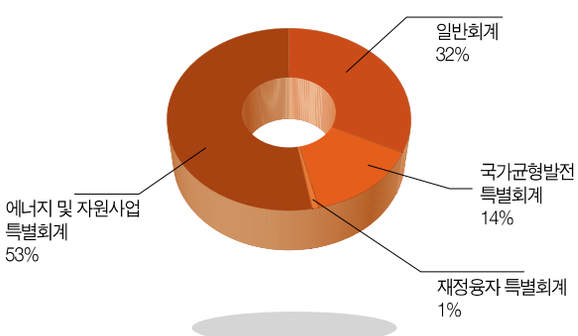
산업자원부의 재정은 일반회계와 3개의 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 예산총액 5조 422억원 중 지출액 5조 22억원의 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예산액과 지출액의 차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금액에 포함됩니다.

◇ 일반회계: 1조 5,937억원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7,107억원
- 상공지원계정: 58억원
- 무역진흥계정: 291억원
- 공업진흥계정: 6,758억원

◇ 재정융자특별회계: 593억원
- 농공단지진흥계정: 93억원
- 산업기술자금: 500억원

◇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 2조 6,384억원
- 투자계정: 1조 6,055억원
- 융자 및 유가완충계정: 1조 329억원



예산의 배분

2006년도 산업자원부의 지출은 크게 인건비, 운영비, 경상이전, 자본지출경비, 융자금 및 출자금, 정부내부거래로 구분되며, 지출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건비
- 기본금 및 수당 등: 562억원
- 일용직 및 비정규직 보수: 34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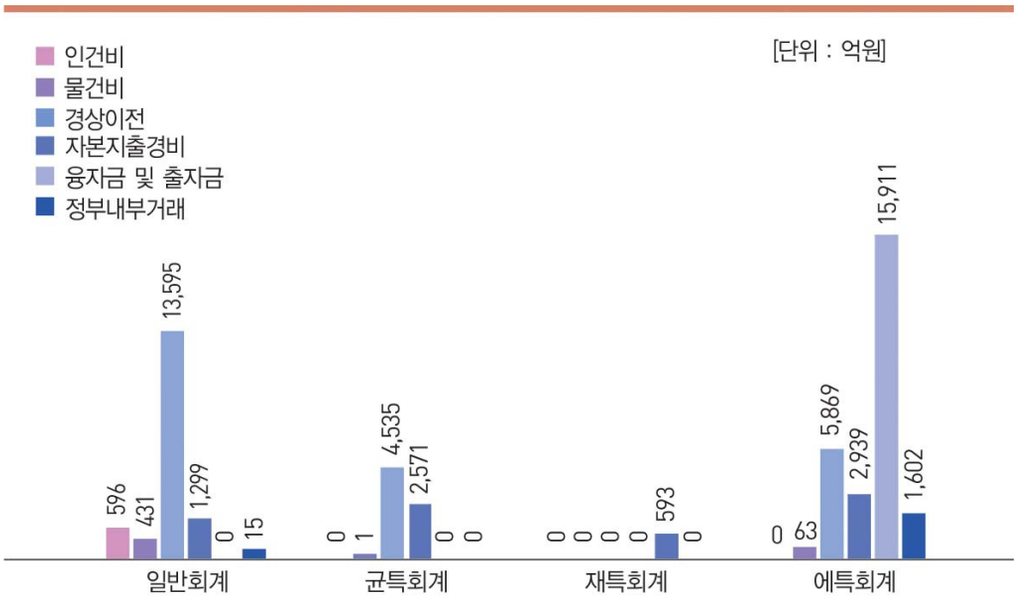
◇ 운영비
- 수용비, 공공요금 등 관서운영비: 128억원
- 국내·외 여비: 38억원
- 일반 및 특정업무비 등 업무추진비: 16억원
- 복리후생비: 7억원
- 연구개발비 등 용역비: 160억원
- 재료비 등의 시험연구비: 47억원
- 월정직책급 등 직무수행경비: 46억원
- 에너지정책연구 및 에너지정책홍보: 53억원

◇ 경상이전
- 수출보험기금, 산업기술개발, 테크노파크 조성 등 정부출연금: 1조 8,014억원
- 지역산업진흥 및 외국인투자유치 등 자치단체경상이전: 227억원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기업지방이전촉진, 탄가안정대책, 석유비축자산관리 등 민간경상보조: 5,724억원
- OECD 부담금, IEA분담금 등 해외경상이전: 33억원
- 포상금 등 보상금: 1억원

◇ 자본지출경비
- 대불, 군산자유무역지역 등의 토지매입비: 744억원
- 대불자유무역지역 등의 시설비 및 감리비: 271억원
- IKP(Invest Korea Plaza)건립 등 민간자본보조: 240억원
- 자산취득 및 시설부대비: 34억원
- 실시설계비: 10억원
- 신생에너지보급, 해외자원개발투자 등 민간 자본이전: 746억원
- 기업지방이전촉진, 지역에너지개발 등 자치단체자본이전: 4,764억원

◇ 융자금 및 출자금
- 농공단지진흥 및 산업기술자금 융자: 593억원
- 대한광업진흥공사(해외자원개발), 광해방지사업단(대체산업창업지원), 에너지관리공단(신재생에너지보급 및 에너지절약시설 설치 등), 한국가스안전공사(가스안전관리), 한국석유공사(유전개발) 등 융자금 : 1조 310억원
- 석유비축사업, 대한석탄공사 경영정상화 등 출자금: 5,601억원

◇ 정부내부거래
- 전대차관 원리금상환, 융자계정 전출금: 1,598억원
- 이자상환: 19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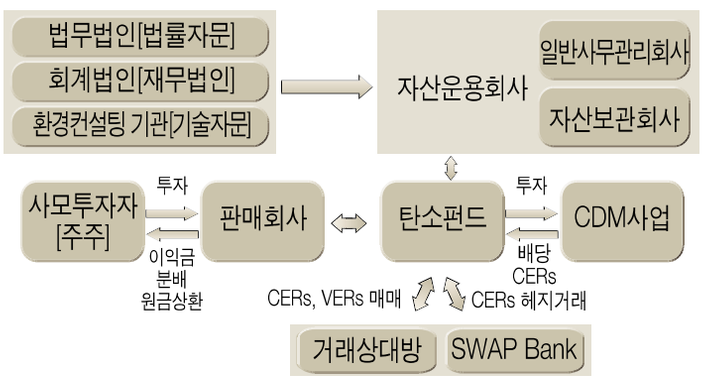
기후변화에 따른 경제적 영향

탄소펀드 조성계획

배출권이 거래되는 탄소시장은 새로운 투자처로 각광받고 있으며, 시장을 선점하려는 선진국들의 치열한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나라는 배출권을 전문적으로 거래하는 전문기관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최근 탄소펀드 조성과 함께 배출권 전문기관의 설립이 추진되고 있어 탄소펀드 조성에 약 200억원 정도를 출자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탄소펀드 조성은 온실가스의 저감사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시키고, 기업과 금융권의 탄소시장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킬 뿐만 아니라 외국금융기관의 국내 배출권 시장진출에 대비하여 국내 금융기관을 육성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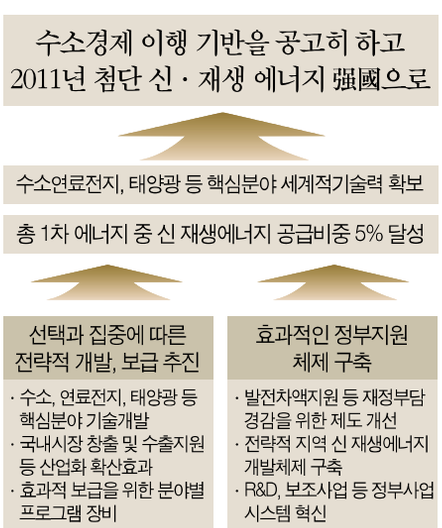
※ 2006년 시장규모는 300억불로서, 2005년에 비해 3배 성장
※ 골드만삭스 등 세계 유수의 금융기관도 배출권 거래시장에 앞다투어 진출



[CERs 관련기관]

신 · 재생에너지 공급계획

신 · 재생에너지는 석유, 석탄, 원자력 또는 천연가스 등 화석연료가 아닌 햇빛 · 바람 · 물 등 친환경, 비고갈성, 기술주도형 에너지를 지칭합니다. 산업자원부는 2011년까지 신 · 재생에너지 보급률을 5%까지 확대, 국내 기술 수준을 선진국의 70~90%까지 제고한다는 '제 2차 신 · 재생에너지 개발, 보급 기본계획'을 2003년 수립하고, 기술개발 및 보급지원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원별 보급 목표 대비 실적

(단위: 천toe)

분 야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목표	실적	목표	실적	목표	실적	목표	실적
태양열	41	33	53	36	74	35	102	33
바이오	197	131	342	135	436	181	495	274
폐기물	3,080	3,039	3,850	3,313	4,350	3,706	5,050	3,975
태양광	2.7	1.9	4	2.5	10	3.6	22	8
풍력	13	6	38	12	68	32	126	60
수력	1,116	1,226	1,123	1,082	1,129	919	1,193	867
연료전지	-	-	0.08	-	0.1	0.5	0.4	2
지열	0.8	0.4	2.5	1.4	6	2.6	12	6
합계	4,451	4,437	5,413	4,582	6,073	4,879	7,001	5,225
신재생에너지 공급률(%)	2.06	2.06	2.42	2.08	2.63	2.13	3.00	2.24

※ 목표: 제 2차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계획(2003년 12월)
※ 실적: 국내 신재생에너지 전체 설비에 대한 실적입니다. (자료원 : 에너지관리공단/신재생에너지센터)

신재생에너지원별, 연도별 보급목표

(단위: 천toe)

분 야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태양열	134	169	208	258	318	385
태양광	40	65	103	192	341	448
풍 력	230	361	652	882	1,311	1,456
소수력	170	229	298	367	446	534
수 소	-	0.1	0.1	1.3	1.3	1.3
IGCC	6.8	6.8	6.8	184	375	545
폐기물	5,630	6,150	6,870	7,110	7,540	8,930
바이오	737	768	801	833	1,050	1,082
연료전지	1.1	3.6	15	77	147	226
해 양	0.8	143	143	211	432	432
지 열	23	42	70	109	161	225
대수력	1,081	1,091	1,109	1,161	1,213	1,267
합 계	8,054	9,029	10,276	11,385	13,335	15,531
신재생 에너지 공급률(%)	3.30	3.60	3.99	4.32	5.00	5.60

산업자원부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사업 지원내역

(단위: 백만원)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수소	1,058	1,752	5,848	7,056	9,577
연료전지	5,390	7,481	14,529	18,263	30,358
태양광	4,736	5,076	9,140	14,999	19,048
풍력	3,254	3,739	8,312	10,886	16,363
태양열	2,560	1,912	1,801	1,893	3,230
바이오	1,467	2,866	4,233	4,213	7,724
폐기물	3,194	4,071	5,018	3,908	6,172
석탄이용	1,619	598	2,259	2,779	13,778
지열	475	1,205	2,196	2,143	3,252
소수력	226	426	706	930	644
해양	-	295	200	560	1,008
정책(기타)	395	1,802	2,416	3,949	1,455
학술진흥	600	-	-	300	525
기타	100	1,740	2,130	7,491	2,654
합 계	25,074	32,963	58,788	79,370	115,788

※ 신재생에너지관련 지원에는 기술개발·보급·융자 등이 있으며 상기 표는 기술개발에만 관련된 내용입니다.(참조: 43페이지)

행정 혁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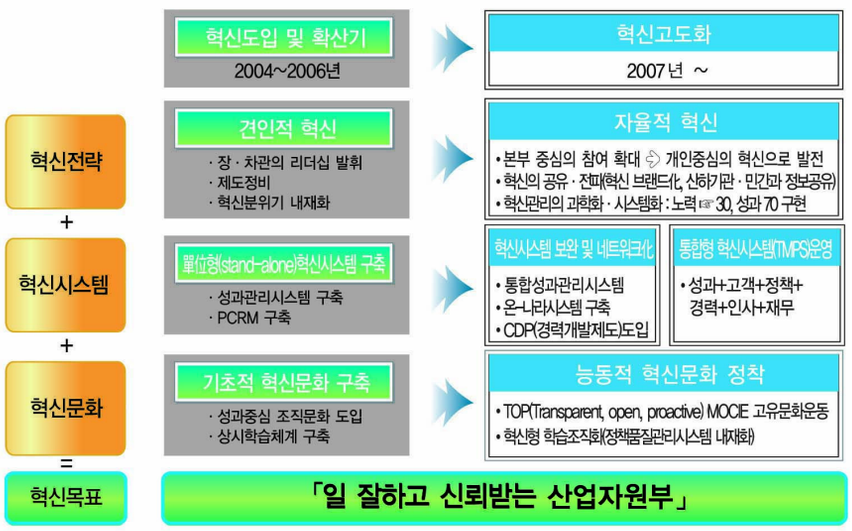
산업자원부는 2006년 '희망한국, 세계 산업4강, 무역8강 실현'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일 잘하고 신뢰받는 산업자원부'라는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행정혁신 전략체계와 로드맵을 마련, 혁신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행정혁신 전략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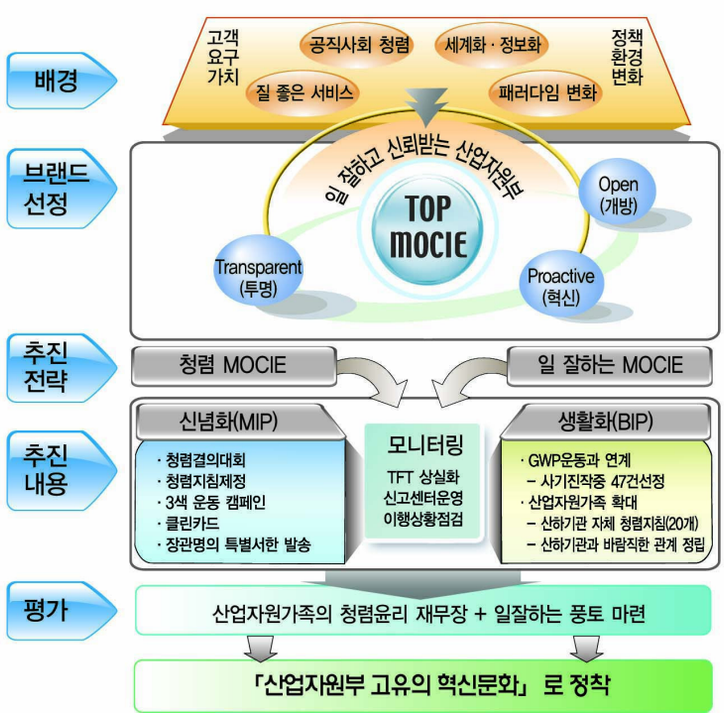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정부를 만들기 위한 혁신노력은 참여정부 출범과 함께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에 산업자원부도 지속적으로 부내 직원들의 혁신역량 제고와 혁신문화 내재화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외부적으로는 국민들이 혁신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는 결과물을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행정혁신의 궁극적 목표를 '일 잘하고 신뢰받는 산업자원부'로 설정하고 전략방향에 따른 혁신주제 및 단계별 추진과제를 도출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혁신전략체계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여 지속가능한 혁신 추진 (2007년)



산업자원부 고유의 혁신문화 정착(2007년)



행정혁신 과제

3대 혁신전략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혁신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여 혁업 융합을 위한 고유정책과제 관리시스템 등 업무관리 지원시스템, 상시적·자발적 혁신문화 정착을 위한 CDP 등 성과평가시스템, 혁신성과 확산을 위한 고객지원 시스템 등을 구축하여 혁신지원의 시스템화를 완성하였습니다.

일과 혁신의 융합을 통한 생산성 향상 및 고객만족 제고

산업자원부는 체계적 혁신전략 수립, 전 직원의 자발적 혁신활동 참여 및 효과적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을 산업자원 행정의 생산성 향상 및 고객만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민원제도 개선으로 고객만족도 제고

고객감동센터를 발족시켜 민원사항을 집중처리하고 있으며, 고객의 편의와 업무효율성을 크게 제고시켰습니다. 발족 2개월간 총 4천여 건의 민원을 처리하여 직원들의 민원업무 부담을 크게 감소시켰을 뿐만 아니라, Happy Call 결과 만족도가 개선(불만족률 20% 이하)되었습니다. 상세내용은 본 보고서의 고객만족 부분을 참조 바랍니다.

업무효율성 제고와 정책품질관리

지식관리시스템 및 혁신관리시스템이 개편(8월)되어 직원의 업무능력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업무 따로 혁신 따로'라는 기존의 지식 및 혁신 관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업무지식을 우대하는 시스템으로 개편(자발적 자료 분류·등재, 직원의 평가, 마일리지 부여 등)하였고, 이를 통해 유용한 지식이 크게 증가하여 지식관리시스템의 경우 등록 지식의 78%가 업무지식에 해당되었을 뿐만 아니라 시스템 개편 후 지식등록건수가 30%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2004년부터 운영되어온 '중소기업 현장체험단'은 참여기관의 확대 등을 통해 행정서비스의 범위를 확대하고 정책의 품질을 제고하였고, 역지사지의 태도로 산업자원부 홈페이지를 통해 애로사항을 제기한 중소기업에 체험단 파견(774명 참여)을 통해 공무원·유관기관·대기업의 직원이 직접 309개 업체를 방문하여 335건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혁신성과 브랜드화

산업자원부 혁신브랜드 중 하나인 전략물자관리시스템을 통해 전략물자 수출통제를 오프라인 방식에서 온라인 방식으로 전환하여 판정 및 민원처리 업무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고객인 수출기업의 편의를 증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물자관리시스템은 각종 국제회의에서 일본 및 호주와 대등한 수준으로 평가받았으며, 대만, 태국 등으로부터 영문웹사이트 구축을 요청받았으며,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가 벤치마킹 중입니다.

또 다른 혁신브랜드 중 하나인 전자무역은 무역 절차의 간소화 및 Paperless 처리를 통해 많은 무역업체의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우리경제 전체의 생산을 증대시킨 일과 혁신의 융합사례인 전자무역시스템은 무역업체, 수출입 유관기관, 관세사, 선사, 항공사, 포워더, 은행 등 42,000여 가입자가 연간 1억6천만건의 전자문서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APEC 2005 리포트는 한국의 전자무역 환경을 가장 우수한 수준인 World Advanced로 평가하였습니다.

상시적 · 자발적 혁신문화 정착

혁신역량 내재화를 위한 인사조직 혁신

산업자원부는 업무의 생산성 향상과 고객만족 행정구현을 위해 혁신의 실천과 지원 및 인프라 구축을 적극 지원하고자 조직구조를 성과관리 · 고객지향형으로 혁신적으로 개편하여, 본부장-팀제를 도입하여 결재단계를 축소하고 성과관리고객만족팀과 고객만족센터 및 인재개발계 등을 신설하여 조직개편의 목적이 행정의 생산성 향상, 국민의 만족도 제고 및 직원의 업무능력 향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조직개편과 함께 부서 · 계층간 칸막이를 없애는 등 대대적인 사무실 환경을 개선시켰으며, 전 직원의 명패통일로 직급간 거리감 해소시키고 커뮤니케이션 활성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혁신문화정착을 위한 합리적 혁신관리

산업자원부 전 직원은 온라인 혁신관리 시스템을 통해 자발적 · 상시적으로 혁신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혁신 아디디어를 올리고(450건, 2006년 11월) 혁신 자료를 등재(328건, 2006년 11월)하여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자연스럽게 혁신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관리는 정부만 한다는 통념을 깨고 발상의 전환을 통해 소비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제품안전관리체제를 구축하였고, 단속 등에 의존하던 과거의 시스템과 달리 제품안전관리에 민간이 참여하는 '제품안전 자율이행 협약'(7월 12일)을 통해 안전 위해사례를 획기적으로 감축하였습니다.

산업기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과감하게 교육인적자원부와 협력 MOU를 체결(5월)하고, 국민생활 개선아이디어 경진대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국민생활과 직결된 창의적 정책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책과장급 이상 전 간부가 참여하는 정책토론회를 분기별로 개최하여 특정 정책에 대한 담당 라인 내의 폐쇄적 의사결정이 아닌, 모두가 수평적으로 참여하는 의사결정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 도전적 · 개방적 혁신문화 정착 및 활발한 혁신활동을 유인 · 정착 · 확산시키기 위한 시스템 구축 및 경진대회 개최 등도 활발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혁신성과의 확산

홍보혁신을 통한 혁신문화 전파

산업자원부는 2006년 국민 및 타 부처와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혁신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였습니다.
정책고객별로 대국민 보고회를 개최했을 뿐만 아니라 다음(1월), 네이버(4월) 등 유명 포털사이트에 산업자원부 블로그를 개설하여 대국민 혁신홍보 및 국민의 혁신참여를 확대하고 부내 지식관리시스템의 유용한 업무지식을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에게 공개·홍보하였으며 국민참여 제고 및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국민의 베스트 댓글 등을 선정하였습니다. 조직관리 혁신포럼, 중앙부처 혁신현장 이어달리기 개최와 참여를 통해 혁신사례를 벤치마킹하고 타 부처와의 혁신을 교류하고 있습니다.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 혁신관리 강화

산업자원부는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며, 혁신 학습과 확산 기회로 활용합니다.

구분	지원영역	혁신 지원 내용	기대효과 및 성과
기술표준원	제도화	• 자체내규(144호)를 제정하여, CoP 구성, 혁신활동 평가 및 성과보상 등을 규정 • 자체경진대회 개최(10월 29일)	전문성에 맞는 혁신 자율성 보장
	평가보상	• 본부와 공동으로 혁신활동평가, 부서장 및 직원 평가 반영	부서배치 등 인사상 우대(혁신사례 최우수, 본부별 혁신평가 1위(2006년))
산하 공공기관	네트워킹 제도화	• 혁신현장 이어달리기 상설화(매월 순회) ※산업자원부 정책홍보관리본부장 매회 참석 · 산업자원부-산하기관 혁신담당자(60개기관) 네트워킹 구축	산하기관 혁신우수사례 발굴(26건), 사례집 발간(7월 10일) 및 우수사례 벤치마킹
	혁신문화 공동추진	• 산하기관과 함께하는 TOP 산업자원부대책 추진	자체 행동지침마련 및 청렴결의대회(66개기관)
	온라인정보망 연계구축	• 홈페이지에 온라인 사업관리 업무연락방 및 혁신나눔창을 개설하여 소통협력 개선	281개 사업의 50개 업무연락방 운영
	혁신관련 징계경감	• 혁신추진상의 경미한 실수에 대한 과감한 징계경감 조치 ※ 2007년 감사업무추진계획(3월), 공직기강확립 특별점검계획(9월)에 명시하여 공문시달	

공공구매

산업자원부는 친환경상품 구매, 장애인제작용품 우선 구매, 중소기업제품 구매 등, 공공구매를 통한 국내 산업의 지속가능성 제고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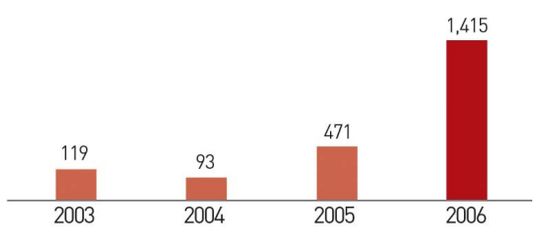
친환경상품 구매

산업자원부에서 구매하는 가전제품, 일반사무용품, 소모품, 위생용품, 포장재, 차량용품, 토목 · 건축자재, 기타물품 등의 구입시 최소한 20% 이상을 친환경상품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지침에 따르고 있습니다.

2006년 친환경상품의 실제 구매비율은 전체 구매금액 대비 86.5%이며, 앞으로도 친환경상품의 구매비율을 늘려갈 계획입니다.

친환경상품은 통상 생산 · 소비 · 폐기의 전 과정에서 환경오염을 저감하고 자연자원과 유해물질의 사용을 최소화하는 제품 및 서비스로서,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마크 인증상품과,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33조 및 '산업발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해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우수재활용 인증상품을 말합니다.

친환경상품 구매추이 [단위 : 백만원]



※ 백만원 단위 이하는 반올림하였습니다

2006년도 친환경 상품 구매현황

구분	금액 (백만원)	백분율
가구(책상, 의자, 탁자, 테이블 등)	869	61%
사무용품(복사기, 복합기, 파티션, 지류, 일반사무용품 등)	130	9%
전자, 정보, 통신용품(컴퓨터, 프린터, 팩시밀리 등)	390	28%
기타(가전제품, 위생용품, 여가용품, 실내연료유, 차량용품, 램프, 냉온수기, 보일러 등)	26	2%
합 계	1,415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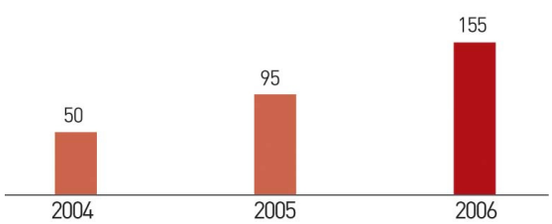
※ 백만원 단위 이하는 반올림하였습니다

장애인제작용품 우선 구매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법' 제40조,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3조,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구매 물품 중 일정비율 이상을 장애인 생산품으로 우선적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장애인용품 구매실적은 다음과 같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장애인용품에 대한 구매는 계속적으로 늘려갈 계획입니다.

장애인제작용품 구매추이 [단위 : 백만원]



※ 백만원 단위 이하는 반올림하였습니다

2006년도 장애인용품 구매현황

구매품목	장애인생산품구매액 (단위: 천원)	구매처
1.사무용양식 - 봉투, 진행문서화일, 책표지	4,701	• 사단법인늘푸른제지 • 서울특별시시립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2. 사무용지류 - 복사용지, 신문용지, 중질지, 감열지	43,676	• 사단법인늘푸른제지 • 서울특별시시립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 서울곰두리공판장
3. 화장용종이류 - 화장지, 손수건, 기저귀	4,881	• (사)한국환경장애연구협회
4. 전자, 정보장비 - 휴대용플래시메모리저장장치 및 유선전화기	57	• 사회복지법인한국소아마비협회
5. 사무용소모품 - 결재판, 재생토너카트리지	16,621	• (주)아이피에스이미지 • 늘푸른직업재활원
6. 서적, 잡종인쇄물	84,652	• (사)한국장애인문화인쇄협회 •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 • 한울정신건강복지재단
7. 종이컵	550	• 경기도곰두리공판장
8. 식료품 - 빵 및 떡류, 땅콩, 견과류가공품	60	• (사)한국환경장애연구협회
9. 기타 (비누 등)	236	• 한국장애인협의회 • 무형복지도울원
합 계	155,434	

중소기업제품 구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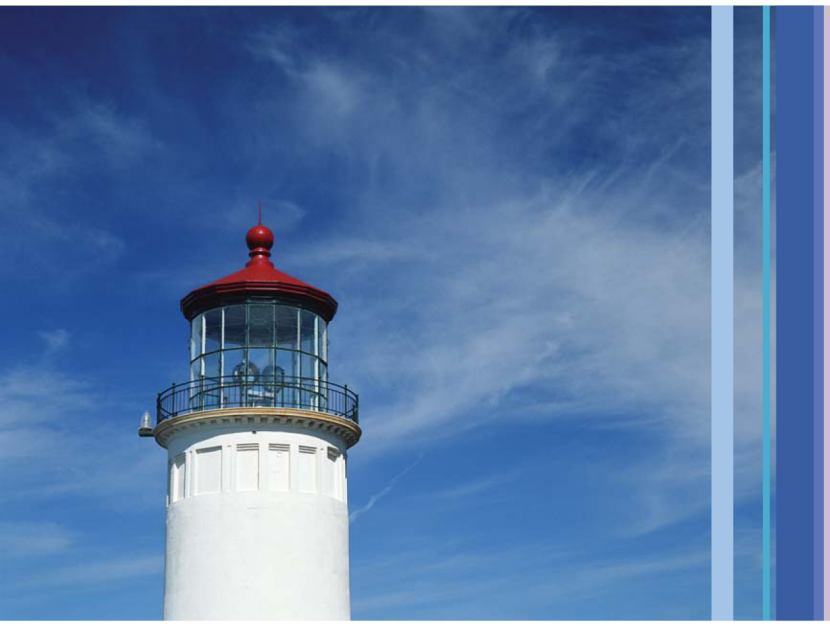
중소기업제품의 실질적인 공공구매 효과 제고 및 확대를 위하여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6조 내지 제9조 및 제14조, 동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일정 비율 이상을 중소기업제품으로 구매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구매실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별 중소기업제품 구매현황

[금액: 백만원]

연도	총구매액 (물품)	중소기업제품 구매액(물품)	
		실적	총구매 대비 중기제품 구매율(%)
2004	5,014	4,550	90.7
2005	3,611	3,324	92.1
2006	4,745	4,574	96.4

※ 중소기업의 범위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릅니다.



06

내부활동 : 환경적 측면

자원 활용성 제고

산업자원부는 '산업발전과 환경보호'라는 2가지 측면을 동시에 만족시킬수 있는 환경친화적 산업기반구축정책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사상초유의 고유가 시대를 맞아 부처 내부적으로 에너지 및 물절약 캠페인 등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실천에 옮기고 있습니다.

자원절약 활동

조직의 환경인식

산업자원부는 기후변화협약 등 무역환경규제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응하기 위한 환경친화적 산업기반구축정책과 에너지 절약정책을 추진하는 주무부처로서, 부처 내의 가용자원 및 에너지의 절약 분위기의 조성도 중요하여 일부 업무관련 환경성과 측정 프로세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업무관련 전 과정으로 확산해 나갈 예정입니다.

총 수자원 사용량

산업자원부의 2006년 총 용수 사용량은 29,743m^3이며, 연간 1인당 26.58m^3의 용수를 사용하였습니다.

(용수의 소비처는 대부분 생활용수에 해당되며 나머지는 난방용 스팀으로 사용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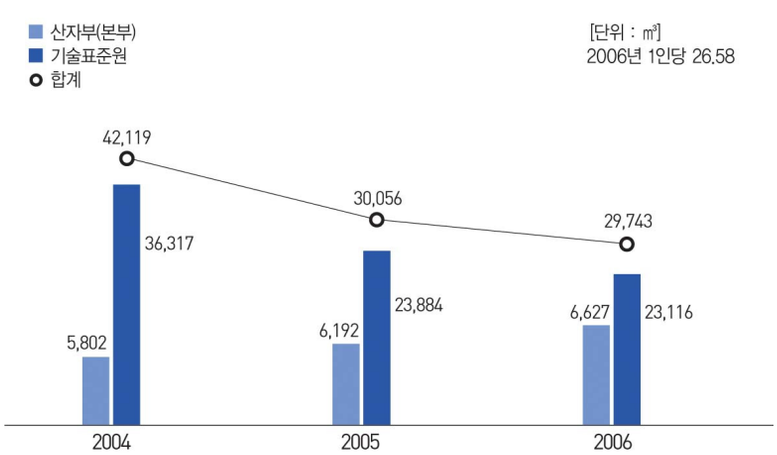
총 사용량은 전년대비 313m^3(1%) 감소하였습니다. 기술표준원(무역위원회, 전기위원회 포함)은 세면기와 변기에 누수방지장치설치, 세면기에 원터치 수도밸브설치 등으로 물 사용 절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06년 1인당 산출근거 기준 인원: 산업자원부(본부) 662명, 기술표준원(무역, 전기위원회 포함)457명

※2004년, 2005년의 경우는 조직의 변동이 있어서 1인당 산출의 의미가 없어 1인당 데이터를 생략하였습니다.

※산업자원부(본부)의 Data는 과천 종합청사의 Data에 대한 산업자원부(본부)의 사용 면적대비로 환산하였습니다.

연도별 용수 사용량



에너지 사용

직접 에너지 사용량

산업자원부에서 사용하는 직접 에너지는 도시가스(LNG)로 산업자원부(본부)와 기술표준원(무역위원회, 전기위원회 포함) 건물동의 난방용 스팀의 생산에 소비되는 연료입니다. 2006년 227,740m^3의 도시가스를 사용 하였으며, 연간 1인당 203.52m^3의 도시가스를 사용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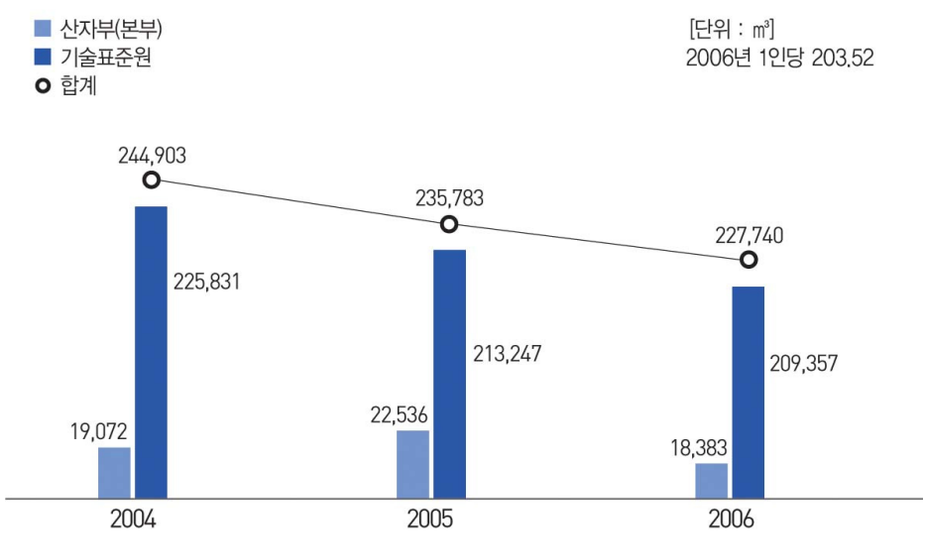
총 사용량은 전년대비 8,043m^3(3.4%) 감소하였습니다. 산업자원부는 사상초유의 고유가 시대를 맞아 에너지 절약 활동에 솔선수범하기 위하여 사무실의 난방온도를 18℃ 이하로 유지시키는 한편, 난방 시간대(11:00~12:00, 17:00~18:00)도 유지시켜 직접 에너지의 사용을 줄이고 있습니다. 또한 상기 활동 외에 기술표준원은 직접 에너지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난방시설 및 도시가스 시설에 대해 매년 에너지 관리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간접 에너지 사용량

산업자원부에서 사용하는 간접 에너지는 전력으로 산업자원부(본부)와 기술표준원(무역위원회, 전기위원회 포함)건물동의 냉방, 조명, 승강기, 사무기기, 가전기기 등에 소비되는 에너지입니다. 2006년에는 총 3,539,801KWh의 전력을 사용 하였으며, 연간 1인당 3,163.4KWh의 전력을 사용하였습니다.

총 사용량은 전년대비 284,058KWh(7.4%) 감소하였습니다. 산업자원부는 간접 에너지의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사무실의 하절기 냉방온도를 26℃ 이상으로 기준 온도 관리를 하고 있으며, 승강기도 3층 이하의 운행은 제한하고 있습니다. 사무기기와 가전기기는 하루 종일 켜져 있는 경우가 많으나 실제 사용시간은 적으며 대기상태(standby)에서 많은 전력을 소비하므로, 1999년 4월 1일부터 컴퓨터, 모니터, 프린터, 팩시밀리, 복사기, 텔레비전 등 국내 보급률이 높은 21개 품목을 대상으로 대기전력 최소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대기전력 저감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직접 에너지 사용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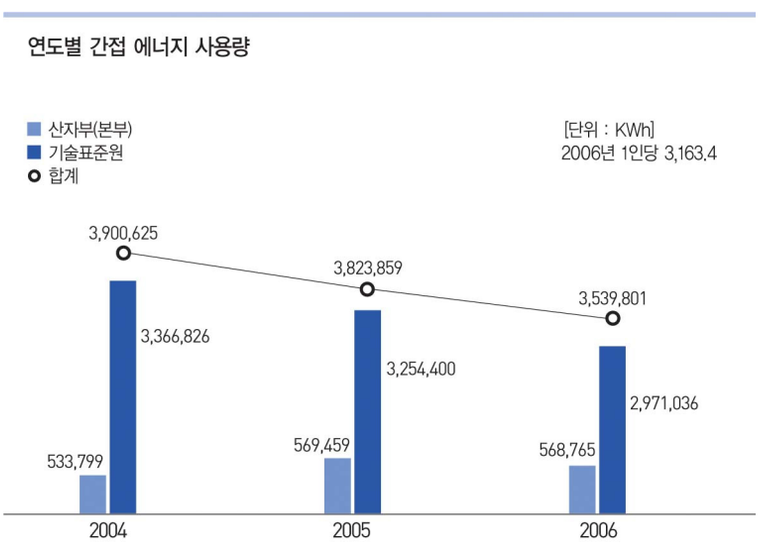
상기 활동 외에 기술표준원은 간접 에너지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수전설비, 배전설비에 대해 매년 에너지관리 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4년에는 전 건물동의 3,624개 전등에 대해 ESCO(Energy Service Company) 사업을 추진하여 절전형 형광등으로 대체하였으며, 2005년에는 심야 전력을 이용하여 축열조의 효율을 확보하여 주간에 냉동기를 운행하지 않으며, 심야 시간대(23:00~09:00)를 준수하여 에너지 효율의 증대와 전력요금 절감을 동시에 꾀할 수 있는 심야전력을 이용한 빙축열 냉방방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6년에는 합리적인 전력을 사용하기 위하여 부하용량에 맞게 변압기의 용량을 적정하게 유지하고, 콘덴서의 부착으로 역률을 개선시켰으며(95% 이상 유지), 누전방지를 위해 확인점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간접 에너지 사용량

[단위:KWh]

구분 \ 년도	2004년	2005년	2006년	
	전체	전체	전체	1인당
산업자원부(본부)	533,799	569,459	568,765	859.2
기술표준원	3,366,826	3,254,400	2,971,036	6,501.2
합계	3,900,625	3,823,859	3,539,801	3,163.4



환경부하 저감(대기, 폐기물)

산업자원부 직원들은 생활폐기물을 줄이고 사무공간에서의 대기전력 등의 절감활동을 통해 간접적으로 온실가스의 배출 저감을 위한 생활 속의 실천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환경오염 저감활동

생활폐기물 발생 및 재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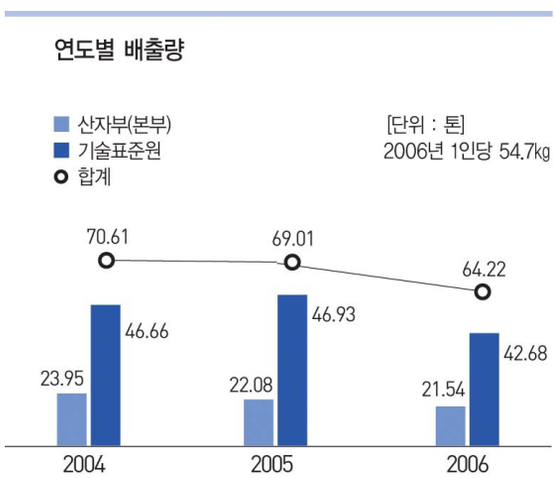
산업자원부의 2006년 생활폐기물의 총 배출량은 64.22톤이며, 연간 1인당 57.4kg의 생활폐기물을 배출하였습니다. 총 배출량은 전년대비 4.79톤(7%) 감소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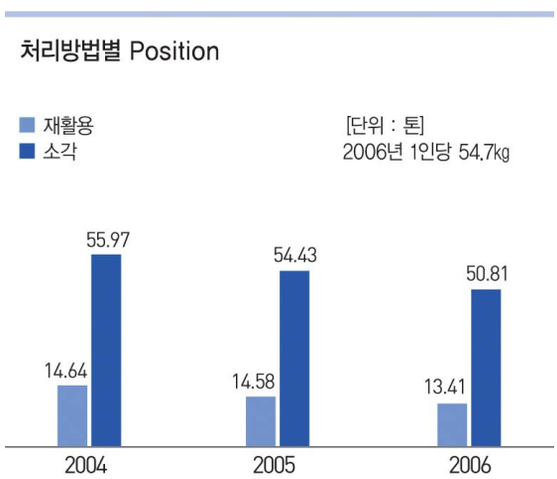
폐기물의 처리방법에 따라 분류하면 13.41톤(26.4%)을 재활용 위탁업체에 의해 재활용하였고, 50.81톤(73.6%)을 소각 위탁처리 업체에 의해 소각 처리하였습니다.

연도별 생활폐기물 배출량

[단위:ton]

구분 \ 년도		2004	2005	2006	
		전체	전체	전체	1인당
재활용	산업자원부(본부)	7.64	7.54	7.01	0.0106
	기술표준원	7.00	7.04	6.40	0.0140
	소계	14.64	14.58	13.41	0.0120
소각	산업자원부(본부)	16.31	14.54	14.53	0.0219
	기술표준원	39.66	39.89	36.28	0.0794
	소계	55.97	54.43	50.81	0.0454
총계		70.61	69.01	64.22	0.0574
재활용률(%)		26.2	26.8	26.4	





온실가스 배출량

산업자원부의 온실가스 배출원은 직접 배출원과 간접 배출원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직접 배출원은 산업자원부(본부)와 기술표준원(무역위원회, 전기위원회 포함) 건물동의 난방용 도시가스에 기인하고 있으며, 간접 배출원은 산업자원부(본부)와 기술표준원(무역위원회, 전기위원회 포함) 건물 동에서 사용하는 냉방, 조명, 승강기, 사무기기 등의 전력사용에서 기인하고 있습니다. 업무용 차량 등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는 데이터의 신뢰성이 낮아 제외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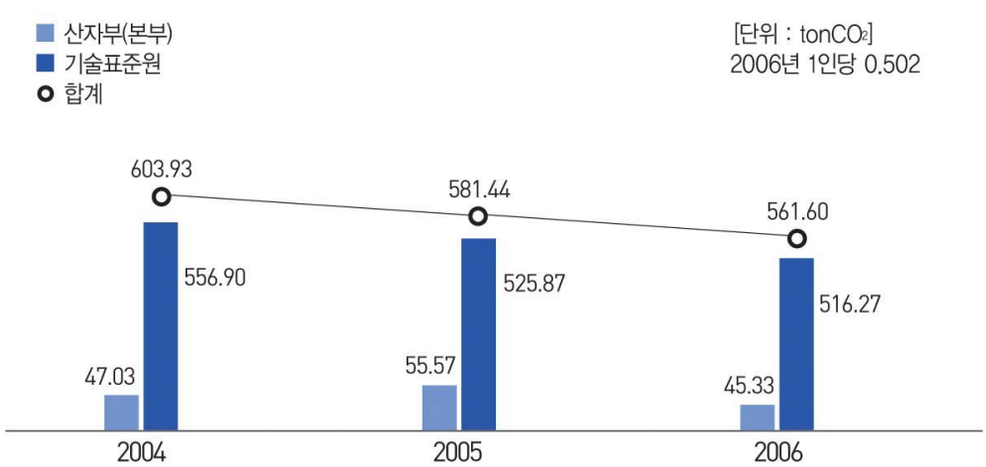
2006년 산업자원부의 총 온실가스 배출량은 2,062ton CO_2이며, 연간 1인당 1.843tonCO_2입니다. 총 발생량은 전년대비 140.28tonCO_2(6.4%) 감소하였습니다.

*온실가스 조사와 계산을 위해 다음의 CO_2환산표를 사용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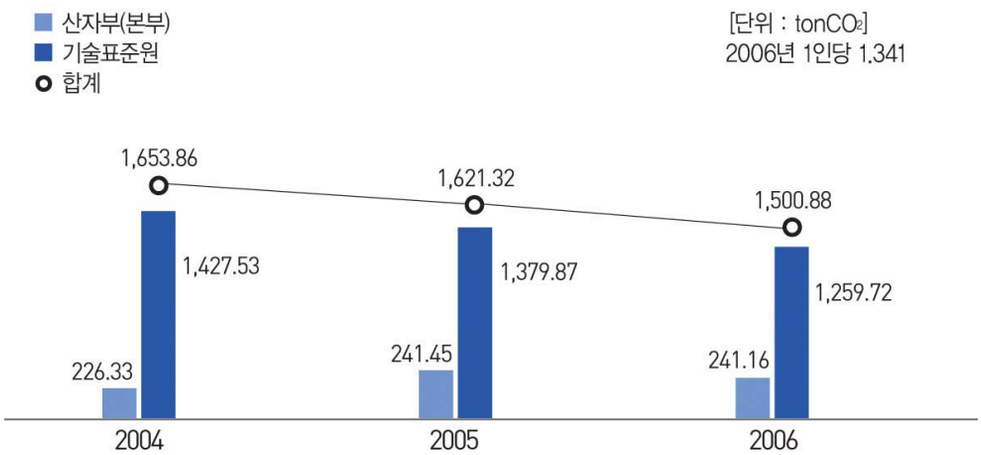
구분	단위	CO_2환산		열량	
		IPCC	국내기준 (2006년)	IPCC	국내기준 (2006년)
전력	KWh	-	0.424	-	2,150Kcal
LNG	KNm3	2.466	-	15.3kg/GJ	-

*IPCC: Intergovernmental Panal on Climate Change(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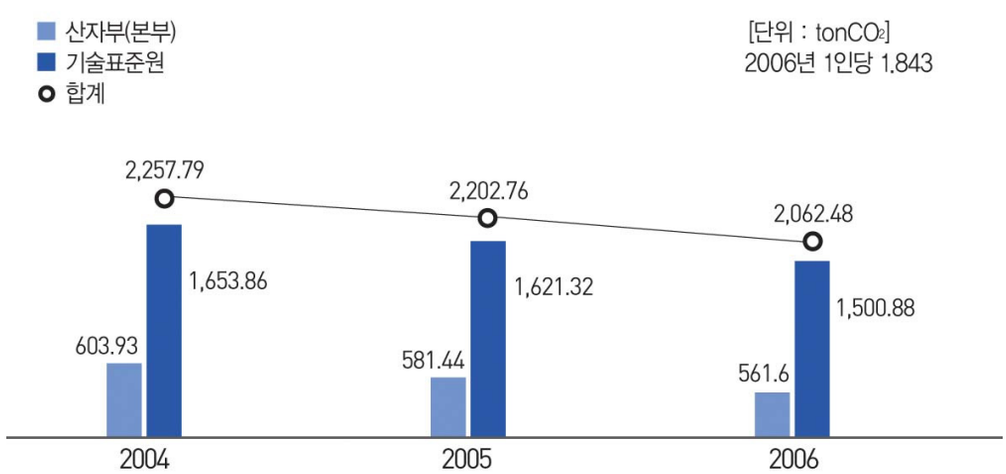
연도별 온실가스배출량: 직접배출



연도별 온실가스배출량: 간접배출



연도별 온실가스배출량



온실가스 저감활동 및 성과

기술표준원은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에너지관리 진단을 매년 실시하는 등 온실가스 저감의 주요전략을 선택해 절감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간접 온실가스 배출

직원들은 간접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출·퇴근시 대중교통 이용하기, 카풀제도, 승용차 요일제, 자전거 타기 운동을 전개해 생활 속 실천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저감전략과 실천내용

온실가스 저감전략	주요 실천 내용
에너지 이용 효율향상	· 대기전력 저감 프로그램 실시 · 부하용량에 맞게 변압기의 용량을 적정하게 유지 · 콘덴서 부착으로 역률개선(95% 이상 유지)
에너지 절감 운동	· 냉난방 실내온도 제한(하절기 냉방기준온도: 26℃, 동절기 난방기준온도: 18℃) · 승강기 운행 제한(3층 이하)
ESCO사업 추진 (Energy Service Company)	· 심야 전력을 이용한 빙축열 냉방방식 운영 · 절전형 조명기구로 교체((기술표준원 전체 건물동)

07

내부활동 : 사회적 측면

고객 만족

산업자원부는 고객 지향적 행정서비스를 위하여 민원서비스 만족도 조사 및 전화친철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06년 확대 개편된 성과관리고객만족팀을 주축으로 가시적인 성과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담 조직 운영

지속가능한 조직의 유지 및 발전에 필요한 고객의 적극적 지지를 획득하고 국무조정실에서 실시하는 민원서비스만족도를 평가하는 정부업무평가에 대응하기 위하여 2006년 3월 고객만족행정팀(정원: 4급 팀장 1, 사무관 1, 주사 2)을 신설하였습니다.
2006년 6월에는 고객만족활동을 성과관리와 연계하여 정책고객만족 극대화를 구현하기 위해 고객만족행정팀을 성과관리고객만족팀(4급 팀장 1, 사무관 4, 주사 5, 기타보조 5)으로 확대·개편하였고, 또한 민원을 전담처리하는 고객감동센터를 2006년 9월 신설하여 민원처리 결과에 대한 해피콜을 시작하였습니다.

고객만족 비전 선포식

2006년 12월 산업자원부장관 이하 직원 및 산하기관 임직원이 참석한 고객만족 비전 선포식을 갖고 고객만족이 최고의 행정이념임을 선언하였습니다.

고객만족도 조사

'고객지향적 산업자원부'로 발전하기 위해 산업자원부 직원의 행정서비스 수준을 평가하고 개선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2006년 민원서비스 만족도 조사 6회 및 전화친절도 조사를 2회 실시하였습니다.
2006년 1월부터 9월까지 접수된 산업자원부 및 기술표준원의 일반 및 인터넷민원을 대상으로 6회에 걸쳐 접근용이성, 신청용이성, 신속정확성, 대응환류성, 형평성 등을 조사·관리한 결과, 정부평가 2006년 민원만족도(9위)는 2005년 민원만족도(17위) 대비 4.7점 상승하여 민원처리 전담부서 신설의 가시적 성과가 나타났습니다.

민원서비스만족도 정부평가결과

조사연도	2005년		2006년	
정부평가순위	17위	정부평균	9위	정부평균
전체 평점	60.0	64.5	64.7	65.9
일반 민원	51.5	69.4	72.2	68.1
인터넷민원	62.3	62.6	60.2	63.4

산업자원부 직원을 대상으로 전화친절도 조사 및 전화응대 관련 교육을 2006년 7월부터 11월까지 2차례 실시하고 비대면 고객과의 전화통화는 '고객과의 만남의 시작이자 업무의 기본'이란 인식을 통한 '고객만족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구 분	1차 전화친절도 조사 결과	2차 전화친절도 조사 결과
전화친절도 평균점	78.9	81.4

※ 전화친절도 우수응대 기본점수는 80점입니다.

성과평가와의 연계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고객지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민원서비스 만족도 조사 및 전화친절도 조사 결과를 팀별·직급별 개인 성과평가에 반영하고 조사결과 평가우수자에 대하여는 각종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2006년 민원서비스 만족도 자체 조사결과

구 분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종합평균
조사 시기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전체 평점	65.3	63.3	63.6	62.7	64.9	66.8	64.5
일반 민원	62.2	65.9	68.3	74.9	70.4	76.6	69.7
인터넷민원	66.0	62.6	61.2	59.1	63.6	64.6	62.8

노동여건 및 관행

2006년 1월 시행된 '공무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무원도 노동조합을 설립하여 조합원의 근로조건 유지 및 향상을 위해 단결하고 단체교섭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고 있습니다.

직원 현황

산업자원부는 산업, 무역, 에너지·자원 분야의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자체 인력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적시에 인력을 충원하고 적정한 인력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산업자원부의 2006년 정규직 공무원수는 파견자 및 휴직자를 제외하고 현직 1,086명이며, 정규직 공무원의 평균 근무년수는 11.8년입니다.

직렬별 구성
일반직 82.9% {행정직 45.1%(490명), 기술직 25.8%(280명), 연구직 12.1%(131명)} 기능직 14.6%(159명), 별정직 1.4%(16명), 계약직 1%(10명), 정무직 0.2%(3명)
계급별 직원수
장관 1명, 차관 2명, 고위공무원 23명, 3급 17명, 4급 146명, 5급 348명, 6급 291명, 7급 90명, 8급 5명, 9급 4명, 기능 159명
균형인사
남성과 여성 비율은 79.8%(867명) : 20.2%(219명), 행정직과 기술직의 비율은 45.1%(490명) : 25.8%(280명), 장애인공무원 채용비율은 2.3%(26명)

여성 및 장애인 고용추이

산업자원부는 사회적 약자인 여성과 장애인을 배려하는 적극적인 인사정책을 통해 균형인사를 도모하고 사회 통합 및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산업자원부는 '여성과 남성이 함께 일할 때 국가경쟁력이 제고'된다는 신념하에 지속적으로 여성공무원 채용에 노력하여 5급 공채 여성공무원 임용비율이 11.8%(2004년도)→38.5%(2005년도)→41.2%(2006년도)로 해마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장애인공무원 의무고용제도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을 소속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2이상 고용하도록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업자원부의 장애인고용 법적 의무율은 2%(22명)이나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배려하고자 균형인사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2006년 말 장애인 고용비율이 2.3% (26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직원고용창출률 및 이직률

산업자원부는 '중장기 인력관리계획'에 따라 인력을 즉시에 충원하여 이직(퇴직)에 따른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퇴직(40명) 및 변화하는 행정수요(FTA, 해외자원개발, 미래산업육성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코자 2006년도 84명의 인력을 신규로 채용하였고 이에 2006년도 산업자원부 고용창출률은 1.9%이며, 이직률(퇴직률)은 3.7%입니다.

결사자유 정책

공무원과 결사의 자유(노동3권)

헌법 제21조는 모든 국민의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근로자 신분인 국민은 더 나아가 헌법 제33조 제1항에 의거 노동3권을 보장받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민간기업 근로자와는 다른 업무적인 특수성이 인정되는 교원과 공무원의 경우 근로자성 인정 여부 및 노동3권 보장여부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교원의 단결권 보장과 이후 공무원의 단결권 보장으로 현재 공무원도 노동조합을 설립하여 조합원의 근로조건 유지 및 향상을 위해 단결하여 단체교섭 할 수 있는 권리를 법률로서 보장받고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신분과 업무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일반 민간기업 근로자와는 다른 측면에서 근로3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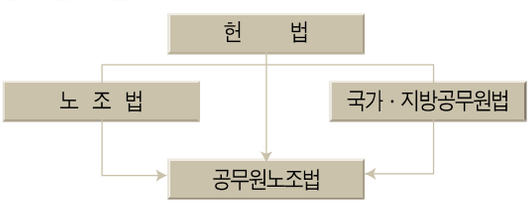
관련 법령

가. 헌법 제33조 제2항
나. '공무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및 동시행령, 시행규칙(2006월 1월 28일 시행)
다. 공무원노동관련 규율법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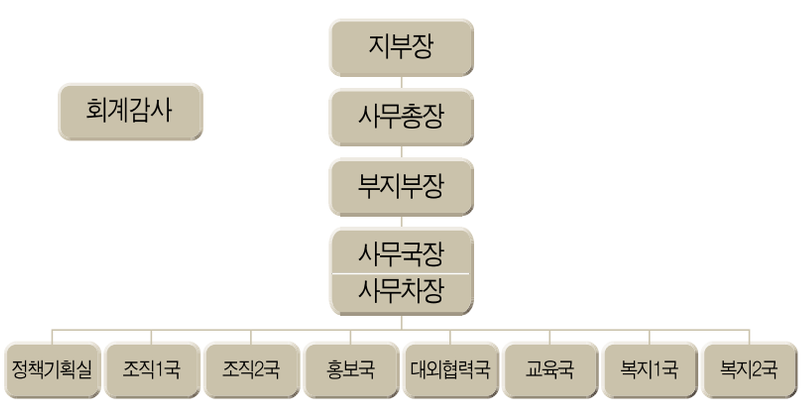
노동조합 현황

산업자원부 공무원노동조합은 1999년 1월 27일 산업자원부 직장협의회로 발족하여 2006년 9월 11일 행정부공무원노동조합 산업자원부지부로 전환하여 지부장, 사무총장, 부지부장, 9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의 근로자성



행정부공무원노동조합 산업자원부지부 조직도



가입현황(공무원노동조합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근거)

단 체 명	설 립 신고일	상급단체	6급 이하 현원	가입 대상	가입자 수					가 입 률	조합비 현황	
					총계	6급	7급 이하	기능및 별정	기타		금 액	납부 방식
행정부공무원 노동조합 산업자원부지부	06.09.11	공무원 노동조합 총연맹	455	405	405	199	81	124	1 (연구사)	100	기본급 0.648%	원천 공제

차별관행 예방정책

산업자원부는 차별관행에 관한 별도의 예방정책을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부당노동행위 제보 프로세스 및 운영 현황

부당노동행위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의 조직·활동을 제약하거나 '방해·개입하는 근로3권의 침해행위를 의미하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당노동행위 유형

노동조합 활동 등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
◇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동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하거나 또는 노동위원회에 대하여 사용자가 이 조의 규정에 위반한 것을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증언을 하거나 기타 행정관청에 증거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불공정 고용계약(비열계약)
◇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
정당한 이유 없는 단체교섭 거부·해태
◇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
지배·개입
◇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전임자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부당노동행위 사례

현재까지 산업자원부가 노동조합에 대한 부당한 노동행위를 한 사례나 노동조합으로부터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의 피신청인이 된 사례는 없습니다.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

공무원 또는 노동조합이 관할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서 및 이유서 제출 (노동조합측은 신청인이 됨)

↓

노동위원회에서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청인의 구제신청서 및 이유서를 송부함과 동시에 출석조사, 답변서 제출 및 위원 기피신청 등 통보(관계기관의 장은 피신청인이 됨)

↓

피신청인의 답변서 제출

↓

양 당사자에 대한 사실조사 (심판과 심사관 담당)

↓

심문회의 일자 및 심판담당 공익위원,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배정

↓

당해 사건 담당 위원들에게 사건부의안 및 사건과 관련한 일체의 자료 이메일 전송

↓

양 당사자에게 심문회의 일시 및 참석 통지

↓

심문회의 및 판정회의 개최

↓

결정서 또는 명령서 송달

↓ (결정서 또는 명령서 송달일로부터 10일 이내)

중노위에 재심신청 (구체적인 절차는 초심절차와 동일)

↓ (결정서 또는 명령서 송달일로부터 10일 이내)

행정소송

인권 보장

산업자원부는 직원이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직무관련 전문교육 이외에 모든 사람의 인권이 보호되고 증진될 수 있도록 인권 관련교육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권관련교육

2006년 한 해 동안 추진한 인권관련 교육실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체 직원 1,113명(정원 기준)중에서 총 156명이 인권관련 교육을 받았으며, 그 비율은 14%입니다.

특히, 성희롱예방교육은 '여성발전기본법' 제17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의2 규정에 의하여 성희롱 없는 밝고 건강한 직장문화 정착을 위하여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산업자원부의 경우 본부가 과천정부청사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방소재 소속 기관은 총 6개가 있으며, 관련 경비·방호원에 대해서도 일부 성희롱예방 관련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산업자원부 인권관련 교육실적 현황

구분	교육기관	교육일	교육인원	비고
양성평등정책형성과정	한국양성평등교육원	06.3.20~3.24(5일)	2	위탁교육
여성리더십개발과정	한국양성평등교육원	06.3.20~3.24(5일)	1	위탁교육
성별영향평가교육	한국양성평등교육원	06.3.21~3.23(3일)	2	위탁교육
공공기관성희롱고충상담원과정	여성가족부	06.6.22~6.23(2일)	1	위탁교육
성희롱예방교육	산업자원부	06.12.1 (1시간)	150	직장교육
계			156	

역량배양 및 복지

산업자원부는 다양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 소속 직원들의 역량강화에 노력하고 있으며, 개인별 교육훈련실적을 부서평가에 반영하고 승진평가에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 및 보수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지급되고 있습니다.

교육훈련

관련 법령

산업자원부는 '국가공무원법' 제50조, '공무원교육훈련법' 제1조, '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제7조에 근거하여 관련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담 조직

산업자원부 직원의 교육훈련은 총무팀에서 담당하며 전담인원은 총 3명입니다(5급 1명, 6급 이하 2명).

프로그램

산업자원부는 소속 직원들의 직무역량 강화를 통한 대국민 행정서비스 제고를 위하여 다양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훈련은 크게 국내교육과 국외훈련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국내교육은 또다시 교육훈련 내용별로 기본교육, 전문교육 및 기타교육으로 구분하며, 실시형태별로 공무원교육훈련 기관교육, 직장교육 및 위탁교육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내용별 교육훈련의 기본교육은 신규 채용자 또는 승진자에 대하여 공무원으로서 필요한 능력과 자질을 배양하기 위해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실시합니다.

전문교육은 산업자원부 소속 공무원이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할 직무분야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이며, 기타교육은 국정운영방향, 현안시책, 일반소양 및 각종 정신교육입니다.

실시형태별 교육훈련은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에 따른 구분입니다. 산업자원부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교육훈련으로는 자체 보직전문교육, 외국어교실, 혁신교육, 포럼 및 정보화교육 등이 있습니다.

자체 보직전문교육은 산업·무역·자원에너지 등 산업자원부 주요 업무분야에 대한 직무전문성 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입니다.

또한 글로벌 경쟁시대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자체 외국어교육도 추진하고 있으며, 외국어교실·전화외국어·사이버외국어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국내외 전문가를 초빙하여 특강형식으로 실시하는 산업자원부 열린포럼과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혁신교육 및 정보화 능력향상을 위한 정보화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외훈련은 1년 이상의 장기 국외훈련과 6개월 미만의 단기 국외훈련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장기 국외훈련은 국제기구·외국정부기관·유수 민간기업 등에서 실시하는 직무훈련(OJT, Research 등)과 국외 유명대학에서 실시하는 학위과정이 있으며, 단기 국외훈련은 직무훈련만으로 추진됩니다.

교육훈련실시 현황

2006년 산업자원부 전체 직원의 교육훈련 평균시간은 약 74시간이며, 상시학습 적용대상자의 경우 약 79시간, 상시학습 적용 제외자의 경우 약 50시간으로 나타났습니다.

상시학습제도는 '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이 개정되어(2006년 7월 21일), 자기주도적 상시학습체제 구축을 위해 모든 공무원이(팀장급 이상 제외) 연간 100시간의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구 분		정 원	총 교육시간	1인당 교육시간
전 체		1,113	83,124	74.67
상시학습 적용대상	전 체	925	73,699	79.67
	일반직	761	69,723	91.62
	기능직	164	3,976	24.24
상시학습 적용대상 외		188	9,425	50.13

※ 일반직 4급 이하 모든 공무원(연구직·기능직 포함)은 상시학습 적용대상이며, 4급 팀장급 이상은 상시학습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성과 및 경력개발 상담제도

최근 들어 국내외 주요 민간 기업에서는 직원들의 경력개발 지원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으며, 국가공무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중앙인사위원회도 국가공무원을 위한 경력상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업자원부는 중앙인사위원회의 경력개발 상담 제도를 활용하고 있으며, 자체 멘토링 프로그램 실시로 신입·전입 직원의 빠른 공직적응 및 업무습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앙인사위원회의 경력개발 상담제도는 경력개발, 역량개발, 적성이해, 심리상담 등을 주요내용으로, 그동안 공직생활을 해오면서 자신의 능력이나 미래, 상사·동료와의 관계 등 개인적으로 고민해 왔던 문제들에 대해 전문가와 일대일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또한, 자발적으로 신청하는 직원에게 비공개를 원칙으로 추진하며 총 3개월간 6회의 상담을 기준으로 운영하며 조기 종료 또는 추가 상담도 가능합니다.

산업자원부 멘토링 프로그램은 신입직원과 전입직원이 단기간 내에 담당 업무를 파악하고 산업자원부의 조직문화 이해를 통한 빠른 공직적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후생복지

후생복지는 '국가공무원법' 제52조 및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18841호)'으로 공무원 후생복지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맞춤형 복지제도는 산업자원부 직원에 대하여 주어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복지점수를 부여한 후,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직원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맞춤형복지의 항목은 기본항목과 자율항목으로 구성하고, 기본항목은 필수 기본항목과 선택 기본항목으로 구분합니다.

공무원연금제도

공무원연금제도는 공무원의 퇴직 또는 사망과 공무로 인한 부상·질병·폐질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공무원과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된 기능인 퇴직연금 등 소득 보장급여뿐만 아니라 근로보상적 성격의 퇴직수당,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급여, 부조적 성격의 급여 등 다양한 형태의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종업원 근무환경 개선

2006년 산업자원부 본부 전 직원의 책상·의자·캐비닛을 교체하여 직원의 근무피로도를 개선하였고 수납공간을 확대하여 근무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부서·계층간 칸막이를 제거하여 의사소통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가족친화경영

산업자원부는 2007년에 직원의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하여 매주 수요일 가정의 날 정시 퇴근(특근 수당 미지급), 직계 존비속 상조용품지원, 직원 특정 기념일 꽃배달 서비스, 가족 기념일 개인 연가 사용 분위기 조성 등의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봉급제도

공무원보수제도는 국민에 대한 봉사자이자 공무의 담당자인 공무원들에 대하여 정부가 필요한 보수를 지급함으로써 적정한 보수유인책정을 통해 우수한 인재를 공직에 적극 유치하여 행정의 생산성과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부정부패가 없는 깨끗한 정부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보수체계는 크게 호봉제와 연봉제로 구분되며, 연봉제는 고정급적연봉제, 성과급적연봉제, 직무성과급연봉제로 구분됩니다. 차관급이상 정무직공무원은 성과측정의 어려움으로 고정된 연봉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복지제도

항 목		구 성	비 고
기 본 항 목	필 수 기본항목	• 정부차원에서 필요성을 판단하여 설정하고 전체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항목 (생명/상해보험)	질병·재해로 인한 사망 및 재해장애시
	선 택 기본항목	• 운영기관의 장이 정책적 필요에 따라 설정하고 구성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항목 (의료비보장보험, 특수보험 등)	
자 율 항 목		• 운영기관별로 필요에 따라 설정하고 각 구성원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항목 (건강관리, 자기계발, 여가활용, 가족친화)	선사용 후정산

윤리 및 공정거래

산업자원부는 실효성 있는 클린 산업자원 행정 구현을 위해 매년 기관 자체 반부패 청렴 추진시책을 수립·추진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처리시스템 확립과 소속직원들의 청렴의식 제고를 통해 선진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실천적 노력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반부패 추진체계

반부패 추진기획단

조직의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자체 진단 및 대책수립, 반부패 프로그램 공통지침, 추진상황 정기점검, 시스템 구축 등 반부패 청렴관련 주요사항에 대해 심의·의결 기능을 담당합니다.

구성은 기획단 단장인 차관을 포함하여 무역유통심의관, 자원정책심의관 등 부패방지 핵심부서 국장 등 15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되며 간사는 감사관이 담당합니다.

※ 2006년 1회 개최(2006년 6월 8일)

반부패 추진기획단 실무작업반

반부패 추진기획단의 업무를 지원하고 부패방지대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기획단의 구성위원 소속 실국 주무부서 서기관 및 총무과 인사계장으로 구성됩니다.

※ 2006년 6회 개최(실무작업반 6팀이 각 1회 개최)

감사담당관실

감사실내에서 부패방지, 청렴도 관련업무 및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업무를 담당합니다.

2006년도 산업자원부 반부패 청렴시책 목표

클린 산업자원행정 구현

「청렴한 공직자」, 「투명한 행정」

청렴체감도 증진을 위한 반부패 청렴시책의 실효성 제고
및 지속적인 청렴문화 확산

2006년도 반부패 청렴시책 중점 추진방향

◇ 부패방지를 위한 상시 점검 기반 구축
◇ 청렴의식 제고 및 부패친화적 조직문화 개선
◇ 반부패 청렴시책 및 활동 평가결과의 환류 기능 강화

관련 교육 프로그램

다음은 윤리경영 및 부패방지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실행현황입니다.

프로그램	참여자	참여시간
행동강령 교육	기존 직원 년1회 이상	1.44시간/인 (1,125시간, 779명) * 본부기준
	신규자	29명 (2회)
반부패 홍보	- 간부회의, 직원조회 등을 활용한 청렴의식 고취 - 워크숍, 교육 등 청렴관련 교육 과정 적극 참여	
부패방지 초청특강	- 국가청렴위 위원장을 초정하여 부패방지관련 초청 특강 실시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평가 결과

국가청렴위원회의 2006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평가 결과 산업자원부 청렴도는 10점 만점에 8.96점(공공기관 평균 8.77점)으로 2005년도(8.70점) 대비 0.26점이 상승하여 106개 기관 중 45위를 차지하였습니다.

구분		2006년도 산업자원부 청렴도 측정업무
1	대민	신제품(NEP)인증
2		전략물자 수출허가
3		전략물자 수입증명서 발급
4		계약/관리
5		공인교정기관 인정
6		공인시험·검사기관 인정/변경
7	대기관	지자체 지원
8		유관단체 지원·관리

부패방지 프로그램 및 실행현황

프로그램	주요내용	실 행
부패방지 상시점검기반 구축	진단 및 통제시스템 수립	· 연간 반부패청렴대책 수립 · 부패방지 전담인력 지정
	제도적 기반 강화	· 청렴계약제 계속 시행(2003년 7월 이후) · '골프 및 사행성 오락 관련 공직자 행위기준 지침'수립(3월) · 연말 산업자원부 및 산하기관의 부패방지·공직기강 등 우수자 30명 기관장 표창 · 클린카드제 도입·확산
	내부업무처리시스템의 공정성 및 투명성 강화	· 전보인사 사전예고 · 인트라넷 '인사만사'를 통해 인사관련 참여 확대 및 고충 상담 활성화 · 통합평가시스템 보완 개선을 통해 승진 및 성과급 반영 1) 직급별 고유어젠다 제도 도입(8월) 2) 어젠다 및 직무성과비중 확대(팀장급 30%→40%) · 직위공모 실시 · 직제개편 인사시 다면평가 적극 활용 · 충원경로의 다양화 및 개방화
윤리의식 제고	공무원행동강령 실행 강화	· 부내 및 소속기관, 주요산하기관의 행동강령 이행실태 분기별 점검 실시(6월, 12월) · 부내 외부강의 신고의무 이행실태조사(8월) · 간부회의를 통해 금품·선물 수수 행위 등 공직기강 확립 의지 수시전파 및 명절, 휴가철 등 부패취약시기별 행동강령 이행 교육 · 행동강령 개정의견 수렴(8월)
	부패친화적 문화개선 및 비위면직자 처벌 실효성 확보	· 온정·연고주의 문화 개선을 위한 실무작업반 구성(6월) : 동호회 등 건전한 모임 활성화방안 및 인사제도·관행상 개선안 검토 ·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 관련업무 일원화(감사담당관실) · 반기별 공직유관단체 등의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 서면실태조사 실시
	체계적 지속적 반부패 교육 및 홍보	· 간부회의, 직원조회 등을 활용한 청렴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 수시 실시 · 워크숍, 교육 등 청렴관련 교육 과정 적극 참여
개선 및 확산	반부패 청렴시책 평가결과 조치	· 청렴도 측정결과 상대적으로 청렴도 지수가 낮은 분야에 대한 측정 항목별 분석, 대책수립, 시행을 거쳐 청렴도 향상 도모 · 반부패대책의 수립·시행·평가의 전 과정에 대한 지속적인 Feed-back 추진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윤리경영 확산	· 존경받은 기업(인) 표창(2월) · CSR 포럼 출범(4월 4일) · 지속가능경영 자가진단지표 개발(4월 14일) · 2005년 윤리경영실태조사 발표(3월) · 윤리경영 이행선포식 개최(9월)

공정거래

산업자원부는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통한 투명하고 신뢰받는 산업자원행정 구현을 목표로 업무처리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대를 통하여 공정거래를 추진하고 있으며, 비위행위자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하여 기강확립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 정책

산업자원부는 공무원 행동강령을 토대로 공정하고 투명한 직무수행을 통하여 공정거래를 추진합니다. 온라인 민원통합시스템 운영부서를 일원화하고 대민서비스 향상방안으로 고객감동센터 개소, 민원만족도 조사, 반기별 전화친절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석유·가스 품질검사, 전기·가스·승강기 안전검사 업무 등 단속·점검 업무 등에 관련 민간전문가, 시민단체 등 민간참여를 확대하고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의 정보공개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뇌물방지 프로그램

공직기강 확립 추진 목표 (2006년)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통해 참여정부 국정과제의 성공적 완수를 뒷받침함으로써, 투명하고 신뢰받는 산업자원행정 구현

뇌물수수 및 부패행위 방지를 위한 공직기강 확립 추진 방향 (2006년)

◇ 참여정부 후반기 공직기강 해이사례 엄중 단속
◇ 금품수수 등 비리행위 현장 감찰 강화
◇ 구조적 부조리 취약분야 제도개선 지속
◇ 보안관리실태 및 정책추진실태 점검 강화
◇ 공직기강확립 의식제고 노력 강화
◇ 감사역량 확충 및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

뇌물수수 등 부패행위에 대한 처벌 건수

2006년 산업자원부에서 뇌물수수 등 부패행위로 인한 처벌은 2건이 발생하여 해임 및 견책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우리부는 뇌물수수 등 청렴의무를 위반한 사건에 대해 해임 등 엄중 징계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공직기강 계획수립 및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 규정 : '금품 · 향응수수 관련 징계운영 기준'

◇ 금품·향응 수수시 징계위원회에 의결요구
  · 징계의결 요구권자는 소속 직원이 금품·향응수수를 한 경우 원칙적으로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

◇ 금품·향응 수수시 징계기준(※부록 참조)

◇ 금품·향응 수수자에 대한 의원면직 제한
  · 감사기관·수사기관에서 금품·향응 수수자에 대하여 조사·수사 중인 경우 의원면직(제청)을 제한

종업원 관련 국제규범 및 표준준수현황

산업자원부는 '일할 맛 나는 직장문화'를 만들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해 적극적인 인사정책을 시행하고 관련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내 직원들의 근무사항, 휴가, 출장, 징계, 기타 복무사항 등 일반적·특수적 근무관계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공무국외여행규정', '공무원행동강령', '공무원징계령' 등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용과 관련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공무원을 2.3% 이상 채용하고 있으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거 국가유공자 채용의무(기능직공무원 정원의 10%이상)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뇌물수수 등 부패방지를 위한 주요 추진실적(2006년)

프로그램	주요내용	실행
공직기강 해이사례 및 비리행위 단속	취약시기 공직기강 이행실태점검 실시	설, 하계휴가, 추석, 연말연시 등 4회에 걸쳐 본부, 소속기관 및 30여 개 산하단체에 대하여 공직기강 이행실태점검 실시
	공직기강 특별점검 실시	· 대구ㅇㅇㅇ연구소 특별점검(2006년 4월) · 한국ㅇㅇ공사 입찰관련 조사(2006년 6월) · 한국ㅇㅇ연구원 특별조사(2006년 11월)
	선거대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확보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06.5.31)와 관련하여 우리부 직원의 선거중립의식 고취를 위해 부내 인트라넷을 통한 공지 실시(4월 10일, 5월 8일)
구조적 부조리 취약분야 제도개선	유관기관과 '산업자원행정 투명사회협약'체결	산업자원부와 산하기관간의 정책협조체제를 강화하고, 기관의 청렴도 향상을 통해 고객감동•청렴행정의 실천방안을 모색하고자, 산하기관과 '산업자원행정 투명사회협약' 체결(1월 4일)
	클린카드제 도입	· 기관별로 클린카드제의 도입 · 시행 · 활용 및 법인카드의 적정사용을 통해 접대문화 및 관행의 근본적 개선 · '법인카드 관리 및 사용지침'제정 등 자체적인 방안을 강구•시행하도록 유도
	금품신고 활성화방안 수립•시행	· 공무원행동강령 및 클린신고센터 운영에 따른 금품 등 신고 실적을 공개하여 직원들의 활발한 동참을 유도 · 신고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금품신고 활성화방안' 수립(2006년 3월)
	반부패대책 TF (Clean MOCIE 추진기획단) 회의	반부패대책 TF(Clean MOCIE 추진기획단) 회의를 개최(6월 8일)하여 반부패청렴대책 주요 추진과제를 선정하고 과제별 실무작업반 구성 및 운영방안 마련
추진실태 점검 강화	보안관리 및 정책추진실태 점검 실시	· 비밀 및 대외보안이 필요한 중요정책 자료를 임의로 유출함으로써, 정부의 신뢰를 실추시키고 정치적 중립을 의심받는 일이 없도록 자체 보안관리 실태점검 강화 · 총무과 · 감사관실 공동으로 '합동보안점검' 실시 (10월 16일 ~ 20일)
공직기강확립 의식제고	유관기관 감사관회의 개최(9월8일)	산업자원부 유관기관 감사관회의 개최(9월 8일) · '참여정부 후반기 공직기강 강화대책' 설명 및 협조요청 · '공무원 행동강령' 및 '골프 및 사행성오락관련 지침' 설명 및 협조 요청
	'골프 및 사행성 오락' 관련 산업자원부 운영지침 수립 · 시행	· 고위 공직자의 부적절한 골프에 대한 언론과 시민단체의 문제제기와 공직윤리가 국민적 관심으로 대두됨에 따라 · 부내협의를 거쳐 부패행위 방지를 위한 '골프 및 사행성 오락관련 산업자원부 공무원 행위기준에 관한 운영지침' 제정•시행(6월15일)
	신규 임용 공무원 부패방지 및 공직윤리교육	· 신규 임용공무원 부패방지 및 공직윤리교육 실시 1) 공무원 행동강령 주요내용 설명 및 질의응답 2) 공직자의 윤리의식 등
	공직기강 및 행동강령 관련 회의	공직기강 및 행동강령 관련 회의 개최(6월27일) · 공직자 비위관련 최근 사례 전파 · 공직기강 관련 부내직원 준수사항 교육 · 공직기강 관련규정 설명 등
부패방지를 위한 공직풍토 조성	유공자 포상	· 2006년 공직기강 및 부패방지 등 유공자 포상(2006년 12월 31일) 1) 공직기강, 부패방지, 감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투명한 공직사회 구현에 이바지한 직원에 대한 사기진작 2) 대상자 : 30명(본부, 소속기관, 산하기관 임직원)

사회 공헌

산업자원부는 사회봉사에 솔선수범하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하여 장관을 비롯한 모든 직원들이 정기적으로 연계시설 및 사회단체를 방문하여 봉사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사회공헌 활동

국군장병 위문방문

연말연시 국토방위에 여념이 없는 국군장병을 위문하고 있습니다. 산업자원부차관, 양청장 및 주요산하기관 임원 8명이 2006년 12월 12일 육군 제23사단(삼척소재)을 방문하여 위문금(1,000만원)과 위문품(온풍기 7대)을 전달하였습니다.

제 61회 식목일 행사 실시

우리부 80여 명은 한국산업단지공단과 공동으로 2006년 4월 5일 안산시 시화단지 완충녹지를 방문하여 약 1,650㎡의 면적에 해송 110그루를 심어 산림의 가치와 소중함을 알리고, 사람과 숲이 상생·공존하는 산림복지국가 구현에 기여하였습니다.

1사 1촌 자매결연

도시와 농촌의 상호교류를 통해 상생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1개 농촌마을과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또한 농촌사랑을 실천하기 위하여 결연마을인 전남 곡성군 죽곡면 봉정마을(113가구 290여 명 거주)을 방문하여 다음과 같은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 봄, 가을 농촌 일손 돕기: 봄(21명, 4월 28일~29일) 가을(39명, 9월 15일~16일)
- 직원 하계휴양소 운영(7월15일~8월17일)
- 자매결연 마을 어린이 대전지역 연구기관 견학(2006년 8월 25일)
- 자매결연 마을 농산물 구매(수시 추진)

불우이웃돕기

우리부는 선우회(여직원모임) 주최로 모자가정(1가구), 독거노인(1가구) 지원활동으로서 매월 1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재원은 회원들이 사무실 폐품 수거후 판매비용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신우회(기독교우모임)는 복지시설 지원의 일환으로 안산평화의집에서 봉사활동 및 30만원(격월)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식목일 행사

1사 1촌 자매결연

농촌 일손 돕기

불우이웃돕기(일일찻집)

지역사회 프로그램의 성과

봉사활동 주요 현황(총 9건 약 3,000만원 기부(성금))

행 사 명	일 시	참여자	기부기관	기부(성금)내용
함께하는 따뜻한 설날	2006년 1월	장 관	아름다운 재단	· 500만원
설명절 어려운 이웃방문	2006년 1월~2월	장 · 차관 주요 간부	복지시설 25개기관	· 쌀 60포대 · 710만원
집중호우 피해복구 성금	2006년 7월	장 관	방송3사	· 1,000만원
추석명절 어려운 이웃방문	2006년 9월	장 · 차관 주요 간부	복지시설 26개기관	· 630만원
기초생활 수급가구 지원	2006년 12월	장 관	에너지재단 한국헤비타트	· 난방교체 120만원 · 내복 등 790만원
저소득층 자녀 급식지원	매월	선 우 회 (여직원모임)	과천소재 1가구	· 10만원
모자가정 지원	매월	〃	과천소재 1가구	· 10만원
독거노인 지원	매월	〃	과천소재 1가구	· 10만원
복지시설 지원	짝수 월	신 우 회 (기독교우모임)	안산 평화의집	· 30만원 · 봉사활동 병행

자매결연마을 교류현황

일자	주요 활동내용	비 고
2006년 4월 28일 ~ 4월 29일	· 독거노인 모판제작 일손돕기 · 간담회(휴양소 운영 등)	· TV(29인치) 1대 · 모자 50개 · 평상 2개 기증
2006년 4월 28일	· 전기안전점검 실시(108가구)	전기안전공사 협조
2006년 7월 15일 ~ 8월 17일	· 하계휴양소 운영	가족포함 173명 이용
2006년 8월 10일	· 마을 어린이 직원자녀산업시찰 참여	마을초등생 참여
2006년 8월 10일	· 마을 어린이 대전지역연구소 견학	마을초등생 및 학부모
2006년 9월 15일 ~ 9월 16일	· 토란수확 일손돕기(2가구, 1,320㎡)	· 성금 50만원 전달 · 세탁기 1대 기증
2006년 10월 25일	· 쌀구매 및 기념식수(1차관 방문)	1,000만원
2006년 11월	· 쌀, 배추 등 농산물 구매	6,000여만원
2006년 12월	· 감사패 수령((사)농촌사랑범국민운동본부) · 농촌사랑 운동에 확산, 도농교류활동 모범적 전개 농업·농촌발전에 기여	

08

부록 Appendix

Ministry of Commerce, Industry and Energy
2006 Sustainability Report

용어 정리

고용창출률 | (당해년도 인원수-지난년도 인원수)/지난년도 인원수×100

국가청렴위원회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평가 | 국가청렴위원회는 2002년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등 각 급 공공기관의 민원인이 고객의 입장에서 직접 경험·인식한 기관별 청렴도를 진단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고 있음

계약직 공무원 |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에 있어서 신축성 등이 요구되는 업무에 계약에 의해 채용되는 공무원

기능직 공무원 | 정보통신현업, 교환, 운전, 타자, 방호, 사무보조 등 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바이오에너지 | 태양광을 이용하여 광합성되는 유기물(주로 식물체) 및 동 유기물을 소비하여 생성되는 모든 생물 유기체(바이오매스)의 에너지

별정직 공무원 | 특정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별도의 자격기준에 의하여 임용되는 공무원

소수력 | 개천, 강이나 호수 등의 물의 흐름으로 얻은 운동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하여 전기를 발생시키는 시설용량 10,000KW이하의 소규모 수력발전

수소에너지 | 수소를 기체상태에서 연소시 발생하는 폭발력을 이용하여 기계적 운동에너지로 변환하여 활용하거나 수소를 다시 분해하여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기술

연료전지 | 수소, 메탄 및 메탄올 등의 연료를 산화(酸化) 시켜서 생기는 화학에너지를 직접 전기에너지로 변환시키는 기술

이직률 | 당해년도 이직자수/당해년도 직원수×100

일반직 공무원 | 기술·연구·행정일반 업무를 담당하며, 직군·직렬별로 분류되는 공무원

온실가스 | 자연적일 수도 인위적일 수도 있는 대기 중 기체 구성요소들로서 지구 표면, 대기 및 구름에 의해 방출되는 적외복사 스펙트럼 내에서 특정 파장에 대해 복사를 흡수하고 방출하는 기체, 교토의정서에서는 이산화탄소, 아산화질소 및 메탄 이외에도 육불화황(SF_6), 수화불화탄소(HFCs) 및 과불화탄소(PFCs) 등이 포함됨

장애인공무원 의무고용제도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을 소속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2 이상 고용해야 함('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3조제1항).

정무직 공무원 | 선거, 국회 동의에 의해 임용되거나 고도의 정책결정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태양광 | 태양광발전시스템(태양전지, 모듈, 축전지 및 전력변환장치로 구성)을 이용하여 태양광을 직접 전기에너지로 변환시키는 기술

해양에너지 | 해수면의 상승하강운동을 이용한 조력발전과 해안으로 입사하는 파랑에너지를 회전력으로 변환하는 파력발전, 해저층과 해수표면층의 온도 차를 이용, 열에너지를 기계적 에너지로 변환 발전하는 온도차 발전

toe(ton of oil equivalent) | 국제에너지기구(IAEA)에서 정한 단위로 석유환산톤 toe = 연료발열량(kcal)/(10^7kcal)

BSR 지표

지표	지표내용	페이지	보고수준	관련 G3지표
보고서 개요				
기업현황 소개				
A-1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비전과 이에 대한 CEO 성명서	3	●	1.1
A-2	주요 위험 및 기회요소	7~8	◐	1.2
A-3	기업명	5	●	2.1
A-4	주요 제품과 서비스	9~11	●	2.2
A-5	주요부서 조직도 및 자회사, 제휴사 등의 현황	6	●	2.3
A-6	합자회사, 일부 소유 자회사, 임대설비, 외주운영 등의 현황	6	●	3.8
A-7	해외 사업장 현황		N/A	2.4, 2.5
A-8	조직의 법적 소유구조의 성격	6	●	2.6
A-9	활동 시장의 성격	6	●	2.7
A-10	조직 규모	5	●	2.8
A-11	국내외 산업 및 비즈니스 협회 가입 현황		N/A	4.13
보고서 내용				
B-1	보고 범위	C2	●	3.6
B-2	보고서 범위 제한 요소	C2	●	3.7
B-3	보고기간	C2	●	3.1
B-4	경제적 · 사회적 · 환경적 성과의 비용과 효과산출 기준과 정의	15,115	●	3.5
B-5	경제적 · 환경적 · 사회적 성과의 측정방법의 변화		N/A	3.11
B-6	보고주기	C2	●	3.3
B-7	보고서 신뢰성 향상을 위한 노력	C2	●	3.13
B-8	이전 보고서 이후 변동사항		N/A	2.9, 3.2
B-9	보고서 담당자 연락처	C2	●	3.4
B-10	BSR 매트릭스	105~107	●	3.12
이해관계자 참여				
C-1	주요 이해관계자의 파악기준 및 선정	15	●	4.14, 4.15
C-2	이해관계자 참여방식	16	●	4.14,4.16,SO1
C-3	이해관계자 참여 결과 및 사용	15~16	●	4.17
지속가능 경영				
D-1	경제적 · 사회적 · 환경적 목표	7~8	◐	-
D-2	경제적 · 사회적 · 환경적 성과	12~13	◐	-
D-3	향후 지속가능경영 전략 및 목표	7~8	◐	-

경제성과				
경제				
EC1	생성 및 분배된 경제적 가치 창출 및 분배	68~69	●	EC1
EC2	기후변화에 따른 경제적 영향	70~71	●	EC2
EC3	조직의 정액연금제도 약정의 보상범위	95	●	EC3
EC4	주요 사업지역에서 인력 수급 및 조달	91	◐	EC6, EC7
EC5	정부 수취 보조금		N/A	EC4
EC6	비 핵심사업 인프라 구축		N/A	EC8
EC7	간접적 경제효과		N/A	EC9
EC8	브랜드 가치		N/A	-
EC9	혁신경영 성과	72~76	●	-
EC10	창조경영 성과		N/A	

※ ●: 보고 ◐:일부 보고 N/A: 해당 없음(Non-Applicable)

※ 보고를 누락한 경우에는 누락한 사유를 보고하였습니다.

지표	지표내용	페이지	보고수준	관련 G3지표
	사회성과			
	지배구조 및 리스크 관리			
GR1	기업지배구조	14	●	4.1, 4.2
GR2	사외이사비율		N/A	4.3
GR3	이사회 구성현황		N/A	4.2
GR4	이사회의 전문성을 나타내는 프로세스		N/A	4.7
GR5	이사회의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성과관리 및 평가 프로세스	14	●	4.9
GR6	경제 · 사회 · 환경 정책을 수립, 실행, 감독하는 조직구조	14	●	4.10
GR7	임원보상과 조직의 경제적 · 사회적 · 환경적 성과와의 연계	95	●	4.5
GR8	이사회 활동내용 및 결정사항		N/A	-
GR9	기업지배구조 관련 법규 준수현황		N/A	-
GR10	기업에서 사용하는 경제 · 사회 · 환경활동에 관련된 헌장		N/A	4.8, 4.12
GR11	기업의 사전예방원칙 준수 여부	14	●	4.11
GR12	주주의 이사회 권고안 및 제안 제출방법		N/A	4.4
GR13	조직 최상위기구의 이해 충돌 방지 프로세스	14	●	4.6
	종업원			
EM1	종업원 현황	89	●	LA1
EM2	종업원과 경영진의 구성현황	89	●	LA13
EM3	남녀 종업원 평균임금	관련법령에 따름		LA14
EM4	사업지역, 동종 산업과 비교한 임금 및 복리수준	관련법령에 따름		EC5
EM5	고용창출률 및 이직률	89	●	LA2
EM6	평균근속연수	89	●	-
EM7	차별관행 예방정책 및 모니터링 결과	89	●	HR4
EM8	결사자유정책	90	●	HR5
EM9	아동노동금지 정책 및 모니터링 결과	아동노동 없음		HR6
EM10	강제노동금지 정책 및 모니터링 결과	강제노동 없음		HR7
EM11	노동조합 관련 조직개요	90	●	-
EM12	노동조합 종업원 가입조항 및 가입 종업원 현황	90	●	LA4
EM13	기업의 운영 변화 시 종업원에 대한 정보제공, 협의 등에 대한 정책 프로세스	없음		LA5
EM14	안전보건 위원회에 대한 설명	위원회 부재		LA6
EM15	산업안전보건에 관련된 노사합의 사항	없음		LA9
EM16	종업원에 관련된 국제 규범 및 표준 준수현황	98	●	-
EM17	ILO협약 중 산업안전보건관리 항목에 대한 준수현황	관련법령에 따름		-
EM18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 정책과 프로그램	95	●	LA8
EM19	부상 및 질병발생 종업원 수와 결근율	없음		LA7
EM20	종업원 복리후생제도	94~95	●	LA3
EM21	종업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	95	●	-
EM22	종업원 관련 법규 준수현황	89	●	-
EM23	부당노동행위 제보 프로세스 및 운영현황	91	●	-
EM24	노동쟁의 현황	없음		-
EM25	윤리경영 전담부서, 투자규모, 보고라인	96	●	-
EM26	윤리경영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및 지침제공	96	●	-
EM27	종업원 교육훈련 평균시간	96	●	LA10
EM28	종업원 교육훈련 프로그램	93	●	LA11
EM29	성과 및 경력개발 관련 종업원 상담제도 운영	94	●	LA12
EM30	인권관련 교육을 받은 종업원의 비율	92	●	HR3
EM31	인권관련 교육을 받은 경비, 경호, 보안을 담당하는 종업의 비율	92	◐	HR8
EM32	임직원의 가족 친화 경영을 위한 정책과 지원제도	95	●	-

지표	지표내용	페이지	보고수준	관련 G3지표
	협력업체			
PN1	협력업체의 특성 및 지속가능경영 이슈	관련법령에 따름		-
PN2	협력업체 선정요인 중 사회적, 환경적 성과에 대한 고려	77~78	●	HR1
PN3	협력업체의 사회적, 환경적 성과에 대한 평가 프로세스	관련법령에 따름		HR2
PN4	협력업체의 사회적, 환경적 성과에 대한 지원 및 감사 프로세스	관련법령에 따름		-
PN5	협력업체 불만처리 제도 및 처리결과	관련법령에 따름		-
	소비자			
CS1	제품 및 소비자의 특성 및 지속가능경영 이슈	88	●	-
CS2	소비자 관련 법규 준수 현황		N/A	-
CS3	공정경쟁, 독점금지와 관련된 정책 및 관리		N/A	SO7
CS4	제품 및 서비스 수명주기 동안 소비자 안전보건을 위한 정책 및 관리		N/A	PR1
CS5	제품정보 제공 관련 정책 및 관리		N/A	PR3
CS6	소비자의 주요 의견 및 반영 결과	88	●	-
CS7	사회적, 환경적 이슈를 고려하여 혁신한 제품과 서비스	17~66	●	-
CS8	제품영향을 감소하기 위한 노력		N/A	-
CS9	소비자 만족 관련 정책 및 관리	88	●	PR5
CS10	자발적 또는 비자발적 제품철회 사례 및 이유 설명		N/A	-
CS11	소비자 안전보건 관련 법규위반 및 민원 사례		N/A	PR2
CS12	제품정보 제공 관련 법규 위반 사례		N/A	PR4, PR9
CS13	광고에 관련된 표준과 자발적 강령수준 현황		N/A	PR6
CS14	광고와 마케팅 관련 법규위반 사례		N/A	PR7
CS15	소비자 사생활 침해와 관련된 불만사항		N/A	PR8
	지역사회			
CO1	활동하는 지역사회의 특성 및 지속가능경영 이슈	113~116	●	-
CO2	활동하는 지역사회의 요구사항을 처리하는 내부 정책, 절차	15~16	◐	PR9, SO1
CO3	지역사회 프로그램을 위한 사내 구성원 투입시간 및 투입 비용	100~101	◐	-
CO4	지역사회 프로그램의 성과	100~101	◐	-
CO5	뇌물 및 부패에 관련된 정책 및 관리	97	●	SO2, SO3, SO4
CO6	정치적 로비와 현금에 관련된 정책 및 관리		N/A	SO5
CO7	정당 및 정당후원기관에 대한 기부금		N/A	SO6
CO8	사회성과와 관련한 수상실적		N/A	2, 10
CO9	법규 위반으로 인한 제재현황	98	●	SO8

지표	지표내용	페이지	보고수준	관련 G3지표
환경성과				
환경정책 및 투자				
EV1	환경관련 투자 및 비용	81~82	◐	EN30
EV2	환경영향감소를 위한 정책	80	●	-
EV3	정량화된 환경목표 및 성과	없음		-
EV4	온실가스 저감 이니셔티브 및 성과	86	●	EN18
EV5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 사용현황 및 에너지 효율향상을 위한 이니셔티브	81~82	◐	EN5, EN6, EN7
EV6	천연생태계의 보호 및 복구 위한 목표와 프로그램		N/A	EN14
원재료 및 에너지사용				
EV7	직접 에너지 사용량(운영, 제품생산, 운송포함)	81	●	EN3
EV8	간접 에너지 사용량	81~82	●	EN4
EV9	총 수자원 사용량	80	●	EN8
EV10	물을 제외한 형태별 총 원자재 사용량	자료수집체계미비		EN1
EV11	재생원료 사용비율	83	◐	EN2
환경영향				
EV12	온실가스 배출량	84~85	●	EN16
EV13	간접 온실가스(CO2, CH4, N2O, HFCs, PFCs, SF6)배출량	84~85	●	EN17
EV14	오존파괴물질 배출량		N/A	EN19
EV15	NOx, SOx 등 주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N/A	EN20
EV16	형태별, 최종 처리방법별 폐기물의 양	83	●	EN22
EV17	수계 폐기량		N/A	EN21
EV18	물의 재활용과 재사용	없음		EN10
EV19	조직이 방출한 폐수가 수역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N/A	EN25
EV20	조직의 취수가 수자원 안정성 및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영향		N/A	EN9
EV21	화학물질, 기름, 연료누출로 주변 환경에 미친 영향	없음		EN23
EV22	생물다양성 가치가 높은 지역의 사업장 위치, 크기, 생물다양성에 영향을 주는 사례		N/A	EN11, EN12
EV23	주요 제품과 서비스의 환경적 영향	35~48	●	EN26
EV24	제품 중 재생 가능한 제품 무게와 실제 재생 무게의 비율		N/A	EN27
EV25	간접 에너지 감축성과	82	●	EN7
EV26	생물다양성 가치가 높은 지역에서의 사업 활동 및 운영과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영향 관리		N/A	EN12, EN14
EV27	조직의 활동에 의해 야기된 자연서식지의 변화 및 조직이 자연서식지를 보호하거나 복구한 사례		N/A	EN13
EV28	사업활동지역에서 서식하는 동식물 중 멸종위기동식물 명단에 등록 종의 수		N/A	EN15
EV29	바젤협약 첨부 Ⅰ,Ⅱ,Ⅲ 그리고 Ⅷ 수준 위험 폐기물의 발생, 운송, 수입, 수출, 처리		N/A	EN24
EV30	물류과정 중 운송의 중대한 환경영향		N/A	EN29
EV31	환경관련 법규 준수 현황(지역별, 산업별)과 법규 위반 및 벌금 내역	없음		EN28

GRI 지표

항목	내용	페이지	보고수준
전략 및 프로파일			
	프로파일		
1.1	최고의사결정권자가 보고 조직 및 전략과 지속가능성의 연관성을 밝힌 선언문	3	●
1.2	주요 영향, 리스크, 기회에 대한 설명	7~8	●
	조직 프로파일		
2.1	조직명	5	●
2.2	대표 브랜드, 제품 및/또는 서비스	9~11	●
2.3	조직의 운영구조	6	●
2.4	본사/본부 위치	C2	●
2.5	해외사업장의 위치 및 국가수, 주요 사업장이 있거나 보고서에서 다루는 지속가능성 이슈사항과 구체적 연관성을 가진 국가명		N/A
2.6	소유구조 특성 및 법적 형태	6	●
2.7	활동 시장형태	6	●
2.8	보고조직의 규모	5	●
2.9	보고기간동안의 규모, 소유구조상의 중대한 변화		N/A
2.10	보고기간동안의 수상내역		N/A
	보고 파라미터		
3.1	보고기간	C2	●
3.2	최근 보고서의 발간일자		N/A
3.3	보고주기	C2	●
3.4	보고서 및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처	C2	●
3.5	보고 내용 정의/결정을 위한 프로세스	4	●
3.6	보고범위	C2	●
3.7	보고범위 및 경계에 대한 구체적 제한사항	C2	●
3.8	합작회사, 자회사, 외주운영사 등 기간별 및/또는 조직간의 비교가능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보고 기준	6	●
3.9	성과 지표 등 기타 정보 수집 과정에서 적용된 예측을 뒷받침하는 가정과 기법을 포함한 데이터 측정 기법 및 계산 기준	80 등	●
3.10	이전 보고서에서 제시한 정보의 재기술 결과 및 사유		N/A
3.11	이전 보고기간대비 범위, 경계, 측정방법의 변경사항		N/A
3.12	보고서내의 표준공시 사항의 위치를 나타내는 표	109~111	●
3.13	보고서의 외부 검증에 대한 정책 및 현재 관행	C2,4	●
	지배구조, 위원회, 참여		
4.1	조직의 지배구조	14	●
4.2	이사회 의장의 임원 겸직 여부를 기술하고 임원인 경우 경영진 내에서의 역할 및 의장 임명 이유 기술	14	●
4.3	이사회가 일원화된 조직의 경우, 이사회에서 독립적인 또는 임원이 아닌 구성원의 수		N/A
4.4	주주와 직원들이 이사회에 조언을 하거나 방향을 제시하는 메커니즘		N/A
4.5	이사회 구성원, 고위관리자, 임원들에 대한 보상과 조직의 성과관의 관계	95	●
4.6	이사회내 이해관계상의 충돌방지를 위한 프로세스	14	●
4.7	경제, 환경, 사회에 대한 조직의 전략을 보조하기 위한 이사회 구성원의 자격 및 전문성을 결정하는 프로세스	14	●
4.8	경제, 환경, 사회성과 및 활동과 관련하여 내부에서 개발된 미션 또는 핵심가치에 대한 진술문, 행동강령 및 원칙		N/A
4.9	경제, 환경, 사회성과 파악 및 관리를 위한 절차	14	●
4.10	이사회 자체 성과평가 프로세스	14	●
4.11	사전예방 접근방법 또는 원칙의 채택여부 및 채택방식	14	●
4.12	조직이 가입하거나 지지하고 있는 외부에서 개발된 경제, 환경, 원칙 또는 기타 이니셔티브		N/A
4.13	협회, 국내/ 국제단체에서의 주 회원자격		N/A

항목	내용	페이지	보고수준
4.14	참여한 이해관계자 그룹 목록	15	●
4.15	참여 할 이해관계자 식별 및 선정기준	15~16	●
4.16	형태, 이해관계자 그룹별 참여빈도를 포함한 이해관계자 참여방식	15~16	●
4.17	이해관계자 참여를 통해 제기된 주요 주제와 관심사 및 이에 대한 대처방안	15~16	●
공공 기관용 추가 지표			
PA1	다른 정부 또는 공공권한기관과의 관계와 직속 정부구조 내에서 해당기관의 위치	6	●
PA2	기관이 정의하는 지속가능발전의 정의 기술, 성명서, 원칙 명시	7~8	◐
PA3	기관의 지속가능발전 정책 수립 내용	17~66	●
PA4	기관이 PA3에서 나열한 각 측면 별 조직의 특정 목표 기술, 중장기·단기 목적 기술	17~66	●
PA5	PA4, PA3에서 수립한 측면과 목적의 수립과정 기술	17~66	●
PA6	실행조치, 실행 전 평가결과, 핵심 지표, 개선위한 조치, 실행 후 평가결과, 추후 목표	17~66	●
PA7	이해관계자의 역할과 참여(상기 PA3~PA6 관련)	15~16	◐
PA8	지불 종류별 총지출내역	68~69	●
PA9	재정분류로 나눈 총 지출금	68~69	●
PA10	재정분류로 나눈 자금지출	68~69	●
PA11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공공기관의 조달정책을 기술	77~78	●
PA12	지출과 재정적 의무에 적용되는 경제, 환경, 사회적 기준	77~78	●
PA13	공공기관의 조달관행과 공공정책의 우선순위와의 관계	77~78	●
PA14	종류별 자발적인 환경 또는 사회적 라벨 · 인증프로그램에 등록된 재화의 가치백분율	77	●
경영접근방식 및 성과지표			
경제			
	경영접근방식에 대한 공시	68	●
EC1	직접적인 경제적 가치 창출 및 배분	68~69	●
EC2	기후변화에 대한 재무적인 영향과 사업 활동에 대한 기회 및 리스크	70~71	●
EC3	연금혜택 계획에 의한 조직의 보상범위	95	●
EC4	정부보조금 수혜 실적		N/A
EC6	주요 사업장의 현지 구매 정책, 관행 및 비율	77~78	◐
EC7	주요 사업장의 현지인 고용 절차 및 고위관리자 비율	89	◐
EC8	공익을 위한 인프라 투자 및 서비스 지원 활동과 효과		N/A
환경			
	경영접근방식에 대한 공시	80	●
EN1	무게 또는 부피 기준 원료 사용량	자료 수집 체계 미비	
EN2	사용되는 원료 중 재활용되는 비율	83	●
EN3	1차 에너지원별 직접에너지 소비량	81	●
EN4	1차 에너지원별 간접에너지 소비량	81~82	●
EN8	공급원별 총 취수량	80	●
EN11	생태계 보호지역 또는 인근지역에 있는 소유, 임대, 관리 토지 위치 및 크기	영향 미약 측정부재	
EN12	생태계 보호지역 또는 인근지역에서의 기업 활동, 제품 또는 서비스로 야기되는 중요한 영향	영향 미약 측정부재	
EN16	직 · 간접 온실가스 총 배출량	84~85	●
EN17	기타 간접 온실가스 배출량	84~85	●
EN18	온실가스 감축사업 및 성과	86	●
EN19	오존층파괴물질 배출량	자료수집체계미비	

항목	내용	페이지	보고수준
EN20	NOx, SOx 및 기타 주요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	영향 미약 측정 부재	
EN21	최종 배출지별 총 폐수 배출량 및 수질	자료 수집 체계 미비	
EN22	형태 및 처리방법별 폐기물 배출량		●
EN23	중대한 유해물질 유출 건수 및 유출량	없음	
EN26	제품 및 서비스의 환경 영향을 저감하기 위한 이니셔티브와 영향 감소의 정도		N/A
EN27	제품 카테고리별 판매된 제품 및 관련 포장재의 재생비율		N/A
EN28	환경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벌금액 및 비금전적 제재 건수	없음	
	사회: 노동 및 관행		
	경영접근방식에 대한 공시	89	●
LA1	고용 유형, 고용 계약 및 지역별 인력 현황	89	●
LA2	연령별, 성별, 지역별 이직 건수 및 비율	89	●
LA4	단체 교섭 적용 대상 직원 비율	90	●
LA5	조직운영의 중요한 변동사항에 대한 최소 통지기간, 단체 협약에 이의 명시 여부	없음	
LA7	지역별 부상, 직업병, 손실 일수, 결근 및 업무 관련 재해 건수	없음	
LA8	심각한 질병에 관하여 직원 및 가족, 그리고 지역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 훈련, 상담, 예방 및 위험 관리 프로그램	관련 법령에 따름	
LA10	종업원 직급별 일인당 연평균 교육시간	94	●
LA13	성별, 연령별, 소수그룹멤버십, 기타 다양성관련 지표별 거버넌스 기구의 구성 및 종업원 수	89	●
LA14	종업원 카테고리별 남녀 직원 간의 기본임금 비율	관련 법령에 따름	
	사회: 인권		
	경영접근방식에 대한 공시	92	●
HR1	인권 보호 조항이 포함되거나 인권 심사를 통과한 주요 투자 협약 건수 및 비율	77~78	●
HR2	주요 공급업체 및 계약 업체에 대한 인권 심사 비율	관련 법령에 따름	
HR4	총 차별 사고 건수 및 관련 조치	89	●
HR5	결사 및 단체 교섭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된 사업장(업무분야) 및 해당 권리를 지지하기 위한 조치	90	●
HR6	아동 노동 발생 위험이 높은 사업장(업무 분야) 및 아동 노동 근절을 위한 조치	아동노동 없음	
HR7	강제 노동 발생 위험이 높은 사업장(업무 분야) 및 강제 노동 근절을 위한 조치	강제노동 없음	
	사회: 사회		
	경영접근방식에 대한 공시	96,100	●
SO1	업무 활동의 시작, 운영, 종료 단계에서 지역사회에 미친 영향을 평가하고 관리하는 프로그램의 특성, 범위 및 실효성	15~16	◐
SO2	부패 위험이 분석된 사업 단위의 수 및 비율	97	●
SO3	반부패 정책 및 절차에 대한 교육을 받은 직원 비율	96	●
SO4	부패 사건에 취해진 조치	99	●
SO5	공공정책에 대한 입장, 공공정책 수립 및 로비 활동 참여		N/A
SO8	법률 및 규제 위반으로 부과된 벌금 및 비금전적 제재	98,112	◐
	사회: 제품책임		
	경영접근방식에 대한 공시	7	●
PR1	개선을 목적으로 한 제품 및 서비스 사용기간 동안 고객의 건강 및 안전 영향 평가 절차, 해당 평가가 실시된 주요 제품 및 서비스의 비율		N/A
PR3	절차상 요구되는 제품 및 서비스 정보 유형, 그러한 정보 요건이 적용되는 주요 제품/ 서비스의 비율		N/A
PR6	광고, 판촉, 스폰서십 등 마케팅 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된 규제, 표준 및 자발적 규칙 준수 프로그램		N/A
PR9	제품 및 서비스 공급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및 규제 위반으로 부과된 벌금 액수		N/A

반부패 관련 주요 지침

골프 및 사행성 오락관련 산업자원부 운영지침

주요내용

◇ 접대골프행위 금지
- 산업자원부공무원행동강령 제2조제1호의 직무관련자 중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와의 접대골프행위 금지

◇ 접대가 아닌 공무원간의 골프행위
- 직무관련 공무원간에도 골프를 할 수 있으나, 비용은 각자 부담

◇ 공무원과 민간인과의 골프행위
- 직무관련 민간인과의 골프행위는 금지
  ※ 부득이한 경우(정책의견 교환, 친족, 친목단체)에는 사전에 신고서를 제출 후 가능

◇ 직무관련자와 사행성 오락행위 금지
- 직무관련자와 마작, 화투, 카드 등 사행성 오락행위 금지

산업자원부 공무원 행동강령

개념

직무수행과 공인으로서의 사생활에서 공무원에게 일어날 수 있는 윤리갈등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행동기준으로서, '부패방지법' 제8조 및 '공무원행동강령'에 근거하여 산업자원부 훈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2003년 5월 제정, 2005년 12월 29일 개정).

주요내용

◇ 공정한 직무수행
-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상급자 지시 거부: 소명, 기관장 보고 등 일정한 절차를 거쳐 거부할 수 있다.
-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수행하는 직무가 자신의 이해와 관련되거나 4촌 이내의 친족이 직무관련 자에 해당되는 경우 당해 직무를 회피할 수 있다.
- 지연·혈연·학연 등을 이유로 한 특혜의 배제,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정치인 등의 부당요구에 대한 처리 등을 규정

◇ 알선·청탁 금지,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 인사청탁 금지, 이권개입 금지, 알선·청탁 금지,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제한, 공용물의 사적 사용금지, 직무관련자로부터의 금품 등을 받는 행위 제한 등

◇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
- 일정요건의 외부강의 신고,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차용 금지, 경조사 통지 및 경조금품 수수제한 등

◇ 위반시 징계 등 조치

금품·향응 수수시 징계기준

비위유형 및 수수행위 \ 금액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1,000만원 이상
의례적인 금품·향응 수수의 경우	수동	견책	감봉	정직	해임	파면
	능동	견책·감봉	감봉·정직	정직·해임	해임·파면	파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 수수를 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	수동	감봉	정직	해임	파면	
	능동	감봉·정직	정직·해임	해임·파면	파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 수수를 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수동	정직	해임	파면		
	능동	정직·해임	해임·파면	파면		

이해관계자 운영위원회 주요 의견

성 명	소속/직책	분 야	착수 회의 주요 의견/이슈	검토 회의 주요 의견
김진홍	(주)포스코 CSM팀/팀장	산업계	- 보고서 발행 자체 긍정적 - 발간 시점 자체 논란 불필요 - 자기 평가 통한 발전 필요 - 이해관계자 명확화와 의사소통 - 환경에 대한 적응력 보고 필요 - 조직의 존립 목표 전략 - 목표 달성하기 위한 활동 - 그 활동성과를 투명하게 보고 - 검증 어려우면 이해관계자 검토	
박영우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원장	산하기관 (산업계)	- 국가 SD를 위한 산업자원부의 역할 - 정책 중심의 보고서 - 정책의 SD를 위한 정책인가 분석 - 단순 홍보성 보고서 지양 - 향후 계획(전략) 부문 강조 - 이해관계자의 참여 중요	- 표지가 산업자원부 정체성 나타내야 함 - 핵심 내용만 담는 것이 좋음 - 비전, 연결고리, 추진계획 연관성 중요 - 목적에 맞게 머리에 남는 것이 있어야 함 - 상세한 내용을 찾을 수 있는 곳 게시하여 산업자원부 가이드 북이 되어야 함
안광석	한국전력공사 경영전략팀/팀장	공기업	- 규제 완화 - 정책의 성과 평가 - 이해관계자 설문조사 포함 -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 시각적 효과, 도표, 도식화 필요 - 양을 줄여야 함 - 지속가능경영에 선도적 역할 필요 -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노력 높이 평가 - 지속가능경영 시스템 구축 필요
이병욱	세종대학교 경영대학/교수 (환경경영학회/회장)	학 계 (국민)	- 산업자원부의 정체성 나타낸 보고서 - 글로벌한 이해관계자 참여 필요 - 지속가능산발심의위원회로 변화 - 산업자원부 SD 혁신모델 제시 - 정책 위주 보고 - 내부 활동은 Framework만 보고 - 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 일관성 유지	
장영옥	(사)기업책임시민센터 사무국/국장	NGO	- 조직의 투명성도 정책의 지속가능성 평가만큼 중요 - 예시: CO_2 배출 - 내부 활동의 지속가능성도 중요 - 신뢰주고 매년 발전하는 모습 - 내부 활동 장단기 목표 제시 - 차기 보고서에서 목표달성 확인 - 자원 활용성 제고 - 노동 부분 등의 구체적 제시 - BSR/GRI 지표 정확한 공개	- 주요 성과 부분 표로 정리 필요 - 정책부분은 무역, 산업, 자원 분야 구분 - 내용, 데이터 도식화해야 함 - 홈페이지 관련 자료 찾을 곳 제공 - 보고서 서두에 작성 절차 제시

※ SD: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

이해관계자 온라인 설문 결과

설문조사 개요

산업자원부는 2006년 지속가능보고서 발행을 위하여 적극적인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자체적인 이메일 온라인 시스템인 PCRM을 활용하여 2007년 10월 30일부터 11월 8일까지 온라인 설문을 실시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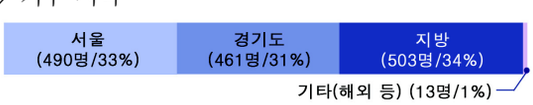
구 분	인 원(명)	비 율(%)
발송 성공수	23,754	
메일 개봉수	8,283	34.9
설문 응답수	1,467	17.7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기본 조사

◈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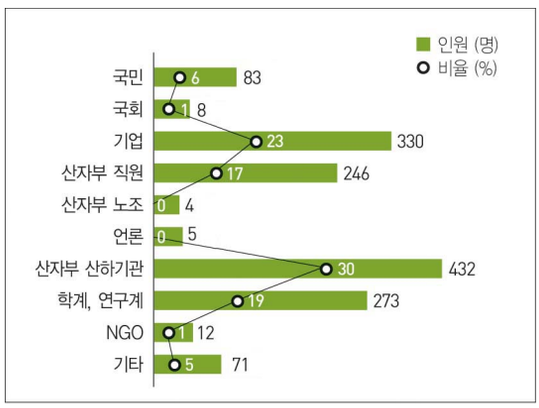
◈ 거주 지역



◈ 지속가능보고서에 대하여 알고 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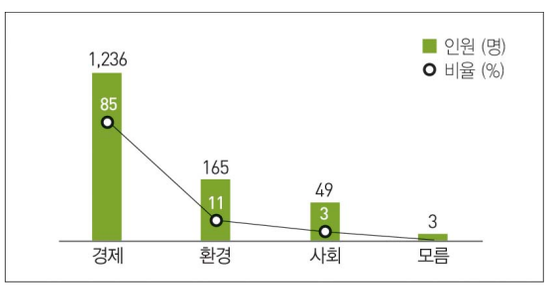
구 분	인 원(명)	비 율(%)
알고 있다	617	43
모른다	830	57

◈ 이해관계자 그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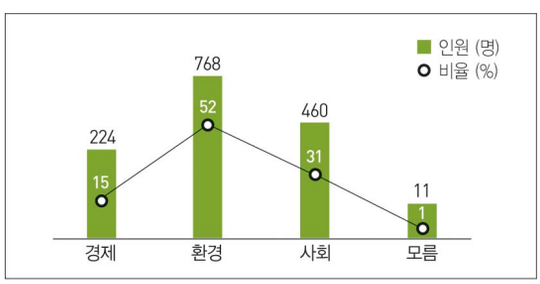


산업자원부 정책성과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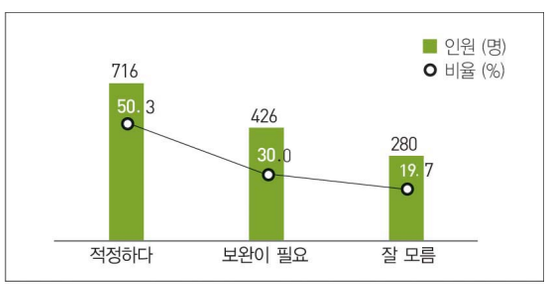
◈ 산업자원부가 가장 관심 가져야 할 정책성과



◈ 산업자원부가 두번째로 관심 가져야 할 정책성과



◈ 내부성과 3대 지표의 적정성 여부



※ 예시된 지표는 다음 문항의 항목과 같습니다.

◈ 이해관계자가 중시하는 주요 내부 성과 지표(복수 응답 가능)

	내부 성과 지표	인 원(명)	비 율(%)
경 제	경제적 성과(예산 및 배분)	991	24.5
	공공구매조달(녹색구매량 포함)	126	3.1
	혁신활동	500	12.4
환 경	원료(재활용지 사용량 등)	168	4.2
	에너지(재생에너지 사용량 등)	719	17.8
	수자원(용수 사용량)	73	1.8
	배기가스(온실가스), 폐수, 폐기물	368	9.1
사 회	노사관계	210	5.2
	단체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24	0.6
	윤리경영, 뇌물 및 부패	461	11.4
	제품과 서비스 라벨링(고객 만족도평가 결과)	209	5.2
	관련 법규 준수 현황	199	4.9

◈ 이해관계자가 특히 관심을 갖고 있는 정책항목(복수 응답 가능)

구분	정 책 명	구분	정 책 명
7%	부품•소재 경쟁력 강화 / 534 명	2%	해외 플랜트 수주지원 / 121 명 맞춤형 해외마케팅 지원 / 43 명 선진국형 무역구제체제 구축 / 154 명 주력 산업의 수출규모 확대 및 고부가가치화 / 195 명 지식기반 비즈니스 서비스 육성 / 175 명 디지털기술융합을 통한 신산업 혁명기반 구축 / 159 명 산업의 유비쿼터스화 확산기반 구축 / 119 명 개발기술의 이전•사업화 / 184 명 자원순환형 경제사회 구축 / 136 명 고령화•웰빙 친화산업 육성 / 190 명 영세 중소기업체의 생산기반 확충 및 마케팅 지원 / 177 명 전략산업 지원을 통한 지역성장 잠재력 강화 / 178 명
6%	국가표준•인증제도의 통합・정비 / 493 명		
5%	신재생에너지 개발 보급 / 386 명 차세대 성장동력 조기산업화 / 411 명 미래지향적 에너지 시스템 구축 / 402 명 산업인력 양성 / 368 명		
4%	R&B산업 기반확충 / 338 명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 352 명		
3%	해외진출기업의 글로벌 경영 지원 / 223 명 남북 상생의 산업•자원 협력 기반 구축 / 199 명 산업단지 클러스터화 / 211 명 성과지향적 R&D추진 및 사업화 활성화 / 266 명 국제환경규제 대응 산업계 경쟁력 강화 / 222 명 해외자원개발 투자촉진 / 247 명 기후변화협약 대응체제 강화 / 259 명 에너지 소비구조 선진화 / 252 명 일자리확보 지원 / 246 명	1%	네트워크형 외국인투자의 전략적 유치 / 88 명 확보 매장량의 지속 확대 / 75 명 주력 산업 환경경제 효율성 제고 기반 구축 / 97 명 수소경제 마스터플랜 세부이행사업 추진 / 93 명 지역투자확대 기반 구축 / 108 명 에너지복지 확충 / 118 명

◈ 보완이 되어야 할 지표(주관식 답변: 261명 의견 제시)

그 룹	주요 지표(이슈) 및 의견	
	정책 성과 관련	내부 성과 관련
국 민	• 연료전지, 수소에너지 • 노령인구사회참여 • 안전관련정책 일관성 • 공기업 효율성, 민영화 • 유가상승 대응책 • 일자리 창출 • 지적재산권 확보	• 친환경적 원료 사용 • 제도적 부패 방지 • 청렴도(부패지수) • 타 부처 확산 노력 • 예산낭비, 적절한 투자 • 인력운영효율성 • 노사상생
국 회	• 목표지수 설정이 가능한 항목은 지수관리 필요	
기 업	• 신재생에너지 개발 • 국내제조업공동화 • 준법정신 강한 사회구축 • 학력인플레/산업인력부족 • 남북상생 중장기 실천 • 고용창출 • 전문기술인력 양성 • 산업전반 수급균형 고려 • 신규제품환경규제관련 • 상생협력성과 • 국가에너지원가절감성과 • 기존 기간산업 지속성장 • 해외 자원 확보 • 외산원자재 적정가격형성 • 이공계 활성화 대책 • 학력차별 없는 인재양성 • 전력증가율 • 중소기업 고용보건훈련 • 중소기업 산업기반조성 • 중소기업 고용안정화 • 산업계 환경 정책	• 행정프로세스 간소화 • 신기술사업 공공구매 • 가족친화 경영/고용안정 • 고객만족도(친절/적극성) • 공공조달 구체적 방법 • 부패 뇌물 방지 • 인력 다양성(여성•장애인) • 임직원 만족도 • 산업자원부 조직 효율성 • 예산 배분 합리성 • 예산사후효과파악지표 • 정책실시 후 평가지표 • 사회공헌활동
학계/ 연구계	• 고용의 양과 질 개선 • 규제완화 • 산업구제제도 선진화 • 균형발전 • 기술인력양성 •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 노령 기술자 활용 • 대중소 상생협력 • 산업정책과 고용창출 • 산학연 연구개발 확대 • 지역발전 • 중소기업 생산성 확충 • 청년실업해결 • 고령화 사회 대비책 • 해외 마케팅	• 사회공헌지표 • 성과의 혁신성 • 지역사회 영향 • 고객존중 경영 혁신 • 온실가스저감량 • 윤리의식 고양 • 지속적 훈련, 교육 • 프로세스 표준화 • 예산배분의 효과성, 효율성
언 론		
산업자원부 노조	• 자원이나 수자원에 관한 더욱 다양한 지표 필요	

그 룹	주요 지표(이슈) 및 의견	
	정책 성과 관련	내부 성과 관련
산업자원부 직원	• 표준에대한 국제교류활동 • 미래예측 정책수립 체계화 • 공기업 등 해외진출 지원 • 국제화 지표 • 공공기관 기업인프로구축 • 기후변화협약대비 시스템 • 노사관계 안정 • 무역과 투자유치 성과 • 기술개발과 상업화 실적 • 기업규제개혁 지원 실적 • 미래 자원 개발 • 미래 먹거리 산업육성지원 • 산하기관의 윤리경영 • 상생협력 • 신에너지자원 개발 • 에너지사용량, 탄소배출권 • 중소기업 인재공급 시스템 • 중소기업 지원 정책 • 지방경제 고도화, 고용창출 • 해외 자원 확보량	• 산업자원부고유문화창조활동 • 직원 전문성 제고 방안 • 대국민서비스혁신 • 인사이동 따른 자료이관 • 고충 처리 • 권한의 위임 • 조직의 슬림화 • 훈련결과의 적용 • 윤리경영 구체적 실천내역 • 정책결정의 투명성
산업자원부 산하기관	• 각종 지원 자금의 효과 • 재생에너지 활용 방법 • 귀족노조에 대한 제한 • 상생 협력 방안 • 산업공동화 대응 • 고용기회 확대 • 중소기업 생산기반 확충 • 국가표준정비 및 인증제도 • 규제완화 성과 지수 • 금속자원재활용 지표 • 기업 거버넌스 개선 정책 • 고령화 사회 대비 • 산업 인력 양성 •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방안 • 에너지 절약형 산업구조 • 자원순환형경제사회 • 중소기업활성화 방안 • 세계적 에너지 확보 조달 • 지역균형발전 • 차세대 성장동력 발굴 • 해외에너지자원개발촉진	• 국민, 기업이 궁금한 사항 • 국민 열린포럼 개최 계획 • 보고서 발간 취지, 당위성 • 고객만족도 평가 • 고용 • 직장 보건 및 안전 • 복지 후생 • 훈련 및 교육 • 고충처리 • 지역사회 영향 • 낭비요소 발견, 예산절감 • 각 사업별 혁신 성과 • 업무기준 표준화 •규정정비 • 윤리경영, 뇌물 및 부패 • 직원의 전문성 부족 • 이해관계자 참여 • 혁신 활동 • 서비스 라벨링 • 관련법규준수현황
NGO	• 혁신 남발 지양 자율성 보장	
기 타 (타부처 포함)	• 고용창출 및 유지 • 기업의 윤리 및 상생경영 • 국제관련 항목 추가 • 차세대 산업 개발 • 해외자원개발위한 인재 • R&D투자의 사업화 성과	

독자의견 설문서

2006 산업자원부 지속가능보고서에 관심을 보여주신 독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보고서는 산업자원부의 최초의 지속가능보고서입니다. 본 보고서에 대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은 향후 지속가능보고서의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설문지를 작성하신 후 팩스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신	**발신**(※생략가능)
Fax. 02-2110-5242	이름_
산업자원부 혁신기획팀	직업_

1. 귀하는 다음 중 어느 그룹에 속하십니까?

☐ 국민 ☐ 국회
☐ 기업 ☐ 산업자원부 직원
☐ 언론 ☐ 산업자원부 노조
☐ 산하기관 ☐ 학계・연구계
☐ NGO ☐ 타 정부 부처
☐ 기타( )

2. 귀하의 주요 관심분야는 다음 중 무엇입니까?

☐ 서문 및 장관 메시지
☐ 개요(지속가능성 체제)
☐ 정책
☐ 내부 활동: 경제적 측면
☐ 내부 활동: 환경적 측면
☐ 내부 활동: 사회적 측면

3. 본 보고서에서 미흡했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은 어디입니까?

☐ 서문 및 장관 메시지
☐ 개요(지속가능성 체제)
☐ 정책
☐ 내부 활동: 경제적 측면
☐ 내부 활동: 환경적 측면
☐ 내부 활동: 사회적 측면

4. 본 보고서의 정보가 유용한지에 대한 각 항목의 점수를 매겨 주십시오.(5점 만점)

- 서문 및 장관 메시지 ( )
- 개요(지속가능성 체제) ( )
- 정책 ( )
- 내부 활동: 경제적 측면 ( )
- 내부 활동: 환경적 측면 ( )
- 내부 활동: 사회적 측면 ( )

5. 본 보고서에서 추가적으로 필요로 하는 정보가 있다면 기재해 주십시오.

6. 국내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이슈가 있다면 기재해 주십시오.

7. 기타 의견을 자유롭게 기재해 주십시오.

Ministry of Commerce, Industry and Energy
2006 Sustainability Report

www.mocie.go.kr